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국내 주요 신문 기사집

2003. 5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일 판 기 사

10차 장관급회담 사실상 무산

東亞日報

2003. 4. 7 (월)

파병-北송금특검 반발 추정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7월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0차 장관급회담(7~10일)이 사실상 무산됐다.

통일부는 6일 우리측이 2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장관급회담

개최에 따르는 실무접촉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에선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북측이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이라크전 파병과 대북 비밀 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 등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중앙일보

2003. 4. 7 (월)

남북장관급 평양회담 무산

北, 국제정세 관망후 접촉 의도인 듯

7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북한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는 6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 등을 통해 북한측에 회담 개최에 따른 실무준비 등을 타진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북측이 곧 회담 불발에 따른 입장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남북 경제제도와 해운협력 실무협의회 무산에 이어 장관급 회담까지 미뤄지게 됨에 따라 4월 중으로 잡혀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 등 인도적 사안과 경제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이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물론 당국 차원의 규모있는 식량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이라크전을 비롯한 국제정세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지켜본 뒤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하려는 모양"이라며 "특검 제 공표 같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접근에 대해서도 탐색시간을 좀 더 가지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영중 기자 yilee@joongang.co.kr

한겨레

2003. 4. 7 (월)

남북장관급회담 무산

남쪽 실무접촉 제의 답변없어...이라크 파병 악영향

새 정부 들어 남북 당국간 첫 고위급 회담인 제10차 장관급회담(4월7~10일, 평양)이 무산되면서 노무현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상당기간 정체 내지 소강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6일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했다.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은 북핵 문제 논의 과정에서 남쪽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의 태도로 보건대 5월로 예정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나서 남북대화 재개 시점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한-미연합전시증원 연습 등 한-미 합동연습이 종료된 지난 2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에 따르는 실무접촉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6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 대신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민족공조를 위한 남북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쪽에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대화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쳤다. 그는 이날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10주년 평양시 보고회 연설에서 "남조선에서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반공화국 비방 중상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력의 분

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부위원장은 "온 겨레가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3돌을 계기로 평양 민족통일 대축전을 비롯해 올해에 다채로운 통일행사를 진행할 데 대한 합동회의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대화를 비롯해 남북 교류협력은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정세현 통일부장관도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판계장관회의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해 개성공단 사업 등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이라크전에 따른 우리 당국의 대응조치를 문제삼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2차 회의와 3차 해운협력 실무접촉(3월26~29일)을 연기시켰으며, 31일 예정이던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식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북한의 남북대화 무기 연기는,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불신감을 드러냈던 2001년 3월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와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 직후 남쪽의 비상경제조치를 이유로 남북 대화를 다시 중단했던 상황 등이 중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내일신문

2003. 4. 7 (월)

10차 장관급회담 개최 무산

이라크전쟁 등 영향 “오래 가지 않을 것”

새정부 첫 남북 당국간 고위급 회담인 제10차 장관급회담(4월7~10일·평양)이 무산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2일 오전 판문점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에 따르는 실무접촉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이날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라크 전쟁 등 내외정세가 복잡한 만큼 북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에게 회담수요가 있는 만큼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민족공조를 위한 남북대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남측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현 시점에서 당국간 대화가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연재호 기자 news21@naeil.com

한겨레

2003. 4. 8 (화)

“장관급회담 무산 유감”

정통일, 대화재개 촉구

남북 장관급회담 남쪽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7일 북쪽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날 열릴 예정이던 남북 장관급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통지문에서 “북쪽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4월7일부터 평양에서 개최기로 한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제정세가 어려울수록 남북 간에 대화를 갖고 현안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장관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중앙일보

2003. 4. 11 (금)

“北, 이라크戰에 잔뜩 움츠려 조만간 대화에 다시 나설 것”

정부 고위당국자 밝혀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이라크 전쟁과 지난달 말 실시한 한·미 연합전시지원연습(RSOI) 등이 북한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며 “이 같은 원인들이 해소되면 조만간 10차 남북 장관급회담 같은 당국 대화가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군부가 잔뜩 움츠려 있는데 김용순(金容淳)노동당 비서 등 회담 일꾼들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팔 옷을 입게 되는 여름 이전에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국자는 ‘바그다드 중심가의 후세인 동상 철거를 지켜본 김정일

(金正日) 등 북한 지도부가 어떤 충격을 받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그대로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국자는 “우리의 이라크전 파병 결정을 북한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한·미 공조가 잘 되면 북한과의 이른바 민족 공조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제로섬(zero-sum) 게임방식의 사고를 버리고 병존이 가능한 합리적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 때문에 북측 대남사업 종사자들이 조마조마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를 마치 남측이 남북 대화를 안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다자 해법 움직임에 대해 그는 “최근 중국이 확실하게 북·미 양자대화를 지지하다가 (다자대화와의) 병행 쪽으로 가는 것은 독자 판단이라기보다 북한과의 대화 속에서 감지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북한이 결국 다자 대화를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북한 외무성이 지난 6일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도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아직 핵문제와 관련한 대외 정책의 노선변경이라 보기 어렵지만, 북한이 어떤 각본을 가지고 하는 움직임이라며 짐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영준기자 yilee@joongang.co.kr

“美가 적대정책 포기하면 대화”

北, 다자회담 수용 시사

美 “외교채널 통해 후속조치 취할것”

북한은 12일 미국이 대북(對北)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힐 경우,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는 다자(多者) 회담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관련기사 A3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우리와 미국 간 직접회담이 일러야 한다”면서도 “만일 미국이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할 뜻을 처음으로 시사함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場)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조·미 직접회담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압살정책을 포기할 정치적 의지를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미국이 성근하게(성신하게) 대화에 나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우리 주변 나라들이 다 함께 참가하는 다목적(多務的) 틀기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 나라들의 대조선 정책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그들의 입장은 대체로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필립 리커(Reeker) 대변인은 12일 “북한의 성명을 관심있게 지켜왔다”면서 “적

절한 외교채널을 통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의 “우

리는 북한의 성명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 압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기존의 입장을 바꾸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13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미·북 간 양자회담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국의 다자회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

朝鮮日報

2003. 4. 14 (월)

東亞日報

2003. 4. 14 (월)

“美 적대정책 포기뎀 어떤 대화도 가능”

北, 다자회담 수용 시사

美 “北성명 관심... 외교채널 통해 대응”

북한은 12일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미 대화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다. ▶A3면에 관련기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 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만일 미국이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조선(북한)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그동안 북-미 양자 대화만을 강조해오던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처음으로 시사한 것으로 북한이 한 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권고해 온 다자대화의 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북-미간) 직접회담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압살정책을 포기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문제 해결

의 열쇠는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 체약국이 아닌 만큼 핵문제를 국제화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또 국제화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을 긍정적인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을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성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적절한 외교 채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북-미 '다자속 양자' 대화 접근

북 "핵논의 형식 구애받지 않을것"...미, 기대표명

북한이 12일 다자회담을 받아들일 뜻을 내비친 데 이어, 미국도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속의 양자' 합의 가능성이 급진전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조선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날 관영 <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데 달려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지난 10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방식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 양쪽에 만족스런 해답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북한이 '다자회담 속의 양자대화' 방식을 받아들여줬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변인은 답변의 앞부분에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직접회담이 열려야 한다"며 북-미 직접회담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어 "미국은 우리 주변

나라들이 다 함께 참가하는 '다목적 톨게리'(다자회담)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 나라들의 대조선 정책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그들의 입장은 대체로 명백하다"고 지적한 뒤, 미국의 정책 전환을 전제로 대화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3일 "다자대화의 형식으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주변 나라들이 참여하는 '2+4' 방식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자회담 형식으로 미국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등이 참여하는 'p5+5'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근 들어

남북한 및 미·중·일·러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 또는 '2+4'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각) "북한의 성명을 흥미롭게 주목한다"며 "적절한 외교채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은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곧 북-미 간에 적절한 형식의 접촉이 이뤄질 것이며, 한-미-일 사이에도 4~5월께 구체적인 절충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미국한 특파원,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한국일보

北, 다자회담 수용 시사

"美서 적대정책 포기땀"... 美도 긍정 반응

북한 외무성은 12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지와의 회견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직접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성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적절한 외교 채널을 통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A3면

대변인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데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성근(성실)하게 대화에 나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교도(共同)통신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성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적절한 외교 채널을 통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도 이날

중국 방문을 마친 뒤 "여러 가지 국제조건이나 그 동안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측면 등을 볼 때 그런 전망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해 대화제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다자회담의 효용성을 설명해왔다"면서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전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이동준기자 djlee@hk.co.kr

北核 평화적 해결 실마리 찾나

북한, 다자대화 수용 시사

북한 핵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북·미 양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고수해온 북한이 다자 대화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이런 반응은 한·중 양국이 다자 대화 해결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미국도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다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0월 새 핵 개발 계획이 밝혀진 이래 상황이 악화돼온 북핵 문제는 일단 관련국들이 해결의 형식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중대 전환점을 맞는 분위기다.

◆중국의 움직임 역할 드러나=북한이 다자 대화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데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한 양면 전략을 구사해 왔다.

올들어 3일 동안 파이프 공사를 이유로 대북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지난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을 때 찬성표를 던진 것은 대북 압박의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체제의 출범과 이라크전 개전을 계기로 적극적인 설득 외교로 돌아섰고, 이것이 북한이 다자 대화를 수용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라크전 개전 이후 중국 고위층이 삼지연의 안가에 머물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다는 얘기가 중국 공산당 부국장급이 평양을 방문한

中 강·온압박 성과... 이라크戰 영향도 北·美간 대화 전제조건 합의가 변수

것은 이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다자 대화에 유연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중국에 대한 배려의 색채가 짙다는 풀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신의주 행정특구 장관 문제로 베껴이던 북·중 관계가 다시 정상화하고 북핵 다자 해결 구도도 확고해질 전망이다.

◆북한 속사정과 정부 외교 노력도 한몫=북한이 다자 대화에 유연하게 나온 데는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선 어떤 식으로든 예봉을 피해야 할 필요

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전에 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 또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 외교 노력도 빼놓기 어렵다. 북·미 양자 대화 우선 원칙에서 다자 대화로 돌아선 것은 관련국이 다자 대화의 접점을 찾는 계기가 됐고,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안(로드맵)은 관련국을 끌어내는 질풍안으로 작용했다.

◆실질적 대화까지는 시간 걸릴 듯=미국은 자신들이 내놓은 다자 대화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북한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화의 분위기는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자 대화 구도는 남북+미·일·중·러의 '2+4'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검토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이 포함된 다자 대화에 대해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때문이다.

문제는 핵심 당사국인 북·미 양측이 대화 원칙이나 의제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냐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을,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 의사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1996년 한·미 양국의 남북·미·중간 4자회담 제의 때 먼저 선명화와 예비회담이 이뤄지고 난 다음 본회의가 1년여 만에 성사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일외교팀

世界日報

2003. 4. 14 (월)

꺾막힌 남북대화 재개 파란불

향후 한반도 전망

북한의 12일 '다자대화' 수용은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형신호'로 해석된다. 전례에 비해 북한이 민족공조를 주장하지 않음 남북대화는 사실상 북미대화와의 연계돼 전개돼 왔다.

북한은 남측의 '비상경제조치'를 이유로 지난 7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10차 장관회담을 비롯해 2차 경제제도 실무협의회와 3차 해운협력실무 접촉, 철도 연결식 등을 무산시켰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한 속사정은 이라크전과 대북성공 특검법 등 악재 속에서 실익이 없

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체제유지와 직결된 핵문제 해결 없이 굳이 '북력 성장장'이 된 남북 대화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한 것 같다.

북한은 이번 다자회담 수용과 동시에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공

금강산 관광대금-식량지원등 南역할 무시못해

北요구 '대조선정책 전환' 美 수용여부가 관건

산이 크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남측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남북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실마리가 풀리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것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대의 금강

산 관광대금과 식량지원 등 북한 경제의 숨통을 트게 해주는 남측의 경제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누차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이라크전과 특검 등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면 미국의 대응 여부를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에 남북대화에 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은 앞으로 다자대화 전제로 내건 미국의 '대조선 정책 전환' 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관계 문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동기자 kidong@seggye.com

北-美-中 23일 北京 회담

북핵 논의 3者대화... 김계관 켈리 王毅 참석

부시 "韓-日 향후 多者회담 참여 희망"



김계관



제임스 켈리



왕이

그는 이어 "미국 정부도 일단 회담이 시작된 뒤 한국의 회담 참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는 한국이 참여한 뒤에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다자대화의 운영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3자회담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우리 정부와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자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원칙 및 회담 참여국 확대 문제 등이 논의되고, 6자회담에서 북핵 해문제가 해결될 경우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북-미-중) 3자 회담으로 시작을 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아부나카 미토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전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도쿄=AFP 연합뉴스

김계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내주 중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회담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A3면에 관련기사

윤 장관은 다자대화 틀에 한국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다자대화 요구와 북한의 양자대화 고집이 맞서자 중국이 일종의 역제외로 내놓은 것이 3자대화의 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3자회담이 시작되면 이후 한국의 참여가 기필코 달성될 것"이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회담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北·中 23일 北京 회담

北核 다자대화... 한국은 빠져

美 켈리·北 리근·中 王毅 참석



제임스 켈리



리근



왕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多者)대화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중국만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고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이 16일 밝혔다. ▶관련기사 A3·4면

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다자대화 요구와 북한의 양자대화 고집 속에 중국이 일종의 역(逆)제외로 내놓은 것이 3자대화

의 틀이었다"며 "우리가 불참한 것은 북한이 핵문제와 체제보장은 미·북 간의 문제라며 한국의 참여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주장하던 노무현(盧武鉉) 정부와 우리나라의 체면은 뭐가 되느냐"며 3자회담 수용에 관한 정부의 결정을 질타했다.

베이징 3자회담에는 미국에서 제

임스 켈리 차관보, 북한에서는 리근(李根) 외무성 국장, 중국에서는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한다. 한편, 중국은 지난 3월 8일부터 첸치천(錢其琛) 부총리를 극비리에 북한에 보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대화에 나오도록 직접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
/권대烈기자 dykwon@chosun.com

北-美-中 23일 北京회담

北核논의 다자대화... 한국배제 논란

3國대표 김계관-켈리-王毅 참석할듯
尹외교 “한국 주도적역할 포기 안할것”



◇김계관



◇제임스 켈리



◇王毅

북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 미국 중국의 3자회담이 23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3국 대표로는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북한은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 중국은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10면)
운영관(尹承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국회 통일통위에 출석, “북핵관련 다자간 협의가 북한과 미국 중국의 3자간 협의로 시작될 것”이라며 “지난달 미국 방문 때

파월 장관으로부터 3자회담 제의를 들었으며 시간을 더 끌면 위기로 치달을 것 같아 회담에 합의해줬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미국은 다자대화를 원했고, 북한은 양자대화를 원했는데 중간에 중국이 개입, 다자대화 형식이 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3자회담에서 다자대화의 운영방안과 의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3자회담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우리 정부와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6자회

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자간 협의가 북-미-중 3자간 협의로만 이루어질 경우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와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못하며 우리가 참여한 가운데 결정돼야 그 결정에 따른 과제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장소에서 논의된 부담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한국의 참여를 강조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6자 협의를 주장했지만 북한과 미국이 조기에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으며, 미국 정부도 한-미-일 3국의 연대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3자 협의로 굳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와 15분간 전화 회담을 갖고 “일본과 한국도 (다자회담에) 참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고이즈미 총리는 3자

회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일본 관리가 전했다. 베이징 3자 회담에 앞서 한 미 일 3국이 18일 워싱턴에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전했다.

/워싱턴=국기연특파원,
도쿄=전현일특파원, 조정진기자
kuk@segye.com

북·미·중 내주 '3者회담'

23~25일 베이징서...韓國배제 논란

尹외교 "美서 제의...북핵위기 해소위해 수용" 한·미·일 내일 워싱턴서 국장급협의 의견 조율

북한, 미국, 중국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핵문제를 협의할 다자회담을 갖는다. 북한과 미국은 금명간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담에서 배제돼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5면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통위에서 3자회담 개최사실을 확인한 뒤 "예비회담 성격이 짙지

만 상황에 따라 핵포기 대가 등 본질적인 문제로 거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지난달 미국 방문때 파월 국무장관으로부터 3자회담 제의를 들었으며 시간을 더 끌면 위기로 치달을 것 같아 회담 성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미국은 다자대화를 원했고 북한은 양자회담을 원했는데 중간에 중국이 개입, 다자대화 형식이 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나중일(羅鍾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정부가 배제된 것과 관련, "형식보다는 실체가 중요하며 지금 논의되는 것은 다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준비 회담"이라며 "북한과 미국의 체면을 살리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맡게 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요마우리(譚寶)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6자 협의를 주장해 왔으나 북한과 미국이 조기에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미국 정부도 교섭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연대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3개국 협의를 실현되게 됐다고

이날 워싱턴발로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같은 3자회담 계획을 승인했다며 미국이 회담 진행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을 참석시킬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18일 미 워싱턴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는다고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이날 밝혔다. 모테기 부대신은 "이번 협의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미 다자협의를 앞서 한·미·일 3국의 의견 조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도쿄 / 이승철·박용채특파원
·차세희기자 lsc@kyunghyang.com

北美中, 한국 빼고 북핵회담

23일 베이징서... 6자회담 준비 성격 한나라 강력반발 정치쟁점 비화조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미국, 중국 3자회담으로 열린다. 그러나 핵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가 다자대화에서 배제됨에 따라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3자회담에는 미국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참여할 예정이며, 북한과 중국에서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3자회담은 다자대화의 참가국 범위와 의제 등을 정하기 위한 예비회담 성격이며, 종국적인 다자회담 구도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3자회담의 의제는 북핵 문제와 대북 체제보장 및 경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답변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3자회담이 개시되면 한국의 참여가 기필코 달성될 것이며, 주도적 입장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회담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미국은 3자회담 시작 직후 한국의 참여를 본격 논의할 것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는 한국 참여 이후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장소에서 초래된 부담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이수혁 차관보는 3자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 18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고위 실무회담 참석차 17일 출국한다.

그러나 3자회담에 한국이 배제됨으

로써 정부의 북핵 해결 3원칙 중 하나인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이 다자회담 의제와 참가국 결정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부영 행정규,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은 국회 통일통위에서 "우리의 대화 불참은 명분이 없으며, 북한에 끌려다니고 농락당하는 듯한 외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논평을 통해 "미국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조선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주호기자 jhpark@kmbi.co.kr

北·美·中 23일 北京 회담

북핵 3者대화... 韓·日·러는 단계적 합류

美-켈리 北-김계관 참석할듯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미국 중국 등 3자 회담이 23일부터 3일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은 3자 회담에 배제됐으나 회담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자(多者) 회담에 합류하게 될 전망이다.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은 16일 '내주 중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 회담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한국 참여를 반대했기 때문에 3자가 됐으나 미국 중국으로부터 협력 보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 3자 회담이 개최되면 한국의 참여가 기쁘고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 시인 이후 약 4달로 줄어든 북한 핵 문제는 일단 대화를 통한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회담에는 미국측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한측에서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 중국측에서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

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A2·3·4면 우선적 회담 의제는 대화방식과 주체, 진행방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폐기 및 핵화산금지조약(NPT) 복귀, 대북 경제보장 문제 등 쟁점도 큰 틀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그러나 1997-99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미국 중국의 4자 회담 때와는 달리 우리 정부가 초

기 대화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정부의 주도적 역할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관 장관은 "미국은 3자 회담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상황의 심각성과 타이밍을 놓쳐 우리가 반대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감당해야 할 부담요인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장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서 고려되는 부담을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와구치 요리코(河

原子) 일본 외무성 장관도 "기본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며 3자간 대화를 승인할 뜻을 밝혔다.

한·미·일 3국은 18일 워싱턴에서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임시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갖고 3자회담 전력을 사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북미 양국은 지난달 이라크 전쟁 개시 전부터 뉴욕과 베이징 등에서 잇따라 접촉한 끝에 3자 회담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h1@ohk.co.kr 이종준기자 jh1@ohk.co.kr

▶ 한국일보

2003. 4. 17 (목)

한겨레

2003. 4. 17 (목)

북-미-중 23일 북핵 예비회담

베이징서 다자회담 의제 논의...부시 "한·일 포함될 것"

북한 핵문제를 다룰 북한-미국-중국의 3자 예비회담이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관련기사 3면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주 중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회담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북한의 새 핵개발 계획이 불거진 뒤 6개월 동안 악화해온 북핵 문제는 본격적인 대화구도로 들어서게 됐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

쪽에선 강석주 제1부상이나 김계관 부상이, 중국에선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윤영관 장관은 "3자회담이 된 것은 북한이 남한의 참여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한국)에 대한 보장을 미·중 양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참여를 고집하기보다 대화를 우선 시작해 평화로운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장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서 고려되는 부담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교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에서 "3자대화를 시작하게 되지만, 일본과 한국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부나카 미토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전했다.

한·미·일 3국은 베이징 3자회담에 앞서 오는 18일 워싱턴에서 대북 정책조정감독그룹(티코그) 회의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와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아부나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하는 고위급 실무회의를 열어 사전조율을 할 것이라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성 차관이 밝혔다.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 논의되는 것은 다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준비회담"이라며 "형식보다는 실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도 "이번 3자회담을 통해 다자회담의 참가 범위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자회담 구도는 남·북·미·중·일·러의 6자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의제는 북한의 핵포기와 이에 따른 체제 보장 및 대북 경제지원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성사에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천치전 전 중국 부총리가 지난달 8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워싱턴 도쿄/윤국한 오태규 특파원, 정재권 기자 gookhan@hani.co.kr

北, 쌀·비료지원 요청

“남북관계 활성화 기여” 전통문... 정부 긍정 검토

북한이 우리가 제시한 비료와 함께 쌀도 '인도주의 정신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관련기사 3면

북한 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17일 오전 남측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에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통지문을 판문점을 통해 전했다.

장 위원장은 전통문에서 “인도주의 정신에서 귀족으로부터 쌀과 비료 제공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포애와 상부상조 원칙에서 서로 협력해 왔으며 이런 좋은 전례가 계속 장려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북남 관계들 보다 활성화해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힐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육협의회 조찬 강연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탈북자 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면서 남북 관계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농민들도 북한에 쌀을 보내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해 대북 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쌀은 민감

한 품목이어서 그동안 당국간 협상을 통해서만 제공해 왔다”며 “적십자를 통한 민간 지원 문제는 아직 논의해 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북한이 요청했을 경우 비료 20만t을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측은 지난해 적십자를 통해 북한에 비료 20만t을 무상 지원했으나, 쌀은 10년 거치 30년 상환의 차관 형식으로 당국간 협상을 통해 40만t을 제공했다.

농림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이 적정량의 배에 가까운 1190만섬에 이를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쌀 재고 처리를 위해 올해 북한과 농업 분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쌀 300만섬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방기자 fattykim@kmb.co.kr

北, 쌀·비료 지원 요청

정부, 예년수준 40만t·20만t씩 보낼듯

북한은 17일 적십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예년 수준의 쌀·비료 지원 방침을 밝혀,

올해도 쌀 40만 t, 비료 20만 t 정도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 동포애와 상부상조 원칙에서 서로 협력해 왔으며, 이런 좋은 전례가 계속 장

려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북남관계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인도주의 정신에서 귀족으로부터 쌀과 비료 제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구체적인 쌀과 비료의 양이나 지원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고 적십자사는 밝혔다.

/송珉徽기자 mckim@chosun.com

北, 쌀·비료 지원 공식 요청 정부 “장관급회담서 쌀 논의”

비료 20만 t 은 조속 전달

북한이 17일 우리 측에 쌀과 비료의 제공을 공식 요청해 왔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張在彦)중앙위원장은 이날 오전 판문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서영훈(徐英勳)총재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인도주의 정신에서 귀족으로부터 쌀과 비료의 제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비료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예년 수준인 20만 t (수송비 포함 6백60억원) 정도를 파종기에 맞춰 조속히 무상 제공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쌀은 충분한 물량을 줄 수

있는 차관 형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식량 제공은 10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합의한 뒤 경험추진위에서 구체적인 실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쌀 지원이 지난 7일 장관급 회담 무산 이후 중단된 남북 당국 대화 재개와 사실상 연계돼 있음을 시사했다.

이영종·정용수 기자
yilee@joongang.co.kr

東亞日報

2003. 4. 18 (금)

北, 쌀-비료 지원요청

정부, 작년수준 제공 방침

북한적십자회가 17일 오전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대한적십자사가 이날 발표했다.

장재언(張在彦) 북적 위원장은 전화통지문에서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좋은 전례가 계속 장려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북남관계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인도주의 정신에서 귀족으로부터 쌀과 비료

제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쌀과 비료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교육협의회 주최 초청강연회에서 “1999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북측의 (지원) 요구가 없더라도 20만~30만t씩의 비료를 줬었다”고 밝혀 비료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북측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난해 수준(40만t 차관형태로 지원)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국민일보

2003. 4. 18 (금)

“다자회담 물먹이고 쌀 달라니..”

정부, 北 지원요청에 곤혹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회담에서는 남측을 배제시키면서 17일 북한적십자회를 통해 비료와 쌀 지원을 요청해온 것은 그동안 남북한이 동상이몽해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지난 14일 “북한이 요청해오면 비료를 지원해줄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은 비료를 매개로 새 정부 들어 중단됐던 남북간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도였다.

다자회담에서 배제된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우리의 역할을 찾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 복구가 중요하다고 판단, 비료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점을 마련한 뒤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측에 장관급회담 재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비료는 식량증산 목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한다는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받

“北이 남한에 원하는건 경제적인 지원뿐” 응할땐 퍼주기 논란예고

다른 논란이 없는 품목이다.

반면 쌀은 군량미로의 전용 의혹이 제기돼 온 민감한 품목이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지난해부터 쌀을 차관형식을 빌려 ‘교역’의 형태로 북에 보내왔고, 그것도 적십자와 같은 민간차원이 아닌 당국간 협의를 통해서만 지원해왔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북한이 17일 적십자를 통해 비료와 쌀을 요청하면서 인도주의 정신을 거론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쌀까지도 무상으로 보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가 참여를 원했던 북핵 다자회담에서는 남측이 빠져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우리 정부의 체

면을 구겼다.

3자 회담이 시작되는 시점에 북한의 쌀 요청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장관급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측의 경제적인 지원일 뿐이라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속히 복원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한 뒤 남북관계 로드맵을 펼쳐보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야심찬 구상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도 현재의 적십자사 예산으로는 북한에 쌀을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일연구원 조문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의도는 우리 정부와 핵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경제적인 협력이나 물질적인 지원만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여기에 응하면 북한은 더 큰 것을 요구해올 것이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다시 북한에 대한 퍼주기 논란이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방기자 fattykim@kmbi.co.kr

북, 쌀·비료 지원요청

북쪽은 17일 조선적십자회 장애인 위원장 이범의 통지문을 통해 쌀과 비료 지원을 남쪽에 요청해 왔다고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가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장 위원장은 통지문에서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 협력해 왔으며, 이런 좋은 전례가 계속 장려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북남 관계를 보다 활성화해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당면하여 인도주의 정신에서 귀족으로부터 쌀과 비료 제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량과 전달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북쪽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북쪽의 대화 제의로 본다"고 밝혔다. 이후 남북 사이에 접촉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북 경험의지 대화 청신호

■ '북핵'소외론속 남북관계 교역등 계속 확대 전망 정치·군사쪽 시간 필요

'이 부분이 일명이다.' 17일 북쪽 조선적십자회가 보내온 쌀과 비료 지원 요청 통지문을 가리키며 한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손가락은 '북남관계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구절을 짚고 있었다.

3자 회담 성사로 북핵 문제에서

남쪽이 소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특검제와 한-미 합동훈련, 이라크전 등의 여파로 당국간 채널이 끊긴 모양새가 1994년 북-미 협상 때와 비슷하다는 걱정도 나온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적어도 94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무엇보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을 불러온 것과는 달리, 지금은 정부가 남북관계 활성화를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진전된 남북경협과 교류도 북쪽이 쉽사리 남북관계를 끊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은 중단됐지만, 경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경의선 북쪽 5km 구간 중 17일까지 1.5km를 넘게 깔았다"고 말했다. 1~3월 남북 교역액은 지난해보다 45.6% 늘었다.

조명철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지원 요청은 남북관계를 재개하겠다는 신호"라며 "당국간 대화를 하자는 간접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경험 이외 분야의 남북관계다. 한 남북회담 관계자는 "북이 경험 등에서 기회를 봐 당국간 관계까지 재개하겠지만, 정치·군사 분야에선 3자 회담을 중시하며 남쪽에 틈을 안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남북간 신뢰 회복부터 이뤄야 해 문제에서도 남쪽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쌀과 비료 지원이 그 계기"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北 "쌀-비료 더 보내달라"

적십자 전통문 "남북관계 활성화위해 필요"... 丁통일, 지원시사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17일 오전 북한 조선적십자회로부터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적 장재언 위원장은 이 통지문에서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해 왔으며, 이런 좋은 전례가 계속 장려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북남 관계를 보다 활성화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면하여 인도주의 정신에서 귀족으로부터 쌀과 비료 제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측은 구체적인 쌀과 비료의 양은 명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료·식량지원 요청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의 신호탄으로 분석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17일 통일교육협의회 초청강연에서 "통상적으로 북에 비료 30만t을 보내고, 지난해의 경우 차관형식으로 쌀 40만t을 보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메워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지원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1999년 봄에 20만t, 2000년 봄-가을에 30만t, 2001년 봄에 20만t, 지난해 봄-가을에 30만t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했다.

/조정진기자 jjj@segye.com

내외경제

정부 "당국간 회담 갖자" 北에 촉구

정부는 최근 무산된 제10차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18일 북한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제반 현안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북한이 남북대화

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3자 대화가 열리게 됨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수기자/wslee@ned.co.kr

北 “核재처리 마지막 단계”

외무성 “3월초 美등에 중간통보” 밝혀

“美와 양자회담… 中國은 장소만 제공”
국방부선 “재처리시설 가동징후 없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8000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상당 수준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3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3자회담 개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제는 8000여개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3월 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중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밤 “한미 정보기관의 공동 평가에 의하면 북한은 재처리 시설 가동을 위한 준비는 해 왔으나 재처리 시설의 가동 징후는 현재까지 식별된 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폐연료봉 재처리 사

실을 공개한 것은 핵물질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내주에 있을 3자회담에

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3자회담과 관련,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朝美) 간의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다”며 “이 회담에서 중국측

은 장소국으로서의 해당한 역할을 하고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 사이에는 의하게 된다”고 말해, 이번 회담이 3자회담이 아닌, 미·북 양자회담임을 강조했다.

/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朝鮮日報

2003. 4. 19 (토)

경향신문

2003. 4. 19 (토)

北 “폐연료봉 재처리중”

외무성 대변인 “8,000여개 작업 마무리 단계”

회담진행 ‘변수’돌출…韓·美 “근거 없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이제는 8,000여개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 베이징(北京)에서 곧 열리게 된다”며 북·미·중 간의 베이징 3자회담 개최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그러나 “북한이 핵 재처리를 진행시켰다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베이징 3자회담을 앞둔 협상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미·일 등은 그동안 북한측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회담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재처리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북 정책에 큰 과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 회담(베이징회담)에서 중국측은 장소국으로서 해당 역할을 하고,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사이에 논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회담의 성격을 다자회담이라고 보는 미국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향후 회담진행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의도를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라크전쟁은 전쟁을 막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정보기관의 공동평가에 의하면 북한은 재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준비는 해왔으나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현재까지 식별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반기문(潘基文)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미국측에 확인중에 있지만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북한이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미국 고위관리는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어떠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베이징에서 개최예정인 미·북·중 3자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워싱턴 / 이승철특파원·김진호·차세현 기자 lsc@kyunghyang.com

北 “核재처리시설 가동중”

외무성 대변인, 3월초 美등 관련국가에 통보 주장

韓·美 “통보받은 적 없다”

북한이 18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미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북)·미 회담이 베이징에서 곧 열리게 된다.”며 “이 회담에서 중국측은 장소국으로서의 해당한 역할을 하고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하게 된다.”고 베이징 회담이 사실상 북·미간 양자회담임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8000여대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3월 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회담

에서 미국의 의도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핵 재처리 시설 가동은 국제사회가 ‘금지선’으로 여겨온 것으로, 미국과 한국 등은 그동안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가동 움직임을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관련기사 3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유관국에 재처리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핵재처리 작업에 들어갔다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국제사회가 모를 리 없다.”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해 사실이

아니거나 준비단계를 묘사한 발언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북한으로부터 핵 재처리 시설 가동 사실을 통보 받은 바 없다.”면서 “북측 진의 및 재처리 사실 여부는 더 파악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영변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 중인 것이 사실일 경우 핵무기 제조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대한매일

2003. 4. 19 (토)

北 “核재처리시설 가동중”

1면에서

관련 한·미·일 3국은 19일 새벽 워싱턴에서 차관보급 협의를 갖고, 오는 23일 베이징 북·중·미 3자회담과 관련, 한·일의 참여 방안 및 북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대북 체제보장 방안 등 회담 의제들을 사전 조율했다.

서울의 고위 미국 외교관은 “북한이 핵 계획을 신뢰할 수 있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제거한다면 미국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정치·경제적 지원 방안을 포함, 과감한 접근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2003. 4. 19 (토)

北,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마지막 단계”

8000여개... 외무성 3월초 미국에 통보 주장 “3자회담은 북·미회담”-核본질 논의 강조

북한은 18일 베이징 북·미·중 3자 회담을 공식발표하면서 이를 북·미간 양자회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8000여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3월 초 이를 미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 베이징에서 곧 열리게 된다”며 “이 회담에서 중국측은 장소국으로서의 해당한 역할을 하고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

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8000여개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3월 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라크 전쟁은 전쟁을 막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하

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에 착수했다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베이징 3자회담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국제 사회가) 금방 알게 되는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 내용은 얘기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3월 초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에 중간통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미국에 통보를 해줬다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 말하지 않을 리 없다”며 “미국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호 김지방기자

北 “核연료봉 재처리 진행중”

정부 “준비작업 시작한듯”…美 “회담엔 영향없어”

北외무성 “베이징회담은 北-美 양자회담”

북한은 18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북한-미국-중국의 3자회담은 북-미 간의 양자회담이며, 영변 핵시설의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중앙방송 등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베이징 회담과 관련, “이 회담에서 중국측은 장소국으로서의 해당한 역할을 하게 되며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 문제들은 조-미(북-미) 쌍방 사이에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A3면에 관련기사
외무성 대변인은 또, “이라크전쟁은 전쟁을 막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선 오직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이미 선포한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부터 핵활동을 재개한 데 따라, 그리고 3월 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간통보 해준 바대로 이제는 8000여개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이 실제로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선 지난해 12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있었던 영변 핵시설의 폐연료봉을 수조에서 꺼내 이를 재처리한 뒤 무기급 플루토늄

을 추출하는 단계를 밟아야 하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아직까지는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해 왔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재처리 관련 주장은 처음 듣는 얘기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재처리 전의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폐연료봉 재처리에 관한 통보를 받

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FP 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은 미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베이징 회담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베이징 회담과 관련,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의도를 확인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東亞日報

2003. 4. 19 (토)

한국일보

2003. 4. 19 (토)

“폐연료봉 재처리 준비완료”

北 “북·미兩者 베이징서 핵본질문제 논의”

외무성 대변인 밝혀 “은 장소제공 역할”

美 “재처리 조짐 없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8,000여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3월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3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핵 재처리에 돌입했음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내주 예정된 미·중·북 3자회담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비량급 전술로 해석된다.

미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로 직결되는 폐연료봉 재처리에 돌입했다는 아무런 조짐이 없다”면서 “다음 주 베이징 3자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 “조선 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징에서 조(북)·미 회담이 곧 열린다”면서 “이 회담에서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이 회담에서 중국측은 장소국에 해당한 역할을 하고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사이에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회담이 3자 회담이 아니라 북미간 직접 회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대변인은 또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의도를 확인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단계에 돌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회담이 잘 안 풀릴 경우 핵 개발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쳐 협상력을 높이려는 압박 카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3월초 미국 등에 중간 통보했다는 대목과 관련, “미국에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사실을 통보했다면 미국이 회담에 응할 리 없고 우리 정부에 알려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北, 다자회담 주도 '核시위'

■ 재처리시설 가동 주장 안팎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단계” 양자회담 몰아가기 노린듯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8일 밝힌 설명은 다습주 열립 베이징 회담이 다자대화가 아니라 북·미간 양자 대화를 분명히 못박는 동시에, 언제든 핵 대처 상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 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밝힌 것이란 분석이다. '핵 재처리 시설 가동'이란 초강수를 내 보이면서 회담의 '극적 효과'를 기대한 '업박'이란 풀이다.

● 핵 재처리 진짜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8000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 것처럼 언급했다. 사실이라면 핵무기 5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처리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업포싱 카드'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핵재처리 시설을 마지막 단계까지 가동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통해 감지되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재처리를 시작했다면 6개월간 강경대치 상태를 끌어온 미 행정부가 베이징 회담을 주도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미간 정보가 정확히 공유됐다고 한다는 진재에서



영변 핵단지 북한 영변의 핵시설 단지 모습. 18일 북한 외무성이 폐연료봉 8000여개를 재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방사화학실험실과 5Mwe원자로 등이 밀집돼 있다. AP통신

다.

양자회담 주도권이 북한측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라크 전쟁을 조기에 끝낸 미국 군사력에 놀라 다자회담 압력에 끌려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초 이미 핵재처리 시설을 통보한 데 대해 미국이 겁을 먹고 나왔다는 논리를

퍼리는 것이라 설명이다.

● 핵 재처리했을 경우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구상으로도 보면 상당히 진행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반면 윗기에 따라서 재처리 직전 단계까지의 준비 완료할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2일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에 대한 조치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 중위 공급을 중단하자 IAEA 관리 아래 수조속에 보관해온 폐연료봉 8000여개의 봉인을 재기했다.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등 방북한 민간인들을 통해 재처리 상태에 있음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단 북한의 협상 카드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는, 만약 재처리가 사실이라면 대화 분위기로 돌아선 한반도의 분위기는 미 강경과 주장처럼 검색될 수밖에 없다.

● 북·미 양자회담 주장 배경

북·중·미 3자회담 일정을 잡아놓고도 북한이 번덕을 부린까 노신 초사했던 정부는 일단 북한이 회담 사실을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 "대화가 예정대로 열릴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나 다자회담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다자대화협의 본격 참여자로 설명하는 반면, 북한은 중국을 단순 장소 제공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미 양국이 이번 회담을 '3자 회담'이라고 밝힌 사실을 부정하면서 회담의 성격과 의제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측 체면을 고려한 중국 역시 '3자회담'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

김수경기자 crystal@

중앙일보

2003. 4. 19 (토)

北 “核연료봉 재처리 진행중”

외무성 대변인 “베이징회담은 3쪽 아닌 北·美회담”

청와대 “사실이면 중대 문제”-美 “정보 없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이제는 8천여대의 폐(사용후)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3월 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건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라크 전쟁은 전쟁을 막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정치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해 다음주 미·중 양국과의 3자회담에서 성과가 없으면 핵무기 개발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고폭(高爆)실험까지 마친 만큼 핵 재처리를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다량 확보하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사 3, 4면) 북한의 핵연료봉 재처리 발표에 대해 청와대 라종일(羅鍾一)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이 이미 핵연료봉을 재처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그렇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보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통지했다면 미국이 알고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정보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을 앞

두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부당국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재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 발표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 베이징에서 곧 열리게 된다”며 “이 회담에서 중국 측은 장소국으로서의 해당한 역할을 하고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하게 된다”고 말해 베이징 회담이 북·미간 양자회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대화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

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의도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령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 관리는 “미국은 북한이 핵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했다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다음주 베이징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미·북·중 3자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AFP통신이 전했다.

이영중·김민식 기자

yilee@joongang.co.kr

◆ 핵 재처리란=사용후 핵연료봉에서 화학 처리를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해내는 작업이다.

북한은 핵 재처리를 1985년에 착공해 일부로 완공한 영변의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하고 있다. 북한은 화학 처리를 위해 질산, 붕, 화학물

질을 최근 몇년새 구입해 온 것으로 서방 정보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 주장대로 재처리가 완료 단계에 있다면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이미 상당량 확보, 핵무기 제조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 “핵연료봉 재처리중”

외무성 “8천개…3월초 관련국에 통보”

정부 “징후 포착못해”…사실땀 큰 파문

북한이 베이징에서 23일 열리는 북-미-중 3자회담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영변 핵시설의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재처리에 들어갔다고 공식 천명했다. >관련기사 3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대해 ‘조(북)-미 회담’이 베이징에서 곧 열리게 된다면서 ‘이제는 8천여개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지난 3월 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지난 8일 북한이 곧 ‘엄중한 내용의 새 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핵개발을 둘러싼 상황이 한층 긴박해질 것’이라고 말해, 성명 내용이 핵개발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의 핵 재처리 작업이 사실이라면 미국 등 국제사회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금지선(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며, 핵무기 보유 직전단계 내지 사실상의 핵보유 선언으로도 간주될 수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아래 북

한 핵 활동을 예주 주시해 왔다”며 “한-미 정보기관의 공동 평가에 의하면 북한은 재처리 시설 가동을 위한 준비는 해 왔으나 재처리 시설의 가동 징후는 현재까지 식별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선언은 북-미-중 3자회담의 협상카드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또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 베이징에서 곧 열리게 된다”며 처음으로 회담개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담에서 중국 측은 장소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북한이 핵 계획 재개 방침의 일환으로 폐연료봉 재처리에 나섰다”는 시사하는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에프피통신>이 보도했다. 이 관리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3자회담은 애초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시마 하쓰히사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에 착수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편

강태호 손원재 기자, 연합뉴스 kankan1@hani.co.kr

북한,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했나 준비단계인가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한 폐연료봉 재처리를 진행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재처리를 준비만 한 것인가.

“8,000여대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 만으로 재처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은 이번에도 핵 개발 진척상황을 애매하게 밝혀 전략적 모호성을 기했다.

“마지막단계 성과적 진행”
진척상황 애매하게 표현
“시작땀 위성에 바로잡혀”
정부선 준비단계에 비중

의 적외선 탐지기에 포착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아직 이 같은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원자력연구소 강정민 박사는 “1개월여전 북한의 트럭들이 방사화확실험실 쪽으로 빈번하게 움직이고 5㎞원자로서 연기가 발생한 사실은 포착했지만 다른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이어 “재처리 과정에는 크리톤 가스가 분출되는데 이 또한 미 정보 위성이 레이저로 감지할

수 있다”면서 “재처리는 몰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의 재처리 라인을 하루 24시간씩 ‘풀 가동’할 경우, 133일이면 8,000개의 폐연료봉(50톤)을 모두 재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약 넉달만 만에 핵무기 4, 5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22.5~27㎏을 얻을 수 있다.

/이동준기자 djlec@hk.co.kr

北, 또 벼랑끝 빅딜 노리나

‘핵연료봉 재처리’ 의도 뭐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8일 오후 다음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미 3자회담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3자회담을 앞두고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인지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

북한이 3자회담을 북·미간 양자회담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양자 회담을 줄곧 고집했던 북한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양자대화라고 규정, 한국 일본 등의 향후 다자대화 참여를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핵문제와 체제안·전보장 등 본질적인 문제를 미국과 직접 담판을 통해 일관타결을 보겠다는 전략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그동안 북핵 위기의 마지막 레드라인(red line)이라고 경고했던

韓·日참여 배제... 직접 담판 전략 실제 재처리 여부 美도 확인못해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지난 3월 초에 이미 거의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 작업의 심각성은 이집 통해 핵무기 제조의 핵심 물질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미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북한 영변의 재처리 라인을 하루 24시간씩 200일을 켜놓으면 사용후 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하는데 4개월 보급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 경우 북한은 핵무기 4~6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게 돼 사실상 핵 보유 직전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아예 믿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한 당국자는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국제 사회가 금방 알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 내용은 얘기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은 그동안 “북한이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현상을凍결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제조건”이라면서 “만약 북한이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를 하면 북핵 위기 해결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말해왔다. 정부 당국자들은 또 “북한이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진행시킨다는 징후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작업의 마무리뿐 아니라 이를 지난 3월 초 미

국을 비롯한 유관국에 통보까지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가 사실이라면 북·미간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틀밀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 정부가 까맣게 뒹군다는 말이 된다. 이에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3자회담을 앞두고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공표한 이유는 이번 회담을 미국이 시들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라크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놀라 미국이 원했던 다자회담을 수용했다는 주변의 인식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라크전은 전쟁을 막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자신들의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주호 기자

한겨레

2003. 4. 19 (토)

북 ‘핵개발 카드’ 미 압박

■ ‘폐연료봉 재처리’ 발언 파장

“중국은 장소만” 사실상 북-미 회담 주장
미 강경파 자극맨 한반도 먹구름 우려
전문가들 “기술상 불가... 의지 표명인듯”

8천여개 폐연료봉의 재처리 작업까지 ‘다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18일 발언은 촉탄선언이다. 그러나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키 볼 수 있는 미국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이를 위시하며 숨겨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사 북한이 재처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4월 시점에서 8천여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가 ‘다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따라 재처리 작업을 위한 준비가 끝났으며 이에 착수했다는 ‘의지표명’은

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동향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월 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간공보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재처리를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3월에 통보한 것은 ‘우리가 재처리하겠다’는 통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월 말~3월 초까지만 해도 미국측 정보에 따른 보도를 보면 북한이 재처리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나온다. 정보 소식통들은 핵연료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 인근 열공급 보일러시설에 석탄을 운반하는 것이 목격됐고 2월 초에는 보일러에서 연기가 솟아 오르는 것이

목격되는 등 연구소 재가동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 북한이 재처리 착수를 미국 등에 경고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 시기는 중국의 천치진 전 부총리가 3월8일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국방위원장과 만나 미국과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촉구한 시기와 일치한다.

어떤 것이 됐든 이번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오는 23일 열리는 북한-미국-중국의 3자회담에 매우 부정적인 파장을 뿜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회담을 앞두고 사실상의 핵무기 개발 선언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쓴 셈인데, 미국이 이를 함으로 맞받아칠 경우 한반도는 다시 위기의 먹구름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처리 작업’을 뒤늦게 공표한 것은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을 그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라크 침공을 조기에 끝낸 미국의 군사력에 놀라 미국이 원했던 ‘다자회담’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시들러 북한이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끈 직접회담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3자회담의 개최를 공식화 인하는 한편, 이 회담의 성격이 모양은 다자회담이지만 그 내용은 양자회담, 즉 북-미 직접회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변인이 중국은 장소국의 역할만 하고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는 조(북)-미 쌍방 사이에 논의하게 된다고 밝힌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북한의 대화 상대방인 미국 쪽의 대응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미국내 여론이 대북강경론을 부추기는 쪽으로 악화할 경우 대화를 추구해 온 미국 내 비둘기파가 북한과 타협할 여지는 줄어든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각)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지킬할 대가가 없다”고 밝힌 것처럼 미국내에선 북-미 대화에 대한 강경파의 부정적 기류가 만만치 않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에게 과감한 접근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낼 수도 있다고 해석했지만, 상황은 예측불허하다.

정재원 기자 jik@hani.co.kr

北 '협상력 끌어 올리기' 의도

■ 北 "폐연료봉 재처리 준비완료"

北·美 양자대화 형태 강조 베이징회담 기선잡기 포석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18일 회견은 다음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북·중·미 3자회담을 의식한 것이다. 북한은 6개월여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회담을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고, 특히 미국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핵 개발로 직결되는 제재를 강경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또 이번 회담은 미국이 주장하듯 다자회담이 아니라, '조미 쌍방'이 주체라고 주장했다. 3자의 한국인 중국은 '단지 장소 제공자', 즉

북미 담판의 '업저버' 정도로 평가할 만한 셈이다. 이라크전쟁을 조기에 끝낸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놀라 미국이 원했던 다자회담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주장에 굴복해 서둘러 직접회담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북한의 의도는 자명하다. 회담을 눈앞에 두고 미국에 선제공격을 가해 기선을 잡겠다는 것이다. 전전준동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라면서 "과거 북한의 협상방법 등을 감안하면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자'고 밝히며 여차하면 핵 개발을 시도하겠다고 사실상 베틀을 놓았다. 북한은 특히 플루토늄 추출로 직결되는 재처리 진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므로써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잡았다.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이번 회담의 성격에 '핵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로 못박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이번 핵 사태의 발단인 지난해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 시연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있는 듯하다.

'우리는 핵 개발 의도가 없는데 미국이 없는 사실을 조정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는 논리인 셈이다. 여기에는 또 미사일 인권 등 미국이 제기한 카드급 핵 문제로 압축시켰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3자 회담은 2001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농축우라늄 북미간 협상이 단번에 분출되는 장이 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협조 속에는 강경한 회담 의지가 녹아있다"면서 "그러나 북미간 입장차가 격한 만큼 회담의 의제설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한국일보

2003. 4. 19 (토)

경향신문 2003. 4. 19 (토)

회담 앞둔 폭탄발언 또 '파란'

■ 北 "핵 재처리" 3중대화 변수로

협상 전제조건 배치 논란 불가피 북·미대화 못박아 한국참여 난망

북한이 18일 외무성 대변인의 입을 통해 베이징(北京) 3자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발언은 회담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우선 핵재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북한측 발언은 한·미·일 3국이 상정한 회담의 전제조건을 깨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핵재처리에 나설 경우 2~3일 내에 쉽게 탐지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재처리 사실을 유관국에 중간통보했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 이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히려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이 회담을 앞두고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회담진행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또다른 요인은 이번 회담의 성격에 대한 북·미 양국의 뚜렷한 시각차다. 북한은 중국을 '잠소국(개회국)의 역할'로 규정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북·미 쌍방사이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이 회담의 형식을 이처럼 못박은 이유는 지난 16일 한·미 양국이 '3자회담'이라고 밝힌 사실을 부정하면서 회담의 성격과 의제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지난 17일 "북·미 양국이 핵문제 해결에 나선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 베이징 회담이 북·미 양자회담이며 중국은 회담에 직접 당사자가 아님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자아내던 차에 북한측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는 이번 회담이 다자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울 수용한 결과라고 보는 미국의 시각과는 커다란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다자대화의 이름만을 붙인 양자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다자대화"라며 양자대화라 비치는 것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고수해온 중국은 참가국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북한과 미국의 이같은 시각차는 향후 회담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 북한이 회담에서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할 경우 실질적인 논의 진척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그동안 양자대화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체면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같은 주장을 했을 수 있다"며 "실제 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향후 정부의 회담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방국인 중국마저 '잠소국'의 지위로 격하시킨 북한이 한국의 회담 참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차세형기자

csh@kyunghyang.com

한겨레

2003. 4. 19 (토)

■ 북 외무성대변인 발언 전문

조선반도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 회담이 베이징에서 곧 열리게 된다. 이 회담에서 중국측은 잠소국으로서의 해당한 역할을 하고, 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하게 된다. 이번 베이징 회담이 이라크 전쟁이 벌어질 시점에 열리게 되는 것으로 하여 국제적 여론이 분분하다. 이라크 전쟁은 전쟁을 막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물리적 역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이미 선포한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부터 핵 합동을 재개한 데 따라, 그리고 지난 3월 초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간통보를 해준바 대로 이제는 8천 여대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대단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이 크게 구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의도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北, 핵회담 앞두고 美 압박하나

“8000여개 폐연료봉 재처리” 주장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5MW 원자로에서 사용했던 8000여개의 폐(廢)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3월 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재처리 작업에 관한 “중간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폐연료봉 재처리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함으로써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을 의미하므로, 북한 핵문제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폐연료봉 8000여개에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Pu239)’이 25kg 정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3-6개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때문에 작년 10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측에 폐연료봉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을 경고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다. 한 정보당국자는 “미국 등 정보기관이 재처리 시설을 24시간 감시해왔는데, 작업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그동안 재처리 시설 가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왔으나, 실제 작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또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북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아직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선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준비과정을 ‘작업 중’인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 것일 수 있으

재처리 작업에 들어갔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이 미·북·중 3자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일단 ‘협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3자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사전 압박이거나, 협상 중 언제라도 발을 뺄 여지를 마련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무성 대

회담 직전에 스스로 재처리 공개 정부 ‘對美 협상용’에 일단 무게 北 “이라크戰서 자주권 교훈얻어” 핵 보유 향한 수순일 가능성도

며, 재처리 작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서도 마치 통보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 즉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나, 이들 나라가 우리쪽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히 희박한 가정이나, 우리 정부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이다.

아직 재처리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에 들어간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정말

변인이 마지막에 “이라크전은 (우리에게) 전쟁을 막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즉 실제로 핵을 가져야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어떤 경우든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는 미국이 수수방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내주로 예정된 3자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權泰福기자 kkb@chosun.com

남북장관급회담 27일 평양서

北서 제안... 核문제, 쌀 40만 지원 등 논의할 듯

남북 장관급 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다. 장관급 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성(金鏞成) 내각 책임참사는 19일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관계기사 4면)
정부는 이르면 21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수락 회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열린 남북경협제도합의회 등이 무산된 데 따라 중단됐던 남북 당국 간 대화는 한 달 만에 제 궤도를 찾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3월 말 한·미 연합 전시증원연습(RSD)과 남측

의 이라크전 관련 경계태세 강화 논란 등을 이유로 10차 장관급 회담을 미뤘던 북한이 회담에 나섬으로써 북핵 관련 북·미·중 3자 논의와 남북 대화가 병행하는 형태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하고 이를 위한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이라크전 파병과 대북 송금 특검제 실시 등과 관련한 대북 선동에 나섬으로써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사업 추진 일정과 후속 조치의 가닥을 잡는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 당국 대화에 호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 지원할 비료 20만t(수송비 포함 6백60억원)의 북송 작업을 5월 중순께 시작하기로 했다.
또 40만 규모의 국내 재고쌀을 차관 형태(연리 1%·10년 거치 20년 상환)로 제공하되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뒤 검정추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절차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영준기자 yjlee@joongang.co.kr

대한매일

2003. 4. 21 (월)

남북장관급회담 27일 평양서

정부, 北제의 수용... 쌀·비료 조건없이 제공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기로 2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첫 남북간의 고위급 공식회담이 이달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청와대와 통일부·외교부·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장관급회담 수용방

침을 이르면 21일 북한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회담 일자 등은 27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남북간의 공식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북한이 요청한 쌀과 비료는 핵 문제 등에 연계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쌀의 지원 시기와

양은 남북 당국간 협의가 끝난 뒤 결정할 계획이며 쌀을 북한에 보내기 전에 국회 등에서의 논의 건차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북측의 김영성 장관급 회담 단장은 19일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민족공조로 우리 민족끼리 남북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하라고 제의했다. 이도문기자 dawn@

世界日報

2003. 4. 21 (월)

장관급회담 27~29일 평양개최

정부, 北제의 수용키로

북한이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왔다고 통

일부가 19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영성 북측 대표가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민족공조로 우리 민족끼리 남북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제10차 '북남 상급회담'을 열 것을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측에 '남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이 적극 호응해온 것으로 보고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섭기자 stsong@segye.com

남북대화 한달만에 재개될듯

北 “장관급회담 27~29일 개최” 제의...정부 수용방침

정부가 당국 회담을 제의한데 대해 북한은 지난 19일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27~29일 평양에서 갖자고 호응해왔다.

정부는 북측 제의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지난달 이후 중단돼 있던 남북 당국 회담이 한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남북 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 단장은 판문점을 통해 남북 장관급회담과 관련한 전화통지문을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

현(丁世鉉) 통일부장관에게 보냈다.

김단장은 “민족공조로 우리 민족끼리 남북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제10차 북남상급 회담’을 열자”고 밝혔다. 한상일 통일부 공보관은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뒤 북측에 진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급회담으로서 남북간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이라크전 발발 이후 우리 당국의 대응조치와 한반도 주변 기류 등을 문제삼아 남북경협제도심무협의회 2차 회의와 3차 려운협력 실무접촉(3월 26~29일),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식(3월31일), 10차 장관급회담(4월 7~10일)을 무산시켰다.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

“장관급회담 27일 평양서”

北 제의... 정부, 오늘 수락 통지

북한은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19일 제의했다.

★관련기사 A4면

장관급 회담 김령성 북측 단장은 이날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

을 보내 이같이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21일 회담 수락 여부를 북측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이 열릴 경우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후 첫 남북간 고위급 회담이 된다.

한상일(韓相逸)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 북측에 진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7일부터 개최기로 합의했던 장관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으며, 17일 대한적십자사에 쌀과 비료를 조속히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남북 장관급회담 27일 개최

北서 제의 3일간 평양서... 쌀지원등 논의 방침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장관급 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북한이 19일 판문점 전화통지문을 통해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해온데 대해 21일쯤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신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제의는 정부가 18일 북측에 남북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데 대한 화답”이라며 “문화관광부와 재정경제부 등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북

측에 수락여부를 통보할 예정인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담이 열리면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경제협력과 함께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9차 장관급회담에서 이달 7일부터 4일간 평양에서 차기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은 이달 초 아무런 통보없이 회담을 연기시켰다.

김지방기자 fattykim@kmbi.co.kr

대한매일

2003. 4. 21 (월)

정부, 남북대화 조속 재개 촉구

통일부는 1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제반 현안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 북한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북한이 17일 적십자사를 통해 쌀과 비료의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의 성격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돼야 지원문제가 협의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경제

2003. 4. 21 (월)

北, 장관급회담 평양개최 제의

27일부터 ... 핵회담 한국참여 논의될듯

북한은 19일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장관급회담에 참여할 김영성 북측 단장은 이날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전화문지문을 보내 이같이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번 회담이 열릴 경우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한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게 된다.

◆북의 회담 제의 배경=북한이 우리 정부에 장관급회담을 제의해 온 것은 절박한 쌀과 비료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료의 경우 생산량이 절대 부족해 남한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 북한 직접자회는 지난 17일

남북 장관급 회담 일지

회수	시기	장소
1차	2000.7.29~31	서울
2차	" 8.29~9.1	평양
3차	" 9.27~30	계주
4차	" 12.12~16	평양
5차	2001.9.15~18	서울
6차	" 11.9~14	금강산
7차	2002.8.12~14	서울
8차	" 10.19~22	평양
9차	2003.1.20~24	서울
10차	" 4.27~29(예정)	평양

대한직접자사에 쌀과 비료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의 대화 제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이 빠진 것을 오래 두

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한국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월 논의하나=남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한 뒤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북한은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 지난 2월 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측에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남북은 △경의·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 3대 현안 사업을 논의할 전망이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朝鮮日報

2003. 4. 21 (월)

北, 장관급 회담 제의 "26·27일 평양서 열자"

북한이 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평양에서 열자고 제의해왔다고,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18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오는 23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의 중재하에 미국과 북핵 협상을 갖는 것에 대한 한국측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회담을 비슷한 시기에 재개한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측에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金珉徽기자 mckim@chosun.com

한겨레

2003. 4. 21 (월)

북, 27~29일 장관급회담 제의

평양서 개최...정부 "핵문제·쌀지원등 논의"

북측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27~29일 평양에서 열자고 남측에 제의했다고 19일 통일부가 밝혔다. 김영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은 19일 오전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전화문지문을 보내 이렇게 제의했다.

남측은 북측의 이번 제의를 '당국간 회담 조속 재개'를 촉구한 18일 노무현 대변인 논평에 대해 호응해 온 것으로 보고 적극 수용하기로 방

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일 통일부 공보관은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뒤 북측에 전통문을 보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새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협력과 함께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이 열릴 경우,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 된다. 남북 당국간 회담은 지난달 22일 이후 중단됐다. 북측은 당시 이라크전에 따른 남측 정부의 대응 조치를 문제삼아 남북경협제도 실무협의와 해운협력 실무접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10일로 예정됐던 제10차 장관급 회담도 북측이 사전 실무접촉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核’ 美압박 대비 완충구도 설정

■ 北, 남북장관급회담 제의 배경

쌀·비료 얻기위해 ‘南달래기’ 시각도

3자회담 南참여여부싸고 논란 예상

북한이 베이징(北京) 3자 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10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한 것은 핵과 관련한 미국의 압박을 남북대화 카드로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남한, 미국과 모두 대화하겠다”는 ‘통미통남(通美通南)’ 의도를 천명, 남한 당국의 대미 발언권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군사·경제 제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남북대화를 북미 대립구도의 완충제로 활용하려 한다는 뜻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RSOI)이 끝나 북한으로선 더 이상 회담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쌀과 비료 지원이 절실한 참에 남측이 비료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당국간 회담이 개최돼야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3자 회담 배제로 인해 남측 여론이 나빠지고 있으므로 뭔가 남한 정부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3자 회담과 남북회담을 거의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제와 성격, 대화주체의 면에서 두 회담을 구분하고, 결과적으로 남한의 다자 회담 참여를 저지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다시 말해 3자 회담서는 미국을 상대로 핵과 체

제보장 문제를 다루고, 남북대화에선 남한을 상대로 남북 문제를 논의하는 식으로 두 회담의 경계를 구분지어 결과적으로 남측의 3자 회담 진입을 막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회담이 열리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첫 고위급회담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 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급회담이 풍상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다루는 점에 비취 일단 주 의제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현안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과 경협을 병행 추진한다는 게 공식 방침인 만큼 우리측은 다자 회담 참여를 강력히 주장할 게 확실하다. 하지만 북한은 핵 문제가 북미간 현안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관례대로 이번 회담에서 쌀 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료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불철 파종기에 맞춰 조기에 무상 공급하되 쌀은 장관급회담 논의 후 실무협의를 거쳐 장기저리 차관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북한이 대북송금 특검 수사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한국일보

2003. 4. 21 (월)

■ 10차 남북장관급 회담 의제

남측 입장	예상 의제	북측 입장
조기 동시 완공	경의·동해선 연결	경의선 먼저, 동해선 추후
토지공사, 9월 이후 착공식 주장	개성공단사업	착공식 조기 실시
육로관광 조기 정상화	금강산 관광사업	본도로 공사 후 정상화
내달까지 무상지원	비료지원	조기 지원 희망
관계부처 협의 후 차관형식 제공	쌀 지원	조기 지원 희망
주도적 참여 및 평화적 해결	북핵문제 해결	북미간 현안
국내 문제	대북송금 특검수사	정상적 거래, 6·15 정신 위배

채택과 관련한 국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를 거론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대한매일

2003. 4. 21 (월)

盧정부 첫 남북고위급 대화

■ 장관급회담 의미와 의의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남북 고위급국가간 공식 대화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게 돼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 회담개최 배경과 의미

먼저 이번 회담은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 불참, 정세현 통일부장관의 쌀·비료 지원 시사,

한국이 배제한 3자회담 수용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명분 축적 노력에 북한이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북한으로서는 경협과 쌀, 비료 지원 등 남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 대화를 장기간 중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북한이 미국, 남한과 별도의 대화할 동시에 진행되는 통미통남(通美通南) 시도는 매우 드문 경우여서 주목된다.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는 ▲핵 문제는 다자회담에서 ▲그밖의 남북 현안은 남북대화에서 해결해 나간다는 ‘이

금강산관광·쌀지원등 거론 예상

3자회담 무산땀 핵위주 논의할듯

원격 대화구도’가 잡혀갈 수도 있다. 이런 구도가 현재로서는 남측이나 북측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것 같다.

● 의제 및 전망

남북 장관급회담은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 회담이 열리기 전 판문점 연락관의 실무 접촉을 통해 통행로, 회담 장소와 일정, 참가자 등만 사전협의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의제가 융통성이 있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 문제는 상징적인 정도라면 거론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예상했다. 핵 문제를 다룰 다자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남북 모두 이 문제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핵 이외에 남북간 현안은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 사업이 대부분이다. 또 군사적 신뢰 강화도 우리측이 제기할 전망이다. 북한이 최근 요청한 쌀과 비료의 지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북·미·중 베이징 3자회담(23~25일) 직후에 열리는 만큼 3자회담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핵 연료봉 재처리 주장으로 3자회담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경우 남북장관급회담의 중요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도문기자

南 “핵까지” 北 “지원만”

장관급회담 무슨 얘기 오갈까

북한 평양에서 27일부터 열릴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한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새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회담인 만큼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주 의제로 삼아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비료와 쌀 지원 문제를 주 의제로 삼을 공산이 크다.

경의·동해선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3대 현안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인 만큼 3자 회담과 관련된 논의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자회담에 남측이 조속히 참여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의도와 입장=북한이 장관급회담을 전격 제의해온 것은 일단 남측으로부터 비료와 쌀을 지원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북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북이 요청해 오면 비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발언한 지 1주일도 채 안

남, 새정부 첫대좌... 3자회담 등 논의 기대

북, 비료·쌀 절박... '송금'거론 역공 필수도

◇정부 입장=정부는 18일 북측에 남북 대화를 촉구하면서 3자 회담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제반 현안을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고집으로 다자회담에서 배제된 정부로서는 3자 회담 직후에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

비료 식량지원을 계기로 열리는 회담이지만, 일단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핵 문제를 비롯한 군사·안보문제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통상 장관급회담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의제는

돼 2주 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던 장관급회담을 다시 제안해왔다.

북한은 비료와 쌀 등 식량지원 이외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계속 협력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어디까지나 (북)조선과 미국 사이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설령 북핵 문제가 장관급회담의 의제로 다뤄진다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북한이 대북 송금 특검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을 펼 수도 있다. 회담 기간이 애초 합의했던 4일에서 하루 줄어든 점도 북핵 문제의 본격 논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김지방기자 fattykim@kmb.co.kr

비료·쌀 南지원 절실 北核 논의는 힘들듯

• 장관급회담 北제의 배경·전망

북한이 지난 19일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전격 제의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은 사실상 북·미 회담'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직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핵문제와 관계없이 남북간 대화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 의도는=북한이 당국간 대화의 신속한 재개를 희망한 것은 그만큼 남북대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월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와 쌀 등 남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마냥 대화창구를 닫아 놓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카드를 통한 체제보장은 3자회담에서, 실질적인 경제지원은 남북회담에서 추구한다는 병행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이 남쪽에 손을 벌리기 위해서만 회담 재개를 제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쌀·비료 지원이 장관급회담의 전부인 것처럼 전해지는 것은 오히려 국민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다"며 "남북 간에는 그밖에도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등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를 직접 논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측 입장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3자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담 전망은=장관급회담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로 보아 김령성 북측 수석대표는 단 한마디도 북핵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관급회담의 정치적 기능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는 3자대화의 진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재처리' 발언 등의 악재로 3자회담이

결렬되고도 남북채널이 가동된다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북·미 대화

北 대화채널 유지 필요성 南 "북핵입장 전달" 기대

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대화가 제자리 걸음을 했던 1993~94년 당시의 핵위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정부 당국자는 "3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동시에 추진하지는 우리측의 의사에 북한이 화담한 셈"이라며 "두 회담이 서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남북한은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의 비료제공 의사표명(15일)과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쌀·비료 지원 요청(17일), 정부의 당국간 회담 재개 촉구(18일) 등 타구공을 주고 받듯이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왔다.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대화단절기간이 4.8개월이었지만 이번엔 지난 3월26일 남북 경협실무협약이 연기된 지 한달 만에 재개되는 셈으로 대화단절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정부는 부처간, 한·미간 조율을 거쳐 주초에 북한의 회담 제의에 공식적으로 답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h@kyunghyang.com

남여론무마-식량채기기 '2중 포석'

北 장관급회담 제의 배경

23~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예정인 북-미-중 3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19일 10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를 남측에 제의한 것은 3자회담에서 배제된 남측의 여론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민족공조를 강조해 놓고, 정작 중요한 핵문제를 논의하는 회담 자리에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남한의 참여를 거부한 데 따른 남한 국민의 불만을 달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김영수(金英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북한이 장관급회담 개최를 제의하지 않은 채

"핵문제와 남북대화는 별개" 메시지

3자회담이 열렸다면 남한 내 비판 여론이 더 강해졌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무슨 대북지원이냐'는 반발 때문에 북한이 꼭 필요로 하는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는 일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단절을 원치 않는 남한 정부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남쪽 사회에 대북 지원에 관한 '논쟁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핵문제와 남북대화는 별개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번 장관급회담 제의는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남한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허문영(許文寧)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체제유지는 안보위기와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특히 경제를 풀어가려면 남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북한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북한이 핵문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 보장을 받아내는 한편으로 남한을 달래 당면한 경제문제를 풀어가려는 포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중앙일보

2003. 4. 21 (월)

美엔 '강경' 南엔 '온화' 北 이중플레이

핵논의서 빠진 南 달래기

남북장관급회담 제안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미국에는 사용후 핵연료봉을 재처리 중이라고 밝히고 남측에는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북한이 미국에는 '강하게', 남측에는 '부드럽게' 나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우선 핵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다룰 사안이며, 남측은 길 입장이 못 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 남측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끼리'란 정서적 접근을 통해 북핵개발 논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만약 미국과의 회담이 원만치 않을 경우 남측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지난주 통일부 간부회의에서 "북한이 남한을 3자회담에서 배제하자고 고집하면서 '남측과 할 얘기는 따로 있다'고 말했다고 미·중측이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핵문제는 남측과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19일자 장관급 회담 제안 전문문에서 북한은 "민족공조로 우리 민족끼리 북남문제를 풀자"고 강조했다. 민족공조를 내세워 남측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물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북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27일로 잡힌 평양 10차 장관급 회담이 우리 정부의 희망대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시절 북-미대화가 열릴 때면 남북 당국 관계를 얻어볼게 하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진 상대와는 대화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었다. 이에 비해 시종일관 '햇볕정책'을 폈던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북한은 상당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북한에 대한 동정론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북한의 통미봉남이 '통미통남(通美通南)'으로 바뀌는 과정은 남측의 대북 정책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영종기자

yilee@joongang.co.kr

새정부 남북교류 물꼬 트일 듯

10차 남북장관급회담 27일 개최 경추위·실무접촉 일정 확정 전망

연재호 기자 news21@naeil.com

참여정부 첫 남북당국자간 회담인 제10차 장관급회담이 27일 개최돼 한동안 지체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19일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제의해 온 데 대해 오늘(21일) 오전 회담 수락 의사를 표명하는 전통문을 보냈다. 정부는 6일 앞으로 다가온 장관급회담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통문 발송을 늦추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북당사자해결을 북핵해결 3원칙의 하나로 알려진 정부로선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우려를 전달하는 게 (회담에서) 중요할 것 같다"며 "3자회담이 끝난 후 만나게 되니까 회담결과에 따라 (우리측의 핵문제) 언급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핵문제가 얘기되더라도 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전과 다른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 9차 장관급

남 "북핵관련 국제사회 우려 전달" 북 "민족공조로 남북문제 풀어야"

통일부와 재경부, 문화관광부 등 회담 유관부서는 지난 주말 정부측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민족공조라는 '명분'과 식량지원이라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 대화 중단 한 달만에 장관급회담을 제의하고 나온 것은 식량난과 비료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철도연결·개성공단 등의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라는 게 북한전문가와 정부당국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족공조를 주장해 온 북한으로서 3자회담에서 제외된 남한의 여론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도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남

회담 때도 북핵 문제 관련 논의가 있었고 공동보도문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서두에 언급되는 정도였고 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우선 4월중 열기로 예정됐던 제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지난달 31일 하기로 했던 경의·동해선 철도·도로연결식, 북한에 의해 무기연기됐던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2차회의와 3차 해운협력 실무접촉 등이 연이어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장관급회담을 참여 정부 남북교류의 '물꼬'로 표현하는 것도 그 이유다.

한편, 정세현 통일부장관, 김광림 재경부차관, 오지철 문광부차관 등 남측 대표단은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27일 방북할 계획이다.②

내일신문

2003. 4. 21 (월)

매일경제

2003. 4. 21 (월)

남북 장관급회담

27~29일 평양 개최

"3자회담 예정대로 열려"

북한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 단장은 지난 10일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같이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관련기사 5·6면

정부는 이번 북한측 제의를 지난 18일 '당국간 회담 조속 재개'를 촉구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 대해 호응한 것으로 보고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전망에 따라 핵문제 해결구도가 23일 열릴 베이징 3차 회담과 남북채널 등 '두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다자회담도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

기 위해 한국측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북한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지난 주 말 워싱턴 정책협의회에서 베이징 3차 회담에 한국 대표를 파견해 회담 전후에 의견을 조율하고 미국측이 회담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주도권을 잡았다.

도 운영관 외교부 장관과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간에 핫라인을 개설해 협상 과정에서 수시로 연락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주 폐핵연료봉 처리를 시사한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서론 번역으로 인한 소동"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조영목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 총정치국장이 21·23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워싱턴/순천덕특파원·윤상환기자

문화일보

2003. 4. 21 (월)

北核·쌀지원등 논의키로

정부, 27~29일 '장관급회담 北제 의' 수용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제10차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21일 공식 수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장관급 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측 김령성 단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회담 개최 수락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회담은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남북 당국간 고위급 회담으로 '북핵 3자회담' 직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촉구

하는 한편, 새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협력과 함께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이라크 전에 따른 우리 당국의 대응조치를 문제삼아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2차회의와 3차 해운협력실무접촉(3월26~29일), 31일의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식을 무산시킨 데 이어, 지난 7~10일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10차 장관급회담도 무산시킨 바 있다. 김상협기자 jupiter@

장관급회담 27일 개최 확정

정부는 21일 김영성(金靈成)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앞으로 정세현(丁世鉉)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북측 제의에 동의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새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협력 방안 및 쌀 비료 등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1@donga.com

한국일보

'장관급회담' 北제의 수용

제10차 장관급회담이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이날 북측 김령성 단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측의 제의를 수락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회담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회담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쌀·비료의 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10차 남북장관급 회담

27~29일 평양개최 수락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21일 오전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김령성 단장 앞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지난 19일 북측의 평양 장관급회담 제의에 대한 공식 수락의사를 전했다.

27일 남북장관급회담 될 논의하나

南 "핵부터" 北 "식량지원"

정부는 오는 27일 평양에서 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는 북한측 제의에 대해 아무런 수정 없이 수락했다.

한국이 내제된 가운데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북·미·중 3자 회담(23~25일)이 열리는 점을 감안해 남북 당국간 '고위급 대화체널의 복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대화와 대미협상을 분리하는 이중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남북 당국간 대화체널이 있어야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전달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북핵문제를 최대 의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회담 참여없이 강제적인 지원 없다'는 의지를 북한측에 재확인시키고 조속히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핵재처리 파문' 진상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북한은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북·미 간 문제'라는 논리를 내세

북핵 관련 대화 일정

- △캘리포니아국무 차관보, 베이징 합법 (4월 21일)
- △북 조영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중국 방문 (4월 21~23일)
- △베이징 북·미·중 3자 회담 예정 (4월 23~25일)
- △10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예정 (4월 27~29일)

김정일위원장

면담 여부 주목

위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핵문제를 두고 회담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당국간 고위급회담인 점을 고려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 입

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사 여부는 남측 대표단이 평양에 가서 북한측 입장을 타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측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원하는 의제는 쌀과 비료 지원이다. 북한은 지난 17일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번 회담에서 다시 공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쌀과 비료 지원 카드를 절실하게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비료의 경우 범철 파종기에 필요하다는 시급성을 감안해 적십자사 차원에서 조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쌀의 경우에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최종 지원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비료 20만t(수송비 포함 660억원)과 쌀 40만t을 보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의·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현안사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상환기자

核등 민감현안거론 진통예상

■ 남북 장관급회담 전망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베이징 북·미·중 3자 회담 직후에 열린 데다 새 정부의 첫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 재처리 진행' 발표 파문 ▲북핵 3자 회담 한국 배제 ▲대북송금 특검 등의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남북간에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핵 재처리 진행파문 진상 뉘나=정부는 북한의 '핵 재처리 파문' 진상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제는 8,000여대의 폐연료봉들에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신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3월 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공간통보했다"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 문제는 북·미간 문제'라는 기존 원칙을

3자회담 한국 배제

'핵재처리' 쟁점으로

북, 쌀지원등 요구속

특검엔 거부감 보일듯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배제가 민족 공조나=정부는 3자 회담에서 배제돼 국민여론이 악화될 점을 감안, 한국 배제가 '과연 북측이 임버릇처럼 주장해 온 민족 공조나'며 따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측은 또 '회담 참여 없이 경제적인 지원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한편 회담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베이징 회담에서 중국은 단지 장소만 빌려줄 뿐이며 핵 문제는 어디까지나 북·미

간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송금 특검 왜 하나=북측도 이번 회담에서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북측은 대북 송금은 금강산관광·개성공단·철도·선박·전력·통신 등 이른바 7대 강제협력사업권의 대가 등에 대한 '진상적 거래'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특검수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경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비료 등 경제지원 논의=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다시 공식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쌀·비료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의·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현안사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盧 “北에 끌려가지 않겠다”

장관급 회담 등 합리적 관계 강조 정부, 쌀지원은 核연계방안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안보관계 장관 및 청와대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장관급회담과 관련해 “북한에 끌려만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이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며 “앞으로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술과 외교적인 수단보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명은 대북 평화변영정책과 관련, 북한에 대해 지원은 하되 핵 등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합의를 다 하겠다는 의사 표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여론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난 5년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둘 것은 주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간다 해도 이를 감수하면서 북한을 싹트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의 대북 지원은 계속 하되 쌀 지원은 핵 문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평양에서 27일부터 열린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쌀 지원요청할 경우

에도 조건 없이 응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쌀 지원 문제는 베이징 3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의 경과를 봐가며 결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

국자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쌀 지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홍우 남도영기자 hwlee@kmb.co.kr

‘안보장관회의’ 1면서 계속

이 당국자는 “쌀 지원 논의가 장관급회담의 주요 사안으로 비워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며, 장관급회담이 쌀 지원을 위한 회담으로 그려지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장관급회담에서 쌀 지원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전술적 측면을 고려,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평화변영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이산가족, 경협 등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베이징 3자회담에 대해 “3자회담 참여 문제는 명분보다 실질적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면서 “시작은 3자회담으로 했으나 성공적 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다자회담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3. 4. 24 (목)

‘NO 할수있는 盧’... 남북관계 재정립

“北에 끌려가지 않겠다” 발언 의미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임하는 입장의 변모를 시사하는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23일 안보관계 장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북한에 끌려만 가지 않겠다”며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주문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직잡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북 뒷거래 의혹과 퍼주기 논란 등으로 국론분열을 초래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전횡을 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며 남북문제도 국내문제와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접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에 대해서도 ‘노(No)’라고 말해야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인 듯하다.

특히 노 대통령이 ‘자존심’ 문제를 거론한 것

퍼주기 비판 여론 의식... 3자회담 배제도 원인 이산·경협등 현안 신축적 상호주의 택할듯

은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퍼주기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했음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3자 회담에 우리를 배제시킨 것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했다는 판단에 따라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접근 방식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 1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경협 문제 등 우리의 주장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킨다는 적극적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신축적이긴 하나 상호주의 원칙을 일부 존용할 가능성이 크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처치와 당근을 함께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정부가 검토중인 쌀 지원과 북핵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으로서는 쌀 지원이 절실하고, 우리는 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번도 평화를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대가

가 있어야 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대북지원에 있어 인도적인 것과 비인도적인 것을 구분할 방침”이라면서 “비료는 그렇지만, 쌀은 경과를 봐가면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 핵문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번 장관급회담이 쌀 지원을 위한 회담으로 그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쌀 지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물론 정부와 청와대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한 것이긴 하나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가 갈 때쯤이면 결국 우리 대북 경제지원의 부담을 대부분 안지 않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홍우기자 hwlee@kmb.co.kr

북한, 핵무기 보유 첫 시인 부시 “北 공갈게임 회귀”

北 “核증명·수출 여부는 美태도에 달려” 美, 사실 확인작업... 北京 3자회담 종료 尹외교 “사실일땐 한반도평화 중대침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北京)에서 끝난 미·중·북 3자회담과 관련, 24일 오후(한국시각 25일 오전) “북한이 과거의 공갈 게임으로 회귀했다”면서 “우리가 협박 당하지 않겠다는 점을 북한과 세계에 말할 기회”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전세계가 대량살상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원료의 확산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는 나의 주장을 굳혀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3·4·5면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시인했으며, 무기금 플루토늄을 위한 폐(廢)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25일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증명(physical demonstration)’하거나 수출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핵실험 여부를 언급했는지는 명확치 않으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발언 중 사실과 압포를 카터내기 위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북한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으며, 제네바 합의를 복구해서 에너지의 지

속적인 공급과 핵 프로그램 포기를 교환하기를 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의 다오위타이(釣魚台)에서 열린 미국·북한·중국 간의 3자회담

이 북한의 핵보유와 폐기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의 인식 차이를 드러낸 채 25일 종료됐다.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25일 오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와 리근(李根) 북한 외무성 부국장을 각각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출발, 계속 평화적인 대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북·중 3국은 회담 종료일인 이날 오전 다오위타이(釣魚

台)에서 만나 향후 외교채널을 통해 다음 회담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이날 베이징 3자회담을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켈리 차관보와 면담 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여러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상당히 중요한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 /北京=權景福기자 kkb@chosun.com

한국경제

2003. 4. 25 (금)

10차 장관급회담 참석

남북 대표단 확정

오는 27~29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 10차 장관급회담에 참석할 남북 대표단이 24일 확정됐다.

우리측에서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광립 재경부 차관과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 신언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서영교 국장 등이 참석한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측에서는 제9차 서울 장관급회담에서의 마찬가지로 김령성 내각책임참사를 단장으로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조성발 내각 사무국 참사, 김만길 문화성 국장, 김준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北 핵무기보유 첫 시인

켈리, 한국에 통보... 美언론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부시 “北 협박게임 회귀... 당하지 않을것”

北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 내놓았다”

정부 “27일 남북장관회담은 예정대로”

정부는 25일 베이징(北京) 3자회담을 마치고 방한한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로부터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켈리 차관보는 윤영관(尹永寬) 외교총장부장관을 만난 데 이어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와 만찬을 겸한 실무회담을 갖고 3자회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A3·4면에 관련기사
북한이 핵보유를 시인한 것은 처음이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9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 시인이 사실인지 여부는 추가 확인을 거쳐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보 내용과 정부 대응=켈리 차관보는 3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이근(李根) 외무성 부국장이 핵무기 보유 및 폐연료봉 재처리에 관해 발언한 내용을 한국측에 소상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켈리 차관보는 이근 대표가 핵무기 보유 사실을 한국말과 영어로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인에 관해 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시인 발언이 확인됨에 따라 이르면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핵 보유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뒤 미

국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반응=조지 W 부시 대통령은 NBC와의 회견에서 “북한은 과거의 협박게임으로 회귀했다”며 “이는 북한과 세계에 미국이 협박당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린 파월 국무장관도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이미 8000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미 백악관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북한 반응=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베이징 3자회담에서) 조·미

(북·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를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베이징=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이기홍기자 secheba@donga.com

국민일보

2003. 4. 26 (토)

北, 핵보유 시인... 北·美 다시 긴장

베이징회담 조기 종료... 켈리 어제 방한 설명 부시 “북한은 과거 공갈게임으로 회귀” 비난

북한이 베이징의 북·미·중 3자회담에서 미국측에 핵보유 사실을 시인하면서 핵실험이나 수출여부는 미국대도에 달려있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즉각 “북한이 과거의 공갈게임으로 회귀했다”며 “더 이상 협박당하지 않겠다”는 점을 북한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북·미간의 핵갈등 해결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회담을 마친 뒤 25일 방한한 3자회담 미국측 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윤영관 외교부장관을 만나 “북한이 회담에서 핵보유와 핵재처리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윤장관은 켈리 차관보와의 면담 직후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상당히 중요한 침해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여러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으며, 무기급 플루토늄을 위한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으며, 제네바 합의를 복구해서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과 핵프로그램 포기를 교환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25일(한국시간)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전세계가 대량살상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원료

의 확산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베이징 3자회담과 관련,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당사자들인 조(북)·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중국 베이징의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은 북한의 핵보유와 폐기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박주호기자 jhpark@kmbi.co.kr

北 '핵보유' 발언 파문

3者회담 폐막...부시 "北 협박게임 회귀"

北·美·中대표 '평화적 해결'엔 합의 2차회담 일정 확정못해 추후협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한·중국·미국 3자 회담에서 북한이 돌연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3국은 회담 마지막날인 25일 다음번 회담 일정을 추후 외교체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폐막했다.

리근(李根) 북한대표는 지난 23일 첫날 회의에서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워싱턴포스트와 CNN은 전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전세계가 대량살상무기와 그 원료의 확산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

한이 과거의 협박게임으로 회귀했다"고 비난했다. / 관련기사 3·4면

판리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그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방한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후 "정부는 기존의 외교적 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를 철저히 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자회담에서) 나름대로 사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제안이 있었다"면서 "한·미·일 3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타격을 개회한다는 방침 하에 3국의 외교일정을 감안,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켈리 차관보와 리근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회담장인 다오위타이(釣

魚臺)에서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만나 3개국 대표단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리자오싱 부장은 3자회담과 관련, "북·미 양국이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공통분모도 있었다"며 "중국은 계속 북한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긴장 해소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베이징

/ 이승철·홍인표특파원·차세림기자

경향신문

2003. 4. 26 (토)

核보유 시인했어도 南北장관회담 참석

尹외교, 켈리가 전한 내용은 언급안해

"대화로 해결... 상황악화 없게 신중대응"

정부는 25일 북한의 핵 보유 첫 시인에 대해 사실 여부와 함께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신중한 대응' 쪽에 무게를 두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부장관은 이날 베이징 3자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난 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확산 공동선언과 여러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상당히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켈리 차관보가 핵 보유 시인 보도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사실이라면"이라고 말해 켈리 차관보가 보도내용을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외교적 노력 또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켈리 차관보는 이어 이수혁(李秀赫) 차관보와 저녁을 함께하면서 앞

으로 북핵 대책과 대화 진행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고, 26일에는 나종일(羅鍾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켈리는 이날 입국하면서, 그리고 윤 장관을 만나기 전후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았으나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시인에 대해 "첫 협상에서 강하게 나가 미국의 성의있는 자세를 유도하려는 협상전략"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 시인이 사실이라면 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 보유 시인이 사실이라면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10차 장관급 회담은 예정대로 열 것"이라며 "장관급 회담을 취소할 경우 국민들에게 주는 심적 타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 보유가 사

실이려면 심각한 문제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1~2개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이더라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 없었다"며 장기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낮 켈리 차관보가 오기 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북한 핵 보유 시인 보도에 대해 "우선 켈리 차관보 얘기를 들어보자"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정보 부족을 실감하며 답답해하는 분위기였다.

/ 金珉姬기자 mckim@chosun.com

朝鮮日報

2003. 4. 26 (토)

北 “核무기 갖고 있다”

美언론 보도 “재처리도 거의 완료... 핵무기 파기는 못해”

北 “새롭고 대담한 해결책 내놔다” 3자회담 마친 켈리 美대표 서울에

북한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를 시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5일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에서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제시했다고 밝혔고, 정부 당국자도 회담이 “나름대로 진전된 요소도 있다”고 밝혀 회담 결과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시사했다.

CNN방송은 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 대표인 이근 외무성 부국장이 미 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우리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한 뒤 ‘그에 관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관계기사 2, 3, 4, 5, 16면〉

CNN은 또 “북한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안보 문서에 서명한다면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폐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핵무기를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대표가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입증(physical demonstration)’ 할지, ‘이전(transfer)’ 할지는

미국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8천여개의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도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조·미 쌍방의 우려

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내놓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새로운 방도도 내놓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종전의 선(先) 핵포기 주장만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 도착한 켈리 차관보로부터 3자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여러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말했다.

북·미·중 3국은 이날 오전 리자오싱(李肇星)중국 외교부장과 북·미 양국 대표의 별도 면담에 이어 왕이(王毅)외교부 부부장을 잠깐 함께 만난 것을 끝으로 후속 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사흘간의 회담을 마쳤다.

워싱턴·베이징=김종혁·유광중 특파원, 서울=오영환 기자

kimchy@joongang.co.kr

대한매일

2003. 4. 26 (토)

협상 무게중심 核으로

■ 남북장관급회담 전망

북한의 핵 보유 발언설로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의 구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25일 내내 실국장들과 분석 및 대책 회의를 갖고 회담 전략을 점검했다. 정 장관과 김광림 재경부·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 신연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서영교 국장 등 회담 대표들은 26일 대표단 회의를 열어 장관급회담 최종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쌀과 비료 지원 등 남북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 발언설로 회담의 초점을 북한 핵폭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과 비료 지원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기와 양 등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정부는 일단 27일 평양 도착 후 오후

北측과 접촉 의제 재조율

쌀·비료 지원 영향 불가피

4시 고려호텔에서 열리는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북한의 핵 개발에 우려를 표시하고,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폐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 문제는 남북간의 현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공동보도문에 반영할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판문점 연락관 등을 통해 북한측과 접촉을 계속 하면서 회담 의제와 시간 등을 계속 조정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임시 중단하고 다른 남한 인사 및 단체들의 방북도 연기를 요청해와 한때 장관급 회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도은기자 dawn@

北 “핵실험까지 할수있다”

核보유 시인 파문... 3者회담 성과없이 끝나

켈리 訪韓... 尹외교 등과 회담 “美, 北核보유 전제로 정책추진”

북한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중 3자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고, 8,000여개의 사용후 핵 연료봉 재처리를 거의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25일 일제히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리근(李根) 수석대표가 3자 회담 첫날인 23일 미국 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우리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A2·3·4면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을 방문한 켈리 차관보와 협의를 마친 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1,2개 갖고 있다는 상정 하에 북한 핵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3자 회담에서 미국측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사실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북측이 제안한 이상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도 “켈리 차관보로부터 회담 결과를 상세히 들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한반도비핵화선언과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리 대표가 “우리는 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핵무기 보유에

대해) 물리적으로 입증(physical demonstration)할지 그것들을 이전(transfer)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BC 방송 등은 이 같은 언급이 핵무기를 실험하거나 수출 또는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CNN 방송은 “리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안보보장문서에 서명한다면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폐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NBC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과거의 협박 게임으로 회귀했다”며 “북한과 세계에 미국이 협박당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北京) 3자 회담에서 우리는 조선반도 핵 문제의 당사자들인 조-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劉建超) 대변인이 이날 내외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제임스 켈리 대표와 북한의 리근 대표가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주선으로 25일 오전 다오위다이어에서 만나 3시간 외교채널 유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l01@sk.com.kr
베이징=이동준기자 djlee@hk.com.kr

대한매일

2003. 4. 26 (토)

北 “核보유” 美 “협박게임 회귀”

켈리 訪韓... 윤외교 평화해결원칙 재확인

北 “새롭고 대담한 해법 美서 거부해 결렬”

백악관 “예비회담 유용”... 대화유지 시사

1 베이징 오일민·워싱턴 백문일·도교 황성기특파원 서울 김수정기자 1 북·미·중 베이징 3자회담에 참석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서울을 방문, 북한이 핵무기 보유했다는 사실을 밝혔음을 우리 정부에 설명했다.

이날 켈리 차관보를 면담한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중요한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나 “한국 정부는 외교·평화적 해결 방향을 유지할 것이고, 한·미·일 공조를 철저히 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3국 대표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선해 기대했던 수준은 됐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은 곧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미국측에 “새롭고 과감한 해결방도를 제시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이 먼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이날 3자회담 미국측 대표단 소식통을 인용, 북측 수석대표인 이근 외무성 부국장이 23일 첫날 회담 때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이를 파기할 수는 없으며, 수출하거나 양도할지, 혹은 팔리적 시위(핵실험으로 해석)를 할지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다고 전했다. 이근 대표는 북한이 8000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마쳤다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NBC방송에 출연, “북한이 과거의 협박게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에리 블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해야만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예비회담을 가진 것이 유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회담 최종일인 이날 미국측 수석대표인 이근 외무성 부국장을 함께 만나 3시간 외교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밝힌 ‘새롭고 과감한 해결방도’와 관련, “그동안 고수해오던 불가침조약 체결 대신 새로운 체제보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3. 4. 26 (토)

“北, 폐연료봉 재처리완료”

核보유 첫시인 파문... 부시 “협박게임 회귀”

北선 “핵해결 대담한 방안 제의” 베이징회담 성과없이 일정 마쳐 中 “3자간 외교채널은 유지 합의”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 보유를 시인하고 핵실험이나 핵물질 수출문제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과거의 협박게임으로 회귀했다”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우리가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과 세계에 말해 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수년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며 “북한은 베이징 회담에서 많은 말을 했고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분석한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3-4면)

워싱턴 포스트는 25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군사 공격, 해상 봉쇄, 강력한 제재 등을 추진할지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지 위험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자회담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당사자들인 조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내놓았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CNN방송 등 미 언론은 북측 수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부국장이 회담 첫날인 지난 23일 미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8000개 폐연료봉 전체를 재처리했으며 우리가 이를

시험할지, 사용할지 아니면 수출할지는 미국측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CNN은 “리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안보문서에 서명한다면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폐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25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일 외무성이 밝혔다.

한편 베이징 3자회담은 25일 구체적인 성과없이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북미 양국은 ‘핵포기-체제보장’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3자회담 후에도 3자간 외교 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박완규특파원

世界日報

2003. 4. 26 (토)

국민일보

2003. 4. 26 (토)

정부 “남북장관급회담 예정대로”

북한의 핵보유 발언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첫 남북 장관급회담이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린다.

동일부 정세현 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발언이 알려진 25일 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과 회의를 거듭하면서 회담 대책을 논의했다.

동일부 관계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직접 만나 대화를 해야한다”며 “장관급회담에 가서 핵보유 발언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선언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어서 핵문제 거론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북측은 핵관련 논의를 회피하고 쌀지원문제 등만 논의할 것으로 보여 회담이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측대표단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전세기편을 통해 평양으로 직행한다. 김지방기자

북 “핵무기 보유” 새국면 돌입

미, 진의과악 분주...한국 곧 안전보장회의 개최 북·중·미 채널은 유지...북 ‘대담한 해결’ 비쳐

1990년대 초반부터 불거져 나왔던 북한 핵 문제가 북한의 ‘핵 보유’ 시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북핵 문제는 핵 개발 저지라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미 개발한 핵무기 해체’가 핵심 현안이 되는 심각한하고 긴박한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 ▶관련기사 2·3·4·5·6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24일(현지 시각) 미 관리들의 말을 따 북한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미국 중국의 3자 회담에서 핵 보유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 핵실험을 앞두고 있으며 8천여 사용후 핵연료봉의 재처리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일제히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베이징의 3자 회담에서 북한 리근 수석대표가 회담 도중 미국 제임스 켈리 수석대표를 따로 불러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핵무기를 실제로 공개할지 아니면 이전(또는 판매)할지는 당신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엔엔〉도 북한이 핵 보유를 ‘증명’하기 위해 핵실험에 나설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이나 판매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 재처리 완료단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정보관리들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핵 보유 발언에 대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확실히 몇 해 동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고 말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부시 대통령은 24일 〈엔비시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발언을 ‘협박’으로 규

정해 미국의 타협 가능성을 배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다른 서울 발 기사에서 북한의 핵 보유 발언으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군사령동이나 해상봉쇄 혹은 더 강력한 제재 등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면서, 국방부 관리들은 이라크 전쟁에 따른 군사 재배치 과정에서 태평양에 평소보다 많은 항공모함 4척이 있으며,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근에 대한 해·공군력을 늘리기로 결정할 경우 재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엘에이 타임스〉는 북한이 3자 회담 중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할 용의를 비치는 등 타협과 위협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를 보내 왔다면서, 미국 정부 관리들이 그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25일 〈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면서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미국 쪽에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후 그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왕이 외교부 부부장의 중재 아래 북·중·북·미 양자 접촉을 한 뒤 3자 회담 외교 채널 유지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운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에 온 켈리 차관보를 만나 북한의 핵 보유 발언 등 3자 회담 내용을 전해 듣고,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의 북·미 대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윤 장관은 면담 뒤 기자들에게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상당히 중요한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켈리 차관보의 설명을 토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등을 열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켈리 차관보는 26일 오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베이징·워싱턴/외신종합 김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한국경제

“北, 비핵화 공동선언 지켜라”

남측, 평양 남북장관급 회담서 촉구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으로 국제적 과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은 27일 평양에서 제10차 장관급회담 첫날 전체회의를 갖고 핵문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20일까지 계속된다. ▲관련기사 A2면 남측은 정세현 수석대표의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신언상 회담 대변인이 밝혔다. 우리측은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언에서 합의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 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국들과 대화·협력할 것을 북측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집중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측의 김령성 단장은 핵보유 여부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하지 않고 “3자회담에서 우리측이 새롭고 대

담한 제의를 내놓았다”고 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또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제도 연결행사를 6·15공동선언을 전후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남측은 회담 둘째날인 28일 오전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오후에는 양측의 수석 대표들이 만나 쟁점 사항을 집중 조율할 예정이다.

평양=공동 취재단·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經協관련 발언은 안해

평양 南北 장관급회담

남북한은 27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10차 장관급 회담 첫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관계기사 4면>

남측 정세현(丁世鉉·통일부 장관)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丁수석대표는 또 “(북한의 핵 보유가)사실이라면 대단히 엄중한 사건으로 핵시설뿐 아니라 핵무기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회담 대변인인 신연상(申彦祥)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북측 김영성(金鏞成·내각 책임참사)단장은 핵 보유 여부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금단장은 이라크전과 관련한 남측의 비상경계태세 논란, 한·미 합동군사연습, 대북송금 특검 등을 거론하면서 “북남관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는 비정상적 사태”라고 비난했다.

북측은 6·15 공동선언 3주년에 맞춰 ▶민간과 당국이 참여하는 ‘통일대추전’의 개최와 정례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이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북한 중앙방송이 보도했다.

남측은 핵문제에 협의를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기조발언에 남북 교류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측은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속개한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영준 기자 yilee@joongang.co.kr

국민일보

北에 핵포기 강력 요구

남북장관급 회담... 丁통일 “非核化선언 준수” 촉구

철도등 현안 언급없이 유관국과 핵협력 권고 北, ‘대담한 제의’강조 통일추진 정례화 제의

남북한은 27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10차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우리측이 교류협력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핵무기 보유 문제를 집중 거론해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회담은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남북 당국간 고위급 회담으로 북한이 베이징 3차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 사실을 내비친 직후 열려 그 결과가 주목되지만 우리측은 북측 태도와 관계없이 북핵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할 방침이어서 북측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북측에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책임을 다할 것과 유관국들과 대화·협력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연상 회담 대변인이 밝혔다. 우리측은 회의에서 그동안의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졌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임진강 공동수방대책 등 각종 경제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북핵 문제만 집중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측 대표단장인 김영성 내각책임참사는 핵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베이징 회담에서 우리측이 새롭고 대담한 제의를 내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세의 일방적 강권을 배제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며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공조를 되짚어 강조했다.

한편 북한 중앙방송은 ‘장관급회담 개최사실’을 보도하면서 우리측의 핵문제 해결 촉구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북측이 내놓은 6·15선언 3주년을 전후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선로 연결공사, 기념행사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착수, 민간과 당국이 참가하는 통일대추전 정례화 제의만 강조해 보도했다. 우리측 신 대변인은 북측은 비료 및 쌀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며 상부상조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체회의후 별도 접촉을 갖지 않고 고려호텔 안에서 공동 만찬을 가졌고, 기조연설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28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신창호기자 procol@kmib.co.kr

북에 핵 폐기 촉구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 북, 보유 여부 언급안해

남북은 27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10차 장관급 회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당국간 고위급 회담이며, 북쪽이 베이징 3자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직후 열리는 것이다. >관련기사 3편 정세현 남쪽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베이징 3자 회담

에서 북쪽이 핵 보유를 시인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인만큼, 약속한 대로 핵시찰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인상 회담 남쪽 대변인이 밝혔다. 정 수석대표는 또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국들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북쪽에 권고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북쪽 김경성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회담에서 우리 쪽이 새롭고 대범한 제의를 내놓았

다"고만 답했을 뿐, 핵 보유 여부에 대해선 직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쪽은 또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미 합동군사연습, 이라크전과 관련한 남쪽 내 비상경계태세, 대북 송금 특검 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남북 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고 신 대변인이 밝혔다. 북쪽은 이와 함께 "남쪽의 새 정부에서도 6·15 '광복선언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궤도 연결 행사를 6·15 공동선언 3돌을 전후해 실시하고, 이산가족 면회소도 가급적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양쪽 적십자사를 적극 지원하자"고 말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남쪽은 핵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는 핵 문제와 평화변영정책 설명 이외의 각종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첫 전체회의 뒤 고려호텔에서 공동 만찬을 하는 것으로 이날 공식 일정을 마쳤다. 앞서 남쪽 대표단은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 전세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북쪽은 기내에 의사를 운러보내 체온 확인 등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 검역을 실시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미, 북 해상봉쇄 추진”

영 언론 "핵수출 저지 위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다른 불량 국가나 테러조직에 핵 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북한 선박의 운항을 항구적으로 봉쇄하는 해상봉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 일요일판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1963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이 사용한 전술을 본떠 '쿠바형'이란 별칭이 붙은 이 계획이,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중국-미국 3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또는 핵물질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나온 미국 정부의 첫 반응이라고 전했다.

쿠바형 해상봉쇄는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 군함을 활용하게 될 것이며, 북한이 전쟁행위로 간주하는 전면 봉쇄를 피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미국 국방부 고위 자문관의 말을 따서 핵무기를 수출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금지'될 것이며, 미국 정보당국이 핵물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선박은 나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문관은 "이는 쿠바형 봉쇄가 될 것"이라며 "풍상적인 국제선 운항은 막을 필요가 없지만, 북한 선박의 운항은 우리가 파악한 적재화물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연합

“北, 핵 전면폐기를”

南, 비핵화 선언 준수 강력촉구

장관급 회담 첫날... 北, 선박 영해통과 등 제의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27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핵 시설과 핵 무기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A3면
정 대표는 이날 기초발언에서 “최

근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서 북측이 핵 보유를 시인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은 뒤 “사실이려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대단히 엄중한 사건으로 핵 시설뿐 아니라 핵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북측에 대해 핵 문

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국들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군사 분야 신뢰구축이 병행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쌀·비료 지원 및 이산가족 등 다른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측 단장인 김영성 내각책임총리는 기초발언에서 핵 보유 여부에 대해선 직답을 하지 않고 “베

이징 회담에서 우리 측이 새롭고 대범한 제의를 내놓았다”면서 “오늘의 정세현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의 위험을 막는 것보다 더 긴절한(절박한) 과업은 없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데프콘-2 발령 논란, 대북송금 특검 등이 남북 관계에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남측의 새 정부에서도 6·15 공동선언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민족 통일대추진 정례회 ▲6월15일 동·서해 철도·도로 연결식 및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식 진행 ▲남북 민간선박 영해통과 ▲동해어장 남측에 개방 ▲TV 방송과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을 통한 상호 비방 중지 문제 논의 등을 제의했다. 북측은 이날 이례적으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김 단장의 기초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인준천기자dejavu@hk.co.kr

한국일보

2003. 4. 28 (월)

‘核무기 보유’ 해명 요구

평양 남북장관급회담

“있다면 즉각 폐기해야”

정부는 27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첫날 전체회의 기초연설을 통해 “북한이 베이징 북·미·중 3자 회담에서 밝힌 핵무기 보유가 사실일 경우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각종 국제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약속한 대로 핵 시설 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남측 대변인인 신인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전했다.

정 장관은 또 “핵 보유를 시인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나.”고 거듭 확인요청한 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성 북측 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핵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베이징 회담에서 우리측이 새롭고 대담한 제

의를 내놓았다.”고만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최근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라크 진과 관련한 남한 비상경계태세, 대북송금 특검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남한의 새 정부에서도 6·15공동선언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식 및 개성공단 착공식을 6·15공동선언 3주년을 전후해 실시하고, 이산가족 면회소도 가급적 빨리 이뤄지도록 양측 직십자사를 지원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민간과 당국이 참가하는 6·15 ‘통일대추진’ 정례회 ▲남북 민간선박 영해통과 ▲동해어장 남측에 개방 ▲금강산 관광사업협력 ▲TV 방송과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을 통한 상호비방 중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와 현대 아산간 합의사업 이행 문제 등도 이번 회담에서 남측과 협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평양 공동취재단 이도운기자 dawn@3면으로

대한매일

2003. 4. 28 (월)

남측 대표단은 새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설명한 뒤 “앞으로 남북이 상호존중하면서 원칙과 신뢰에 입각,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고 “이런 차원에서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과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이 병행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실장은 “쌀과 비료의 지원 문제는 직접 거론되지 않은 채 남북이 상부상조하자는 말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장관과 김광림 재정부 차관·오지철 문화관광부차관·신인상 통일정책실장·서영교 국장으로 구성된 남측대표단, 회담 지원인력, 취재진 등 43명은 오전 진세기권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탐색없이 '핵'의제 직행

■ 남북 장관급회담 첫날

경험·쌀지원 뒤로 밀려 '사스'여파 공식일정 줄여

27일 오후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 1차 전체회의가 열린 평양 고려호텔 2층 회담장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막을 올린 자리였다. 북한의 '핵 보유 시인' 파문이 한반도 정세를 출렁이게 한 뒤 첫 남북간 만남의 자리이기도 했다.

남쪽은 이날 1차 전체회의의 시작부터 탐색전 없이 '핵'이라는 핵심의제로 바로 치고 들어갔다. 남쪽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북쪽의 '핵 보유'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고, 그의 명백한 해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핵 문제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쌀 지원 등 다른 현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남쪽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아침 서울 출발에 앞서 언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

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핵을 가졌다고 하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회담을 '핵 회담'으로 가져간다는 남쪽의 전략에 따라 남북경협 현안과 쌀 지원 등 북쪽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한 회담 관계자는 "각어도 이틀째 회의까지는 핵 얘기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은 다만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쪽이 핵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돌아설 경우 인도적 지원 등 북쪽의 요구 사항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잡았다. 정 수석대표는 "북쪽이 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등 모든 외부인의 출입 통로를 폐쇄한 상황에서도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을 볼 때 남북대화 지속 의지는 분명하다"며 "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남북한 관계개선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쪽이 남쪽의 뜻대로 호

응해올지는 불확실하다. 김영성 북쪽 단장은 이날 오후 고려호텔에 막 도착한 정세현 남쪽 수석대표와 환담 도중 "4월은 양춘가절"이라며 "이런 계절에 우리가 다시 만나 '민족문제' 해결을 다루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문제는 민족문제 아닌 북-미 문제라고 주장해온 데 비춰볼 때, 회담 전에 미리 남쪽의 '핵 관련 공세'를 막으려 한 의도된 발언으로 읽혔다.

이번 회담이 평소보다 하루 짧은 사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데다 신종 페렴 '사스' 확산 공포 가운데 치러지는 점도 가득이나 '핵'을 둘러싸고 싸늘해진 회담 분위기를 한층 가리얏게 하고 있다. 그간 남북 장관급 회담의 경우 명승지 참관, 공연관람 행사가 한두차례 실시되고 환영만찬 등도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선 단 한번의 야외행사도 없고 환영만찬도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서 양쪽 대표단이 첫날 저녁을 함께 먹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회담 장소도 인민문화공원이 아닌 고려호텔로 감해졌다.

손원제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wonje@hani.co.kr

매일경제

2003. 4. 28 (월)

北에 핵 폐기 촉구

남북장관급회담...부시 "외교해결 계속"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인이 사실일 경우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북한측에 핵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27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10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기초발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 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국들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선언상 회담 대변인이 밝혔다.

▶관련기사 4·5·6·13면

정 대표는 "최근 베이징 3차회담에서 북측이 핵보유를 시인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나"고

물고,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라면서 "약속한 대로 핵시설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영성 북측 단장은 기초발언에서 핵보유 여부에 대해선 직답을 하지 않고 "베이징 3차회담에서 우리측이 새롭게 대담한 제의를 내놓았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부시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결방안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동주·윤상환기자

東亞日報

2003. 4. 28 (월)

“北, 비핵화선언 준수하라”

南, 어제 장관급회담서 요구

정부는 27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91년 체결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를 북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28일 이틀째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A3면에 관련기사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의 기초연설에서 "최근 베이징(北京) 3차회담에서, 북측이 핵 보유를 시인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라며 "약속대로 핵시설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회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북측 단장인 김영성(金

鏞成) 내각 책임참사는 핵 보유에 관한 직접 언급 없이 "베이징회담에서 우리측(북)이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답했으나 '새롭고 대담한 제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아울러 △6·15 공동선언 3주년을 전후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식과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식 문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착공식 문제 △6·15 민족통일대추전 정례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 아산간 합의사업 이행 문제 △금강산 관광사업협력 △(북측) 동해어장의 남측에 대한 개방 △남북 민간선박 영해 통과 등을 이번 회담에서 남측과 협의하길 바란다고 기초연설에서 강조했다.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밤 이례적으로 보도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北에 非核선언 준수 촉구

남북 장관급회담...北 “3자회담서 대범한 제안”

내달 서울 티콕회의서 ‘핵해법’ 조율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7일 시작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핵폐기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3·4·9면

장관급회담 남측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첫날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핵무기 보유’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표는 “(비핵화 공동선언 당시) 약속한 대로 핵시설뿐 아니라 핵무기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상(申彦祥) 회담 대변인은 전했다.

북측 김령성 단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측 촉구에 대해 즉답을 회피한 채 “우리는 베이징 회담에서 새롭고 대범한 제안을 내놓았다”고만 언급했다고 신대변인은 밝혔다. 김단장은 최근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이라크전과 관련한 남한내 비상경계대세, 대북송금 특검 등이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단장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6·15 공동선언 3주년을 전후해 실시하고, 이산가족 면회소도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쌍방 정부가 양측 직선자사를 적극 지원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과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새롭고 대범한 제안’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북측의 ‘대범한 제안’은 핵 포기 대가로 체제보장, 경제제재 해제, 수교 등 북·미 관계 진반의 개선책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외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중 서울에서 미·일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진호·차세현기자

‘非核선언 위배’ 강력항의

丁통일 “北 핵보유 한반도평화 위협”

평양 남북장관급회담

27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막된 가운데, 남측의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는 첫날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고 신인상(申彦祥) 회담 대변인이 밝혔다.

정 수석대표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국들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정 수석대표는 “최근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측이 핵보유를 시인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라며 “약속한 대로 핵시설뿐 아니라 핵무기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측 김령성 단장은 기조연설에서 핵보유 여부에 대해선 직답을 하지 않고 “북경 회담에서 우리측이 새롭고 대범한 제의를 내놓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

해졌다.

북측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한·미 합동군사훈련, 이라크전과 관련한 남한 내 비상경계대세, 대북송금 특검 등이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남한의 새 정부에서도 6·15공동선언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연결 착공식을 6·15공동선언 3주년을 전후해 실시하고, 이산가족 면회소도 가급적 빨리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관련기사 5면)

북측은 비료와 쌀지원과 관련, 첫날 회의에서 직접 거론은 하지 않았으나 이튿날 회담에서 남측의 대북지원요청을 요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남측은 핵문제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서 이날 기조발언에서 합의하고도 이행되지 않은 각종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새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와 원칙들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남북이 상호 존중하면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과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이 병행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송민섭기자

장관급회담 첫날 발표문 서로 신경전

南 “核 거론” 北 “경협 강조”

27일 평양에서 열린 10차 남북 장관급회담 첫날 회의는 남북 대표단이 북핵 폐기를 강도높게 제기하는 등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북측은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역점을 두는 등 긴장감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회의 후 우리측 신인상 대변인이 회의 내용을 북측 위주로 발표하자, 북한 중앙방송이 곧바로 경협 위주로 발표하는 등 남북이 언론 발표를 놓고도 경쟁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28일까지는 핵 문제만 밀어붙일 예정”이라고 전했고, 북측이 관심갖고 있는 경협 등 남북 교류협력 문제는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는 북핵 문제를 충분히 짚지 않고 경협만 협의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남한 내 따카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핵 보유를 시인한 베이징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선언 위반이라며 핵무기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북측 김령성 단장은 핵보유 여부에 대해선 직답하지 않고, “베이징 회담에서 우리측이 새롭고 대법한 제의를 내놓았다”고만 말했다. 북측의 이 자세는 핵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므로 미국과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에서 나온 듯하다.

북측은 “1월 이후 남조선에서도 반(反)공화국 대결 움직임을 노골화했다”며 “미국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여놓고, 이라크전에 편승해 우리에게 반대하는 초경계태세까지 취했으며, 특검이라는 미명하에 대화 상대방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고 이날 밤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우리측 신인상 대변인은 “북측이 이 문제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며 “북측은 특히 국민의 정부 때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손상되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이날 민족통일대촉진 정례회, 금강산 면회소 조기 설립 등과 함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식 ▲개성공단 착공식 ▲남북 민간선박 영해 통과 ▲동해어장 남측에 개방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협 사업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밤 상세히 보도했다. 우리측 신 대변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었다.

우리측은 장관급회담을 북핵 등 남북관계의 최대 현안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로 활용하려는 분위기였고, 북한은 경협사업 등 구체적 문제를 논의하려는 자세가 역력했다고 회

담 관계자들은 전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북측 김령성 단장은 “6·15공동선언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민족의 통일과 번영이라는 종착점까지 마음을 합쳐 잘해나가자”고 했고, 우리측 정세현 대표는 “중간중간

에 자주 돌부리가 튀어올라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해, 북한에 핵보유 발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이 오전 10시7분 아시아항공 전세기 OZ801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오전 11시6분쯤 평

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북측 검역의 사 2명이 비행기에 올라와 ‘사스’ 검역을 위해 남측 대표단 전원의 체온을 체크했다. 북측 김 단장은 “사스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예외 없이 검역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회담에선 사스 방지물 이유로 명승지 참관, 공연관람 등 야외행사 계획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평양·공동취재단 서울=金珉徽기자
mckim@chosun.com

南 “北측 화해 바라는 분위기 역력” 사스 이유로 야외행사 일정 안잡아

朝鮮日報

2003. 4. 28 (월)

서울경제

2003. 4. 28 (월)

‘核보유’ 쟁점... 분위기 냉랭

■ 남북 장관급 회담 첫날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한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장관급 회담은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남북 회담 성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담기간 동안 진통을 예고했다.

◇핵 문제가 핵심 쟁점=남북 장관급 회담 제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핵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새 정부 ‘평화변영정책’의 목표와 원칙들을 설명하고 교류 협력과 군사 분야 신뢰 구

南 “교류협력·군사분야 신뢰구축 병행을” 北,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 6월착공 제의

축이 병행 발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상경계 태세, 대북 송금 특검 등이 남북 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거론했지만 짚고 넘어갔을 뿐 논쟁을 벌이려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쌀·비료 지원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전후해 갖자고 재의했지만, 쌀·비료 지원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도 각종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만을 표명했다. 신인상 회담 대변인은 “북측이

화해협력 분위기의 유지를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며 “구체적 현안 관련 부분은 내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싸늘한 분위기 속 회담 열려=27일 평양에서 개막된 남북장관급 회담은 이전 회담과 비교할 때 ‘가장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으로 남북 당국간에 최악의 냉기류가 형성돼 회담장에서 격론이 불가피한데다 여중격인 명승지 참관, 공연관람 행사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피해 방지를 이유로 전혀 잡히지 않았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평양공동취재단



남북 장관급 회담이 27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렸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에서 둘째)과 북측 대표인 김영성 단장이 악수하고 있다. 평양=조종철 기자

北 “상부상조” 쌀 지원 우회 요구

평양 장관급회담 첫날

‘통일대축전’ 정례화 주장도

27일 평양에서 시작된 10차 장관급 회담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험악한 눈높이 차이로 초반부터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남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회담 모두발언 내내 북측 김영성 단장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 핵 문제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전달했다. 북측은 남측 丁수석대표가 ‘북핵 시인’ 발언의 진위를 따지자 “베이징 회담에서 새롭고 대법한 제의를 했다”는 말로 피해했다. 남측이 핵 문제에 집중한 데 반해 북측은 3월 말 실시한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대북 송금 특검제 도입 등을 비난하며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민간·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대축전’을 개최해 정례화하자는 요구는 “우리 민

족끼리 풍일의 문을 열자”는 이른바 민족공조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또 TV 방송·전방 확산기를 통한 상호비방 행위의 중지와 함께 ▶민간선박의 상대 영해 통과 ▶북측 동해어장의 대남개방 ▶금강산관광사업 협력 등 이미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사안을 들 고나온 것은 핵문제의 예봉을 피해하려는 뜻도 엿보인다.

북측은 대신 ‘상부상조’ 등을 언급해 쌀·비료 지원에 남측이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회담 관계자는 “핵 문제 해법의 윤곽을 잡기 전까지는 경협이나 대북 쌀차관 공여 등은 논의 어렵다”고 말해 북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핵 파장과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열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핵 문제를 공동보도에 맡기지 못해 지난 1월 서울 9차 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전례가 있어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 전망된다.

○...북한은 사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당초 인민문화공정으로 돼있던 회의 장소를 숙소인 고려호텔로 옮기고, 참관(관광) 등 일정도 없애 남측 방문객과의 접촉을 최소화 했다. 이시어나 전세기 OZ-8015편이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마스크에 비닐장갑을 낀 의사 두명이 기내에 올라와 체온을 측정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매일경제

2003. 4. 28 (월)

장관급 회담 첫날부터 격론

核보유 발언 北에 해명 요구

27일 평양에서 시작된 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북한이 핵보유 시인 때문으로 냉기류 속에서 열렸다. 게다가 사스 피해 방지를 이유로 회담장 분위기를 조성할 위함 명승지 참관, 공연관람 행사도 전면 취소돼 회담장 분위기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

南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정면 위배” 北 “철도·도로 빨리 연결하자” 판전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첫 전체회의를 가진 데 이어 공동발언도 남측 대표단만 별도로 가지면서 양측 입장을 탐색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 시인에 대해 입장이 팽팽히 맞서 김정은을 찾지 못했다.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첫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보유 시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대남하 엄중

한 사건”이라고 못박았다. 정 수석대표는 “약속한 대로 핵시행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폐기해야 한다”며 북측을 압박했다.

이에 김영성 북측단장은 핵보유에 대해선 대답을 피한 채 이라크전과 관련한 남한 내 비상경계 태세, 한미합동군사연습, 대북송금특검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신언상 남측 회담대변인은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로 는

장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면서 “북측은 특히 국민의 정부 때부터 이루어져 오는 화해협력 분위기가 손상되지 않고 유지되길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이라 처원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각공식을 6·15공동선언 3주년을 전후해 실시하고, 이산가족 면회소도 가급적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방방 정부가 양측 직접자사를 적극 지원하자고 말했다고 신 대변인이 전했다.

남측은 새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와 원칙들을 설명하고 특히 앞으로는 남북이 상호존중하면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과 군사분야 신뢰구축이 병행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남측은 핵문제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서 이날 기초발언에서

합의하고도 이행되지 않은 각종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신 구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비료와 쌀 지원과 관련해 북측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거론은 하지 않은 채 상부상조하자는 말만 했다고 신 대변인이 소개했다. 남측은 이날 첫 전체회의 후 별도의 접촉을 갖지 않고 고려호텔 내에서 공동찬양을 가진 것으로 첫날 일정을 끝냈다. 만찬에서 양측대표단은 핵보유 발언으로 냉각된 회담장 분위기를 달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지아냈다.

한편 남측대표단 43명이 탑승한 전세기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오전 11시 20분부터 15분 동안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검역을 받았다. 북한의 검역의사 2명이 마스크 착용하고 비닐 장갑을 낀 채 전세기 안으로 들어와 개인별로 체온계를 나눠준 뒤 일일이 체온을 확인했다. 윤상환기자

현안 미룬채 핵포기 촉구

■ 장관급회담 첫날 이모저모

북한의 핵 포기 보유설로 한반도 주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청은 27일 평양에서 제10차 장관급 회담을 시작했다. 핵 파문과 사스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았고, 회담 도중 양측 대표 간 때로는 말이 오가기도 했으나 회담장의 진보적인 분위기는 갈등보다 협력을 모색하는 쪽이었다.

●1차 회의 "성실한 자세로 성과"

남북 대표단은 오후 4시 고려호텔 2층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첫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회담이 20일이나 늦춰져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걱정의 대상이 됐다. "면서 "다뤄야 할 문제의 숫자나 양에 비해 시간이 얼마 안 되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재언했다.

북측 대표인 김영성 내각장사는 "뜻을 모으고 지혜를 합쳐면 잘 될 것"이라면서 "6·15공동선언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민족의 통일과 번영이라는 중장기까지 마음을 합쳐 잘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친리길도 마음만 맞으면 없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가는 길에 돌부리 튀어 올라 어려움이 많은 게 문제"라고 북측의 핵 개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 북측 대표는 고려호텔에 도착한 정 장관 일행을 영접하면서 "다시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새정부 조각에서) 유일해 반갑다."면서 "북남관계 적임자라고 해서 유입된 것이나 여기에는 내 기여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협의를 위해 27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남측 대표단에 북측 방역요원이 기내에서 사스 검진을 위한 체온계를 나눠주고 있다. 평양 시전공동취재단

조크했다. 정 대표는 "단장 선생이 잘 해 줘야 다음번에 또 만나지 않겠느냐."고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요청했다.

●공식만찬 회기에

전체회의를 마친 양측 대표단과 공식수행원들은 고려호텔 3층 별실로 이동, 만찬을 함께했다. 김 북측 대표는 만찬사를 통해 "이번 회담은 남측 새 정권과의 첫 회담이자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이어가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전배를 재언했다. 이에 정 남측 대표는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에 진작의 미있는 분수령이 되기 바란다."고 건배사를 했

다. 만찬에서는 남측 대표단 및 관계자들이 자리를 바뀌거나 술을 권하는 등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43명 전원 사스 검역

남측 대표단 43명이 탑승한 전세기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오전 11시쯤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공항에서 15분 동안 사스 검역을 받았다. 북한의 검역요사 2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닐 장갑을 낀 채 기내로 들어와 개인별로 체온계를 나눠준 뒤 일일이 확인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도모기자 dawn

北核해결-교류확대 병행

■ 남북장관급회담 원칙

북한의 '핵 보유' 발언은 남북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해야 하고,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전면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정부의 기본원칙이다.

●핵 문제 우선 해결

정부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핵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이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전자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7일 평양에서 시작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남측 대표단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 중이다. 첫날 회담에서 대표단은 핵 개발이 마·북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주요 현안도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핵 포기할 거듭 촉구했다. 북한의 핵 개발은 1992년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중대한 위반

이기 때문에 남한도 방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대표단은 첫날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병행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았다. 회담의 초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교류 확대도 병행

북한측은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기존의 남북경협 현안문제를 일일이 언급했다. 우리측 대표단도 이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과 군사분야의 신뢰구축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남북교류 확대가 한반도 주변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정책공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공식대화 봉쇄를 유지하는 것도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강화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이날 평양으로 떠나기 앞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급한 현안인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해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선 핵 해결 후 남북관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도모기자

'핵무기 보유' 해명 요구

▷1면에서

남측 대표단은 새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설명한 뒤 "앞으로 남북이 상호존중하면서 원리와 신뢰에 입각,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재언하고 "이런 차원에서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과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이 병행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실장은 "말과 비효의 자원 문제는 직접 거론되지 않은 채 남북이 상부상조하지는 말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장관과 김광림 재정부 차관·오지철 문화관광부차관·신연상 통일정책실장·서영교 국장으로 구성된 남측대표단, 회담 지원인력, 위 재진 등 43명은 오전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北 핵보유 직담 회피"

■ 신연상 대변인 문답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우리측 대변인인 신연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27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1차 전체회의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한 뒤 일문일답을 기술했다.



◆북측이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시기를 못박았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6·15공동선언 3주년을 전후해 갖자고 북측이 제의했다. 우리는 첫날 회의의 만큼 현안으로 관심 많은 북핵 문제에 중점을 뒀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시기는. —시기는 못박지 않고 가급적 빨리 성사되도록 양방 정부가 적십자사 등을 적극 지원하자고 얘기했다.

◆북핵 보유를 절대 용납 못 한다고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북핵문제가 불거진 후 최근 베이징 3차 회담에서 핵보유를 시인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사실이나, 사실이라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약속대로 핵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의 반응은 어땠나. —핵 보유 여부에 대해 직답을 하지 않으면서, 베이징 3차 회담에서 '대담하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단언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특검 등에 대한 북측의 문제제기 수준은. —북측도 일단 질문과 답이 있는 정도의 취지로 얘기했다. 우리는 북측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설명했고, 어떤 것이 우리 내부 문제이고, 북측이 일일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제 서로 존중할 것은 존중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북측도 6·15공동선언을 잘 이행해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평양 공동취재단 이도모기자

정부, 북한核에 정면으로 '경고'

한국일보

2003. 4. 28 (월)

■ 남북장관급회담 첫날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데 따라 그동안 '핵 개발 저지'라는 예방적 목표에 주력했던 정부의 대북 정책이 궤도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수개월 걸리는 재처리 단계가 아니라, 기폭실험 등을 거쳐 바로 무기로 전환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27일 평양에서 시작된 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정부가 북한의 핵 무기 보유 언급에 대해 정면

결 행사, 통일대축전 정례화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북측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이례적으로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제안을 담은 김형성 단장의 기초발언문을 공개, 핵 문제를 최대한 피하려는 속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핵에 관한 북측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이틀 경합사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교류협력 날짜나 잡는 모임 아니라 장관회담서 남북관계 큰틀 마련을”
정부, 대북정책 기초변화를 시사
北, 교류협력 강조 ‘핵’ 회피 속 뜻 비쳐

으로 경고하는 자리가 됐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첫날 기초발언에서 "(완반도 비핵화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핵 시설 뿐만 아니라 핵 무기도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핵 문제는 북미간 문제라고 선을 그어온 북한을 상대로 정부는 핵 시설의 전면 폐기까지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정부는 28일 회에서도 다시 핵 폐기를 최우선 의제로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 보유 시인은 위기가 한 단계 높아졌고, 문제 해결의 시간도 촉박해졌음을 의미한다"면서 "이제 위기의 현상 동결이 아니라 북한의 핵 무기 폐기가 최소한의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폐기, 미국에 대해 무력사용 자제를 주장해온 우리의 명분이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말해 대북정책의 기초가 재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이번 장관 회담에서 확정할 방침인 쌀 및 비료 지원 문제도 핵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이날 식량지원 뿐만 아니라 북측이 적극 제의한 6월15일 경의·동해선 철도 연

도 배제할 수 없다. "장관급회담을 이제는 교류협력의 날짜나 잡는 모임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략적 큰 틀을 마련하는 장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이 이런 전망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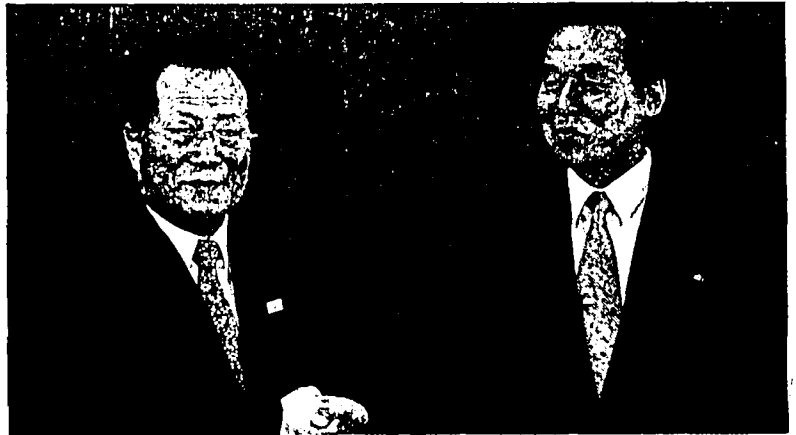
정부는 그러나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화·외교적 해결 방안에 힘을 실어준 데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수일내 3자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측의 종합적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미국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틀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내놓았다는 '대담한 제안'을 면밀하게 평가, 추가적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 상황이 악화됐다면 치더라도 대화를 통해 푸는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제안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검토가 끝나면 다시 다자적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東亞日報

2003. 4. 28 (월)



평양=사민당통화자단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이 27일 회담장인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해 북측 김형성 단장과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고 있다.

北, 사스 공포... “꼭 필요한 행사만”

南北장관급 회담 첫날

27일부터 평양에서 시작된 1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역대 회담에 비해 대폭 줄어든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관급회담 직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보유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회담 분위기가 가라앉은 측면도 있지만,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감염에 대한 공포심도 한몫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관급회담에는 회담과 접촉 이외에도 명승지를 구경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일정이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남측 대표단은 2박3일간 숙소 겸 회담장인 고려호텔에만 머물 예정이다.

사스 확산에 대한 북한의 우려는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중앙TV는 24일 평양시 모란봉 구역에서 사스 의심 환자가 발견됐다고 보도해 북한도 사스 창정지역은 아닌 셈이다. 북한의 언론들은 최근 세계 각국의 사스 피해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죽음의 병으로 불리며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있으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예정대로 열렸다.

1차 전체회의를 마친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7시반부터 고려호텔 3층 별실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에서 북측의 김형성 단장은 "이번 회담은 새 정권의 첫 회

시내관광·공연 관람 등 일정서 제외 南대표단 3일간 숙소에만 머물 예정

피해를 주는 사스를 막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북한은 금강산관광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현대아산측에 통보했는가 하면 다른 남북행사들도 무기한 연기시켰다. 한때 장관급회담도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나

달이자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이어가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회담"이라고 견해를 제의했고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진짜 의미 있는 분수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첫날 회담에선 통상 열리는 개별접촉은 없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南 “핵보유 발언 사실이나”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첫 남북장관급 회담이 27일 평양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2박3일간의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이전과 비교할 때 '가장 바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 때문으로 남북간에 형성된 냉기류가 회담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싸늘한 분위기속 회담시작 - 난항예고
北, 경의·동해선 연결 6·15 전후 제의

◆핵 문제놓고 논란=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의 수석대표인 김경각 책임감사에게 “최근 베이징 3차 회담에서 북측이 핵보유를 시인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나”고 물고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면으로 위해 하는 것으로 더단히 엄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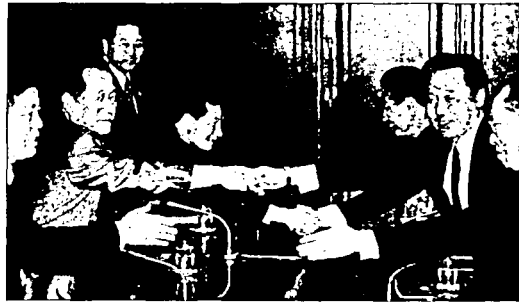
김 대표는 “약속한 대로 핵시설뿐 아니라 핵무기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NSC

ND)’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대신 스한·미 합동군사 훈련 △이라크전쟁과 관련한 남한내 비상경계태세 △대북송금 특검 등이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6·15 공동선언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 경의·동해선 조속연결 주장=북측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화해협력 분위기가 유지되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북측은 이런 차원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궤도 연결협사와 개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경성 내각책임감사(오른쪽 두번째)가 27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성공업지구 착공식을 6·15 공동선언 3주년을 전후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산가족 면회소도 급급적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쌍방 정부가 양측 직접자료를 적극 지원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핵문제와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서 각종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 회담이 새 정부들이 처음 개최되는 고위급 회담인 만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북측에 집중 설명했다. 우리측은 특히 “앞으로는 남북이 원칙과 신뢰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취재단·권순집 기자
ikee@hankyung.com

한국경제

2003. 4. 28 (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미국·중국 간 3자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 미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 방송은 26일 “대북 강경책을 주장해온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의 대과 관료들이 3자회담 후 국무부 등 온건파들 누르고 전면에 나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베이징 3자회담 성과없이 종결

美 ‘매파’ 목소리 커진다

대북 강경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로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사진)이 대표적이다. 그는 3자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강경교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회람시키는 등 국무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강한 반감을 표시해 왔다.

3자회담 미국측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임스 클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신 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튼 국무차관을 보내지고 주장, 클린 파월 국무장관과 심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BBC 방송은 “3자회담 이후 강경파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유혹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것

이고, 그러면 국무부와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무부 온건파들은 3자회담 중 터져나온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과 관련, “공갈 협박은 북한의

로이터 통신

北 핵무기개발 사실
국무부가 숨겨 '논란'

통상적 어법’에 불과하다면서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국방부 강경파들은 이를 계기로 고위관료와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본다.

이 방송은 “국무부 등 온건파들은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라는 당근을 제시, 북한이 핵 아욕을 포기할 목 설득하고 있지만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강경파들을 처리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도 “국무부가 지난 3월말 뉴욕 북·미합성에서 이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통보받았으나 3자회담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해 국방부 및 국가안보회의(NSC)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무기보유 발언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또 다른 침기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영석 기자
yeos@hankyung.com

다른 의제 일절 배제 '핵포기' 일관된 요구

정부, 남북장관급회담 전략

남북장관급회담 우리측 대표단의 전략은 각종 교류협력 현안을 논의한다는 회담 고유의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일관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대화에서 북측이 강경 노선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북시 미 행정 부내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매 파 입지를 강화시켜 결국 북한에도 유리 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핵포기의

회담의 제1 과제로 설정해 북측 대표단을 집요하게 추궁, 진의를 탐색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필요하다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관계자 외의 접촉도 시도할 예정이다. 북한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전향적인 핵포기 의사 친영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위해서다.

몫론 앞으로의 다자회담 구도에도 우리측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참가해야 향후 다자회담이 핵문제뿐 아니라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지인 계획까지 폭넓게 협의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설득 논리다.

아울러 새 정부의 대북 기조인 평화변영정책의 골간도 설명할 계획이다. 햇볕정책을 확대해 남북공동번영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전하자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북측 지도부에 제시하며 호응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반면에 북한은 회담내내 핵문제는 장관급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핵무기 보유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No Confirmation No Deny)로 일관하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그러면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각종 경제협력방안 논의에 집중하면서 쌀과 비료 지원을 우리측에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측이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킨 만큼 쌀 지원문제는 단지 인도적인 측면에서만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호기자 procol@kmb.co.kr

핵 재처리·보유여부 추궁 다자회담 南 참여도 설득

北 '의제밖' 내세워 버티며 쌀·비료 지원 요구할듯

사를 밝히는 게 북한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득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을 계기로 장관급회담의 위상 자체를 사소한 양측간 교류현안이나 점검하는 실무회담이 아닌 양측 사이에 벌어지는 굵직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말 그대로 고위급 접촉채널로 탈바꿈시킨다는 전략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표단은 우선 북한이 베이징 3자 회담에서 언급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의 사실 여부 확인을 이번

핵거론에 싸늘 회담-동문서답 성공기원 덕담 만찬-화기애애

장관급회담 첫날 이모저모

10차 남북장관급회담 양측 대표단은 27일 오후 4시쯤 시작된 첫날 본회의부터 평평하게 대립했다. 북한의 핵 보유 발언이 분위기를 냉각시켰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자 북한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다.

북측 대표단장인 김영성 내각책임참사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천리비린(千里比隣)이라고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다"라고 하자 정 장관은 "천리길이 마음만 맞으면 멀다 느끼지 않겠지만 가는 길에 돌부리가 튀어올라 어려움이 많은 게 문제"라고 맞받아치며 핵문제가 남북 관계에 가장 큰 장애임을 강조했다.

회담 내내 이같은 분위기는 계속됐다. 우리측은 다른 의제를 일곱 꺼내지 않고 오로지 북한 핵무기 보유발언의 진위를 밝히고 핵포기 설득에만 주력한 반면 북

한은 대북송금 특검, 대이라크전 파병, 한·미공동군사훈련 등을 꺼내 회담은 거의 동문서답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1시간40분 가량 이어진 첫 전체회의에서 양측 대표단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미리 예정된 공동만찬을 5인씩인 양측 대표단의 회담형식으로 진행하며 의견교환을 계속했다. 식사자리인지만 본회담 때보다 다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양측 대표들은 서로 잔을 부딪히며 건배하며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앞서 우리측 대표단 43명은 27일 오전 11시6분 평양 순안공항 도착, 탑승한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한 북한 의사 2명으로부터 일일이 사스 감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체온을 확인받았다. 북한 당국은 이처럼 사스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북한 영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예외없이 사스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사스 때문이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어느 때와 달리 우리 대표단의 평양 사적 명승지 관람 등 야외 행사가 한 건도 없어 싸늘한 회담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평양=공동취재단·신청호기자

南 “核보유 해명하라” 압박

장관급회담 첫날... 쟁점-전망

북핵 보유 시인으로 국내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7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10차 남북장관급 회담 주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열린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첫날 회의에서 남측은 핵문제를 집중 부각시켰으나 북측은 이에 대한 직답을 회피한 채 논쟁을 벌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북측은 논란이 예상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북송금문제, 대프론트 등에 대해 일단 짚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장관은 먼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측 대표인 리근(李根) 외무성 미국 부국장이 제임스 켈리 미국 무부 차관보를 회담장 북도로 불러내 전달했다는 핵보유 시인 여부다. 정 장관은 북한의 분명한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 위반을 지적하면서 핵무기 폐기 등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또한 3자회담에서 북한 거부로 한국이 빠져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 이유를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간에 풀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 배제는 당연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대북송금 특검 수사'를 거론했으나 중점을 둔 발언은 아니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신언상 남측 대변인은 "북측은 제기한 문제들로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면서

"북측은 특히 국민의 정부때부터 이루어져 오는 화해협력 분위기가 손상되지 않고 유지되길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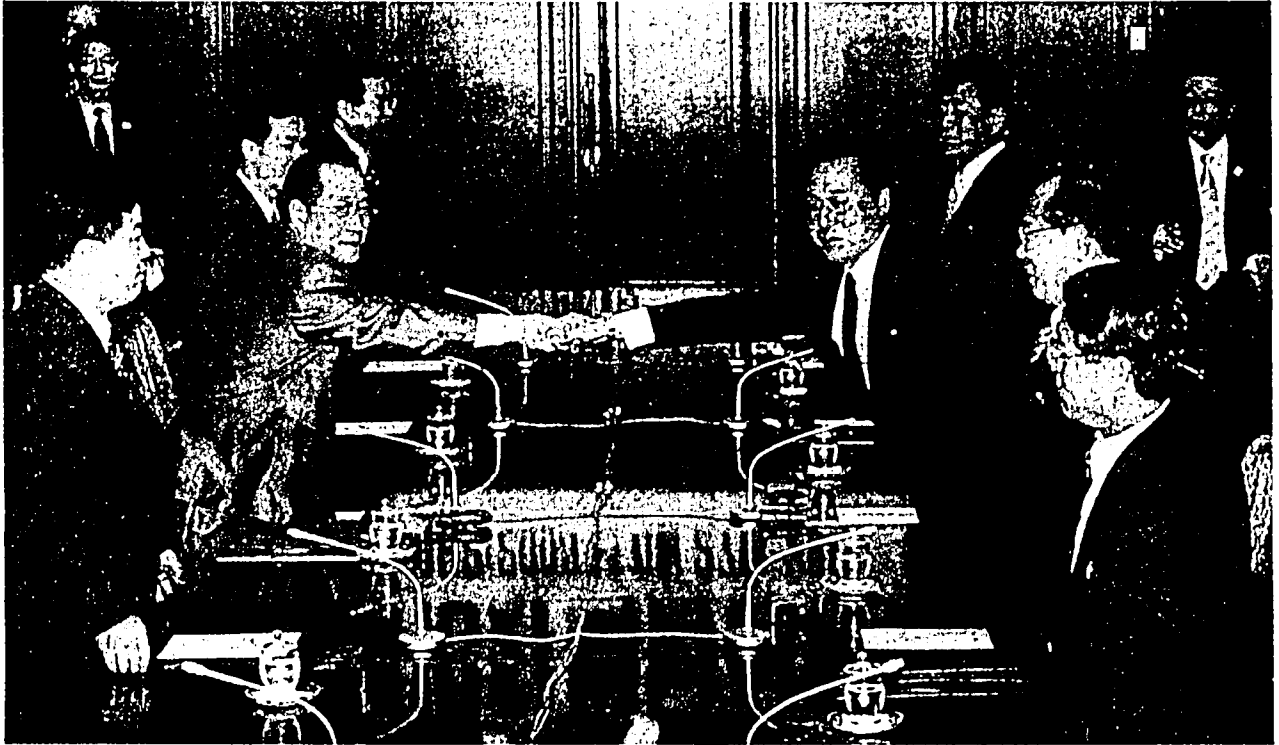
북한은 이튿날 회담에서 쌀과 비료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주장으로 격앙돼 있는 국내 여론을 감안해야 하지만, 정부는 쌀·비료 지원

을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새 정부의 첫 남북 고위급회담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을 북측에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핵 문제와 남북 교류사업을 병행 논의한다는 방침 아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화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첫 전체회의 후 별도의 접촉을 갖지 않고, 고려호텔 내에서 공동만찬을 가진 것으로 이날 일정을 끝내고, 기조연설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28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송민섭기자 stsong@segye.com

丁대표 “核논의 배제 있을수 없는일” 北선 “美와 풀문제”... 기존주장 되풀이 쌀·비료 추가지원등 싸고도 난항예상



◇10차 장관급회담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린 27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 회담장에서 우리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 두 번째)과 북측 김령성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朝鮮日報

2003. 4. 28 (월)



◇南北대표 건배 남북 장관급 회담 첫날인 27일 저녁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만찬에서 우리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과 북측 김령성 대표가 건배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東亞日報

2003. 4. 28 (월)



北, 南대표단 사스 검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석하는 남측 대표단의 전세기가 27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북측 방역 관계자가 사스 검진을 위해 대표단에 체온계를 나눠주고 있다.

중앙일보

2003. 4. 28 (월)



북한, 남측 대표단 사스 검진 27일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이 탄 전세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북측 방역담당자들이 기내에서 대표단에게 사스 검진을 위해 체온계를 나누어 주고 있다. 평양=조용철 기자

“핵보유 사실이면 중대문제” 남북 앞서마자 팽팽한 긴장

• 평양 장관급회담 안팎

27일 평양에서 시작된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며칠 전 공개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으로 ‘남북 핵회담’을 방북케 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화기에 예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측은 핵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이에 반해 북측은 남북경협과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기초연설부터 핵보유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위반이라고 몰아붙였다. 정장관은 또 새정부의 평화변영 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함께 군사 신뢰구축이 병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정장관이 평양 출발에 앞서 밝힌 회담 의제는 핵문제와 새정부의 평화변영 정책 설명, 기존 교류사업의 계속적 추진 등 세 가지였지만 남측 기초연설에는 미이행 남북 교류사업의 구체적인 언급이 생략됐다.

북측 김령성 단장은 핵보유에 대한 질문은 피하면서 최근의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송금 특검 등이 남북관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북측은 그러나 첨예한 논쟁을 피하고 ‘국민의정부’ 시절의 화해·협력정신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6·15 민족통일 대축전의 정례화와 ▲6·15선언 3주년을 전후한 경의·동해선 연결 및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면회소 착공

“해명하라” “北美현안” 맞서 북측 주로 경험문제 거론

▲남북 민간선박 영해통과 ▲동해어장 남측에 개방 등에 관한 논의를 제안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이로 인해 첫날 회담은 남북이 논쟁을 피한 채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양측 대표들은 오후 4시부터 100분에 걸친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로 할 말을 다했다”면서 “본격적인 토론은 내일(28일) 시작된다”고 말했다. 남측 대표단 관계자는 “28일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문제를 주요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해 2박3일간의 회담기간 내내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성 발언’이 최대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양측은 큰 이견이 없는 교류협력 현안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회의 일정을 잡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가 끝난 뒤 열린 환영만찬은 남북 대표단과 관계자들이 섞여 앉아 핵문제도 냉각된 한반도 정세와는 대조적으로 화기에 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회담은 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일체의 외부행사를 취소하고 환영만찬도 숙소이자 회담장인 고려호텔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평양 / 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

世界日報

丁통일 “역지사지 자세로 성과내자”

장관급회담 스케치

이번 1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이전 회담과 비교할 때 상당히 냉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으로 남북간의 긴장분위기가 조성된데다 여흥 행사인 명승지 참관, 공연관람 행사도 사스피해 방지를 이유로 전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남북 양측이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북측 김령성 단장이 “천리비린(千里比隣)이라고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

척이다”라고 말한 데 대해 “천리길도 마음만 맞으면 멀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가는 길에 돌부리 튀어올라 어려움이 많은 게 문제”라고 답했다. 정 수석대표는 “회담에서 다투야 할 문제의 숫자나

기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이륙 25분만에 비무장지대(DMZ) 상공을 통과했다. 전세기는 오전 11시6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정세현 장관 등 대표단은 15분 동안 사스검역을 받았

北단장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길도 지척”

南대표단 전세기서 15분간 사스검진받아

양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이나 입장을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 성과를 내자”고 했으며, 김 단장도 “뜻을 모으고 지혜를 합치면 잘 되겠죠”라고 답했다.

남측대표단 43명이 탑승한 전세

다. 북한의 검역의사 2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닐장갑을 낀 채 전세기 기내로 들어와 개인별로 체온계를 나눠준 뒤 일일이 체온을 확인했다. 검역을 마친 대표단이 오전 11시35분 비행기에서 내리자 수석대표인 김령성 내각 책

임참사를 제외한 회담 대표 4명이 공항에 나와 남측 대표단을 영접했다.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은 27일 오후 7시30분부터 평양시내 고려호텔 3층 별실에서 북측 대표단이 주최한 만찬에 동참했다. 만찬에 앞서 북측의 김령성 단장은 축식 만찬사를 통해 “이번 회담은 새 정권의 첫 회담이자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이어가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회담”이라며 견해를 제의했다. 정 수석대표는 만찬 담사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를 한단계 더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에서 정 수석대표 왼쪽에 김 단장이 자리하고 그 외 남북 대표단 관계자들이 번갈아 자리를 섞어 앉아 ‘핵보유’ 발언 등으로 냉각된 한반도 정세와는 사뭇 대조적인 화기에 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박석규·송민섭기자



◇평양 機內서 사스검진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 우리 측 대표단이 27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북한 의료진이 기내로 올라와 사스 검진을 위한 체온계를 나눠주고 있다. /평壤=사진공동취재단

내일신문

2003. 4. 28 (월)

남북, 북핵 · 교류협력 집중조율

북 핵보유 선언 '암초' 로 장관급 회담 난항 예상

평양공동취재단 · 연재호 기자
news21@naeil.com

남북한은 제10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가졌으나 회담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남북 양측은 남측이 제기한 '북한 핵보유 발언' 등 북핵 문제, 상호존중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정립 문제와 북측이 제기한 6·15 공동선언 재확인 및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각급 분야의 교류협력 조기 추진 등을 놓고 집중 조율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남측은 어제 기초연설을 통해 자적한 베이징 3자 회담 '핵 보유 발언' 의 진상에 대한 북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만찬에서 양쪽 단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

측의 책임있는 해명과 그것이 사실일 경우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핵사실 및 핵무기 폐기 다짐 등을 북측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 문제는 기본

적으로 '미국의 대북 고압압살 책동' 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핵보유 발언' 진상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 새 정부의 6·15공동선언 재확인 과 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등의 조기 추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

남 “핵폐기 우선” ... 북 “교류협력 시급”

10차 장관급 회담 이틀째 ... 핵공방 속 교류협력 지속 관심

연재호 기자 news21@naeil.com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10차 장관급회담장에서 처음 만난 남북 양측이 핵문제를 둘러싼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남북은 이미 27일 1차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핵폐기나, 교류협력이나를 둘러싼 공방의 '1라운드'를 끝마쳤다. 남측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측은 6·15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철도·도로연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사업의 조속한 성사를 강조했다.

북측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기조발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남북한은 회담 이틀째인 28일 오전에는 남측이 제기한 북핵 폐기 문제와 북측의 경제협력을 비롯, 각급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등을 놓고 집중 논의하고 있으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측의 북핵 폐기 요구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형

편이고 남측도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교류협력사안을 논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틀 반영하듯 28일 오전 2차 전체회의에서 남측의 핵 폐기 요구에 대해 북측은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 책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역시 철도·도로연결차공식, 개성공단 착공식 등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이 제안한 교류협력사안의 조기 추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8차와 9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진통을 거듭한 끝에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고유환 등 국대 교수는 "남측은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남북

교류협력은 차후에 계속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양측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회담에서도 추후 교류협력 일정 합의는 기대할 만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내외경제

2003. 4. 28 (월)

남북, 핵문제·경협 집중 조율

이틀째 장관급 회담... 양측 이견차 아직도 커

남북은 제10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오전 정세현 수석대표와 김령성 단장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핵보유 발언' 등 북핵문제, 상호존중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정립문제, 6·15 공동선언 재확인 및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조율했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이날 2차 전체회의 및 실무접촉에서도 의견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첫날 기조발언을 통해 지적한 베이징 3자회담 '핵보유 발언'의 진상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 다짐 등을 북측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또 북측이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도 베이징 회담에 한국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측은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 책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핵보유 발언' 진상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대신

새 정부의 6·15 공동선언 재확인하고 이틀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등의 조기 추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한다'는 원칙 아래 △경의·동해선 횡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식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문제 등 이미 합의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북측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에 제의한 △민간·당국 공동의 통일대촉진 정례회 △상호비방 중지 △쌍방 민간 선박의 상대측 영해 통과 △북측 동해어장 일부 남측 어민 이용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남측 현대산의 관련사업에 대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은 물론 쌀과 비료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핵문제에 관한 북측의 성의 있는 자세가 없을 경우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실무대표 접촉 또는 수석대표 접촉 등을 잇따라 갖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절충작업을 계속한다.

김필수 기자/pilsu@ned.co.kr

문화일보

2003. 4. 28 (월)

南 “핵보유 해명” 北 “경협 조기추진”

장관급 평양회담 이틀째

남북은 제10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정세현 수석대표와 김령성 단장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핵 보유 발언' 등 북핵 문제, 남북관계 정립문제, 6·15공동선언이행 및 경제교류협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전날 기조발언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국 베이징(北京) 3자회담 회에서의 '핵보유 발언' 진상에 대해 북측의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북측은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 책동'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며 '핵보유 발언' 진상에 대한 즉답을 피하는 대신, 새 정부의 6·15 공동선언 재확인하고 경제협력 등 각종 교류사업의 조기추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안한 △민간·당국 공동의 6·15민족통일대촉진 정례회 △상호비방 중지 △쌍방 민간선박의 상대측 영해 통과 △북측 동해어장 일부 남측어민 이용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측 현대산의 관련사업에 대한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 등과 쌀·비료 지원 문제 등은 핵문제와 맞물려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평양=공동취재단·김성협기자 jupiter@

北核 공동보도문에 포함

6·15전후 이산상봉 추진

남북장관급회담서 원칙 합의

정부는 28일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리측 공동보도문 초안을 북측에 제시했다. 남북 대표단은 북한 핵문제를 이번 회담의 공동보도문에 담는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그 수준을 놓고 밤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했다.

▶관련기사 5면

남북 대표단은 이날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회담, 실무접촉을 잇따라 갖고 6·15 3주년을 즈음해 이산가족 7차 상봉과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식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 11차 장관급 회담을 6월 말이나 7월초에 갖기로 하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5차 경협추진위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이날 비료지원을 공식요청했으나 쌀 지원은 거론하지 않았다.

남측 대표단은 전체회의에서도 전남에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이를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 내각참사는 "핵 문제는 조·미간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기본입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평양 공동취재단 이도운기자 dawn@

6월1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장관회담... 경협추진위 구성등 접근 "핵 해결안되면 경협 어렵다" 北에 전달

남북한은 28일 평양에서 제10차 장관급회담 이틀째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 등을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 3주년 때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을 교환하기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11차 장관급회담 일정과 5차 경협추진위 일정에도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남측이 제기한 북한핵 문제를 이번 회담의 공동보도문에 담는 것

등을 놓고 밤늦게까지 절충을 계속했다. 우리측은 보도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핵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측은 핵 문제는 북·미간 논의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원칙적 입장이라면 보도문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회담장에서 핵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넣을 수 없다고 했으나 회담장 밖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8·9차 회담 때처럼

막판에 핵 문제가 보도문에 담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측이 이산가족 교류와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핵 문제가 잘 풀릴 경우 7차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자세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추가 경협 추진은 물론 쌀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측은 비료 지원은 공식 요청했으나 쌀 지원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 문제와 경협을 직접 연계하겠다는 방침은 없지

만, 그렇다고 연관이 없을 수도 없다"면서 "기존의 경협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슬로 다운(Slow Down)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회담에서 대북 비료 지원은 합의될 가능성이 크지만 쌀 지원은 핵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도 "핵 문제와 경협을 병행해서 풀어나간다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경협은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를 취하는 문제와 핵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에 대해 한 관계자는 "양측 다 대화 통로를 필요로 하는 만큼 경협이 연기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남도영 김지방기자

北 “南과는 핵 논의 못한다”

평양 장관급회담 진통

남북한은 28일 평양에서 장관급 회담 이틀째 회의를 열어 북한 핵문제와 경제 협력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과 관련한 대목을 공동보도문에 담는다는 원칙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표현 수위를 놓고 방법협상을 벌였다.

남측 정세현(丁世鉉·통일부 장관) 수석대표는 회의에서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2년 발효)에 합

의한 만큼 북핵 의혹에 대해 남측은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측 김영성(金榮成·내각 책임참사)단장은 회담장에서 “핵문제는 조(북한)·미 간의 문제며 이를 남측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丁 수석대표는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다. 북측도 상봉원칙에는 합의해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중앙일보

2003. 4. 29 (화)

東亞日報

2003. 4. 29 (화)

南 “核논의” 압박... 北은 단전

장관급회담 이틀째

남북은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에도 북핵 문제를 놓고 ‘땀빠진’ 줄다리기를 펼쳤다.

남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공동보도문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준수 등 핵문제 해결에 관한 의지를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측은 핵문제는 남북이 아닌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북측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와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재확인 을 강조하며 민족공조 정신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의 계속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측 대표단이 회담 분위기가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위협부담을 무릅쓰고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은 국민의 정부 때처럼 북한이 필요한 것은 얻어가면서 남측을 난처하게 만드는 방식은 앞으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결도는 북핵 문제 논의=남측은 베이징(北京) 3차회담 북한 대표의 핵무기 보유 발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북측에 요구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핵무기 보유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은 채 북핵 문제는 북-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에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남측은 당초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심각한 南北

28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틀째 계속된 제10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 사진 중 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 내각 책임참사(오른쪽 사진 중 왼쪽)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南 “공동보도문에 非核化 반드시 넣어야” 北 “6·15공동선언 이행의지 명시해야”

핵문제에 대한 진전된 양측의 입장을 의지를 공동보도문에 담는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 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는 데까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관계자는 “보도문에 담길 (핵문제에 관한) 표현이 관건”이라며 “현재로서는 북측이 (우리측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6·15공동선언에 집착한 북한=북측은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난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성(金榮成·내각 책임참사) 북측 단장은 회담 기간 내내 “북남 쌍방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그 이행 의지를 온 민족 앞에 다시금 약속하는 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누차 강조했다. 또 북측 관계자들도 남측 대표단에게 “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화변영정책은 6·15공동선언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북측은 아울러 6·15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민족공조를 뜻하는 6·15공동선언을 강조함으로써 남북대화를 한층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려는 계산 같다”고 분석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北 “核은 北-美간에 풀어야 할 문제”

평양 장관급회담 이틀째

남북은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 10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공동보도문에 북핵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는 문제를 놓고 밤새 질충을 벌였다. ▶A4면에 관련기사

남측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행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북측은 핵문제는 남북이 아닌 북-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북측은 6·15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보도문에 포함시키면 핵문제도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처음에는 핵문제를 보도문에 넣을 수 없다고 했으나 받아들일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8차, 9차 장관급회담 때처럼 막판에 핵문제가 공동보도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측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명시하는 내용을 보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바 양측은

회담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요구한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과 북측이 제기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행사, 개성공단 건설착공식 등은 핵문제에 관한 논의가 풀릴 경우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담 관계자는 “양측이 모두 이산가족 교류와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남측은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6·15공동선언 3주년을 전후해 갖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는 북측이 협의 자체를 꺼리는 바람에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취재단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IAEA “北核 용인못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7일 세계가 북한

에 대해 핵무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핵 감시 책임자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CNN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국가가 핵물질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東亞日報

2003. 4. 29 (화)

한겨레

2003. 4. 29 (화)

남북, 핵 협의의 진전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문구 막바지 질충

남북은 제10차 장관급 회담 이틀째인 28일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핵 문제 등 현안 질충을 벌였다. 남북은 이날 핵 문제에서도 대화 국면을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시켰으며, 공동 보도문에 담길 문구를 두고 밤늦게까지 조율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와 접촉에서 남측은 공동 보도문에 어떤 형태로든 핵 문제를 담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북측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보도문에 담길 표현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성 북측 단장도 이날 밤 공동만찬에서 “오늘 우리는 상정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좀더 훌륭한 결과를 위해 뜻과 지혜를 합쳤다”라며 남북 사이 협의에 진전이 있음을 내비쳤다.

핵 문제와 함께 이산가족 7차 상봉,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또 5차 경제협력추진위의 11차

장관급 회담 일정 등이 공동 보도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회담 관계자는 “양측이 이산가족 교류 등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을 계속 추진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핵 문제 논의가 풀릴 경우 교류 행사와 관련 일정을 잡는 문제는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은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6·15 세 돌에 열자고 제의했으며, 11차 장관급 회담 일정은 남측이 7월 초, 북측이 6월 말로 각각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날 접촉에

서 비로 지원을 요청했으나, 쌀 지원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또 ‘6·15 공동선언 이행’을 거듭 강조하면서 3주년을 즈음해 민간과 당국이 함께 참가하는 통일대축전 개최를 제의했으나, 남측은 ‘당국 참여’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와 관련해 “워낙 우리 내부의 관심이 커서 (공동 보도문에 담도록) 노력하지만,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 의지대로 쉽게 합의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29일 오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양/공동취재단,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국민일보

2003. 4. 29 (화)

“공동보도문에 핵문제 거론하자”
南요구 수용싸고 밤늦도록 절충

장관급회담 이틀째

남북 장관급회담 양측 대표단은 회담 이틀째인 28일에도 핵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밤늦게까지 이어갔다.

양측은 이번 회담의 공동보도문에 담을 핵 문제의 표현 수위를 두고 수석대표 접촉을 두 차례나 거듭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핵 문제 때문에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비료 지원 등은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으나 양측의 주장에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대표단은 오전 전체회의가 끝났을 때만 해도 “핵 문제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보도문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였으나 대표 접촉과 실무 접촉이 이어지면서 점점 표정이 밝아졌다. 회담은 북한측이 회담장 밖 접촉에서 “핵 문제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비추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2차 전체회의는 전날 양측이 제시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쳐 50분 만에 끝났다.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오전 11시25분 남측 수석대표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영신 대표단장이 고려호텔내 정장관 방에 마주앉으면서 시작됐다. 두 수석대표는 점심도 미룬 채 100분간 논의를 거듭했다. 정 장관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상기시키며 “우리도 핵 문제의 당사자”라며 “북한의 핵개

발은 핵무기를 개발할 뜻도 능력도 없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북측을 추궁했으나, 김 단장은 “핵 문제는 조·미간에 논의할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본적인 수준의 표현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 3시45분부터 1시간20분간 우리측 신연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및 서영교 통일부 국장이 북측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및 김만길 문화성 국장과 실무접촉을 가졌다.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사안에 의견 접근을 보고 11차 장관급 회담도 6월말~7월초에 열자는 의견을 타진했다. 북한은 특히 비료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남측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쌀 지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 회담 성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과 김 단장은 밤 10시부터 다시 마주앉아 마지막 절충점을 찾는 데 진력했다. 남측은 북측이 불만을 표시해온 ‘6·15 공동선언 이행 재확인’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담는데 순순히 합의하는 대신 핵 문제의 표현 수위를 두고 지난 9차 장관급회담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자고 북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북측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공동취재단 김지방기자

핵문제 일부 의견접근

北, 공동보도문 반영하되 구체방안엔 난색

평양 장관급회담 이틀째

남북한은 제10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2차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담는 문제를 놓고 밤늦게까지 절충을 벌였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음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강도높게 촉구하면서, 29일 발표할 공동보도문에 북핵문제 명시와 함께 북한이 앞으로 이행할 비핵화 행동 수순의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핵문제는 북·미간에 논의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핵문제의 공동보도문 반영은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방안 삽입에는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4면)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이날 회담장에서 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넣을 수 없다고 했으나, 회담장 밖에선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다만 보도문에 담길 표현이 어느 정도나가 관련이 될 것이며, 이 문제는 29일까지 논의될 것이

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한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 7차 상봉과 ▲경의선-동해선 철도 개도 연결 행사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문제에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관계자는 “양측이 이산가족 교류를 비롯해 경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하는 데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핵문제만 합의되면 이산가족 상봉 등은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남측은 이산가족 7차 상봉행사를 6·15 3주년에, 11차 장관급회담을 7월초에 갖자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도 비료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나 쌀 지원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국내의 관심이 큰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거론했으나, 북측이 거부해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밤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2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해 ‘공동보도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평양=공동취재단, 조정진-송민섭기자 jji@segye.com

남북 심야 다각접촉

■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조율

“북쪽 진지하고 성의있게 협의” 개성공단 착공등엔 이견 좁혀

제10차 장관급 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평양 고려호텔의 몇몇 객실에선 28일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남북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대표들 사이 개별 접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남북은 27일(북쪽 진행)과 28일(남쪽 진행) 전체회의에서 각각 제시한 공동보도문 초안을 토대로 28일 수석대표 접촉, 실무대표 접촉 등을 거치며 점차 희미하나마 합의 윤곽을 잡아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현 남쪽 수석대표는 이날 공동만찬에서 “북쪽이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했다”며 “서로 입장을 조율할 일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쪽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한 ‘핵 문제’를 놓고도 막바지 조율이 이뤄

졌다. 남쪽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문구를 담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8차 장관급 회담에서의 핵 관련 합의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8차 장관급 회담은 북쪽이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는 미국의 폭로 직후에 열렸다. 이때도 남쪽의 요구로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구절을 공동보도문 1항에 담을 수 있었다. 한 회담 관계자는 “북쪽의 ‘핵 보유’ 발언에 따른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그때보다는 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북쪽의 기존 태도는 분명하다. 그러

나 새 정부 들어 남북의 첫 만남인데 그동안의 변화된 현실이 있는 만큼, 뭔가 다른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양쪽의 기본 자세인 만큼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더 진전된 내용을 담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남북 경험 등 여타 의제에선 뚜렷한 의견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북쪽이 첫날 기조 발언에서 제시한 교류·협력 방안들은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을 6·15에 맞추자는 것을 제외하면 이미 거론됐던 사항들이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쪽은 이 밖에 7차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문제는 이후 적십자 회담과 실무접촉에서 다루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신안상 회담 남쪽 대변인은 “북쪽이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와 관련해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 화해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북쪽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朝鮮日報

南 “우리도 핵 따질 권리있다” 北 “핵, 北·美가 해결할 문제”

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이견 北, 이산 상봉엔 긍정반응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장관급 회담 이틀째인 28일, 남북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등을 잇달아 갖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보도문에 넣는 문제를 집중 집중했다.

우리 측은 과거 회담 때보다 핵문제 해결에 대해 진전된 표현을 공동보도문에 넣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측은 이 표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고 말했다고 신안상(申彦祥)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 책동’에서 비롯된 만큼 북·미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표는 “남북 간 비핵화공동선언을 합의한 만큼 우리 측이 마땅히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북측은 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공동선언 3주년 즈음에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긍정 반응을 보였으나,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주소 확인 제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 서울=金瑗徹기자
mckim@chosun.com

공동보도문 '核포함' 놓고 난항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

남북한은 제10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오전과 오후 2차 전체 회의와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전날 남측이 제기한 북한 핵문제와 경제 협력 등을 놓고 '담판'을 벌였다. 그러나 쟁점사항에 대한선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29일 회담을 마치면서 공동보도문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발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외교 통상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 핵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포기와 안전보장의 문제"라며 "이에 대해 관련 국가들이 여건조성과 중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문제' 반드시 반영=이날 오전 속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북측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고 핵활동은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다"고 언급해 온 점을 상기시키며 "북측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신인상 회담 대변인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령성 북측 단장은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화



남북장관급 회담 남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이 28일 평양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쟁점사항 이견 못 좁혀 北, 경험분야 적극적

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 이후 국내외 비판여론을 감안, 어떤 형태로든지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동보도문에 꼭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협 등 남북교류도 논의=북측은 의도적으로 핵문제 논의를 피해 가면서도 경제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측은 27일 기본발언을 통해 △경의·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행사 △개성공단 건설착공식 △쌍방 민간선박의 상대측 영해통과 △북측 동해어장 일부의 남측 어민 이용 △금강산 관광재개 등을 논의 하자고 제의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다시 이를 상기시켰다.

우리 측도 핵문제 합의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등을 제기했다.

북측은 주요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공동보도문에 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논의는 하되 북측이 핵문제 부분에 더욱 성의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논리로 북측을 설득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김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남북 공동보도문 北核수위 어디까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성패는 29일 발표되는 공동보도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보도문에 어떻게 담을지를 두고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한은 지난 8·9차 장관급회담에서도 공동보도문에 북한 핵 관련 문구를 삽입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제8차 장관급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보도문 1항에는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9차 회담에서는 보도문 수위가 8차 때보다 낮아졌다.

남측 대표단은 평양으로 떠나기 앞서 보도문과 관련한 몇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전문에 6·15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문구를 북측 요청에 따라 넣을 수 있으나 '미국을 겨냥한 민족공조'의 취지는 배제하고 ▲전문 또는 제1항에 핵 관련 조항을 담되, '비핵화선언 이행' 등 8·9차 회담보다 뚜렷하게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 하며 ▲1항이 합의될 경우 경협, 이산가족 상봉, 11차 장관급회담 및 부속 회담 일정 등 다른 현안을 포함, 총 8개항 정도의 공동보도문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회담 관계자는 "공동보도문에 북한 핵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민족스러운 표현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이도윤기자

장관급회담 核입장차 난항

이틀째... 공동보도문에 표현수위 줄다리기

남북은 28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10차 장관급 회담 이틀째 전체회의를 속개했으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보도문 표현 수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 관련기사 A5면

남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는 이날도 "북측은 그 동안 핵 활동은 에너지생산에 위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다고 언급해 왔다"며 핵무기 보유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담은

공동보도문 채택을 촉구했다. 북측 김령성 단장은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미간 문제"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 기본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북한 핵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반영한다는 데는 의견 집근을 이뤘으나 표현 수위를 놓고 밤샘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남북은 그러나 6·15 공동선언 3주년에 맞춰 7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사실상 의견 집근을 보는 등 교류협력 사안에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11차 장관급 회담은 6월말(북측) 7월초(남측)로 좁혀졌다. 북측이 제안한 6·15공동선언 통일대촉전은 민간 차원의 행사를 합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측은 이날도 쌀 지원은 거론하지 않았다.

/평양=공동취재단·인준현기자
dejavu@h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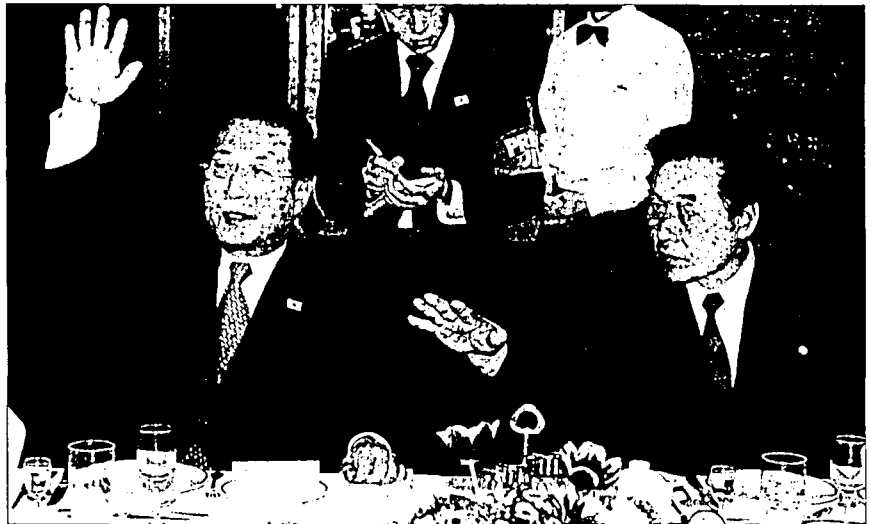
南 “核진전 없으면 회담 파국” 압박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남북은 교류협력 분야 의제를 둘러싼 이견을 대부분 때죽지는 뒤 북한 핵 문제의 공동보도문 반영 순위 조율에 대담했으나 29일 새벽까지 풀다리가만 거듭했다.

남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오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나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나타냈다. “갈 길 것”이라는 의례적인 얘기도 없었다. 북측 단장인 김령성 내각책임참사도 “지금으로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입을 다물어 평행선을 달린 회의 분위기를 드러냈다.

회의에서는 팽팽한 눈박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전날에 이어 “핵 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는 등 전에 없이 공식적 협상 자세를 견지했다. 김 단장이 “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종전 주장을 거듭하자, 정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한 만큼 미땅히 우리도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와 김 단장은 전체회의 후 점심을 걸러가며 1시간40여분간 일정에 없던 접촉을 갖기도 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실무접촉에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이견은 상대적으로 쉽게 좁혀졌지만 북한 핵 관련 표현에 대해선 한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쳤다. 남측은 “핵 문제에 대한 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으면 회담은 깨진다”고 배수진을



28일 저녁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인천에서 정세현(왼쪽) 통일부 장관과 김령성 내각책임참사가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손짓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장관급 회담 심야절충 진통

南 “공동선언문에 핵포기등 포함을”

北, 남측 ‘6·15’ 이행의지 확인 총력

쳤다. 북측은 8, 9차 회담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을 재의했지만 남측은 핵 포기 선언이나 비핵화공동선언 재확인 등 구체적인 문구들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관계자는 “대화 통로 유지에 급급해 미땅히 제기해야 할 문제를 피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음

것”이라며 새 정부의 탈리진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북측 관계자들은 수시로 노무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평가 및 새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차이를 묻는 등 새 정부의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 확인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측은 공동보도문에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 재확인”이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공동취재단·인촌현기자 dejavu@hk.co.kr

한겨레



북한이 입국자들에게 사스 감염을 경계한 가운데 27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승무원이 마스크를 쓴 채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평양/AP 연합

‘위험지’ 입국자 강제 격리 등 북한도 사스 ‘원천봉쇄’ 나서

의심환자 발생 비상 남북 민간교류 중단

북한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과의 전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 시내에서 사스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되면서 사스 예방은 이미 갈대 파제가 된 상태다.

〈중앙텔레비전〉은 지난 24일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사스 의심 환자가 나타났으며 “이곳의 인민병원 의료진들이 사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과 주민들을 철저히 격

리 조사, 장악하는 사업과 함께 그들에 대한 검진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모든 의료진을 동원해 예방과 검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방송은 평양 평천구역 인민병원의 의사들이 구역내 인민반(지역의 20~40가구로 구성된 조직)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사스의 증상과 전염경로, 그것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고 27일 전했다.

북한은 이미 사스 예방을 위해 육

로는 물론 항공, 공함을 통해 북한에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 중이다. 또 신의주항 비북한 국경에서 여행자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고 평양역으로는 화물만 들어오도록 제한했다.

사스 발생지역을 거처온 해외 출장자들은 일정기간 강제 격리되며, 검역을 통과한 입국자도 해당 거주 지역 담당 의사들이 10일 동안 의학 격 감시를 한다.

북한의 이런 강력한 차단조치는 사스가 북한에 전염될 경우 가져올 경제적 손실과 사회불안 심리를 예방하려는 뜻으로 분석된다. 〈중앙방송〉은 지난 22일 “사스가 발생한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일부 업무거래와 일반 관광이 사실상 거의 경지상태에 있다”며 “죽음의 방으로 불리며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

스 말는 것은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사스 예방을 위해 남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잇따라 연기시키는 등 남북교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5월 초로 예정됐던 북한 조선농업근로자 동맹(농근맹)과의 평양 실무접촉을 북쪽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양측은 오는 7월의 ‘남북 농민통일대화’를 앞두고 실무접촉을 할 여정이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지난 26일 금강산에서 진행하려던 ‘2003 민족화합을 위한 금강산 성지순례’도 사스로 취소됐으며,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북한 조선직업총동맹과 함께 평양에서 열려던 ‘5·1절 마라톤 행사’ 역시 무산됐다.

정재권 기자 jjk@hani.co.kr



심각한 南-北대표

28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둘째날 전체회의에서의 남북대표들.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 첫번째) 등 남측 대표단과 김령성 수석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상대방의 인사말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南-北 ‘核문구’ 사고 줄다리기

장관급회담 이틀째 ... 진통 거듭

28일 평양에서 이틀째 계속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 대표단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회동까지 벌이면서 북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넣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였다.

남측은 북한의 해명을 담은 북핵관련 언급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회담 결렬까지 각오하면서 북측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측은 핵문제는 '조-미' 간의 문제로 남북간 회담에서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는 등 양측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현(丁世鉉) 남측 수석대표는 둘째날 전체회의에서도 '핵무기 보유 발언'의 진상에 대해 북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북한의 핵보유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1991년말 남북간 합의, 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

반임을 지적하고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고 신언상 남측 대변인이 전했다.

북측 김령성 단장은 남북간 '비핵화공동선언 위반' 부분에

南 “北해명 공동보도문에 포함 시켜야”

北 “朝-美간 문제... 거론할 사안 아니다”

대해 즉답을 회피하면서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고립압박 책동'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조-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문제 공동보도문 명시와 관련, 정부는 8·9차회담 때보다는 한 단계 진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해명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평양 8차회담 공동보도문에는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

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했고, 지난 1월 서울 9차회담 공동보도문에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남측의 이같은 입장을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01년 11월 초의 6차회담 때처럼 회담은 결렬될 수 있다.

그러나 남측의 쌀과 비료를 시급히 지원받아야 하는데다 베이징 3차회담에서의 핵무기 시인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우려하는 북한이 남북교류의 끈만은 놓지 않으려 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6·15공동선언 정신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북한은 현재 새로 출범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정부가 6·15남북정상회담 기조

를 이어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 같다.

전임 김대중(金大中) 정부처럼 새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지 여부와 금강산관광 등을 통한 남측의 달러가 계속 들어올지도 관심사다. 6·15정신에 따른 우리 민족끼리 문제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북핵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흔들려 보려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남측 대표단은 새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이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른 것인 만큼 굳이 이 부분을

공동보도문에서 재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남북간 막판 조율이 주목된다.

우리측이 강력히 제기한 국군 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 회담 관계자는 “위낙 우리 내부의 관심이 커서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데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의 지대로 (공동보도문에 담는) 합의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기자 stsong@segye.com

단호해진 南 매달리는 北

달라진 회담분위기

제10차 장관급회담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 진행되던 남북회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과거 남북회담에서 남측은 북측을 달래고 어르는 한국이었으나 이번에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남측 대표단은 남북교류의 지속성에 얽매어 북측에 끌려다녔던 이전과 달리, 회담 초기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명에 초점을 맞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남측은 28일에도 북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정부는 이날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도 핵 문제에 주력해 교류협력 쪽으로 초점을 옮기려는 북측과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수석대표가 27일 공동만찬에서 "지난 5년간 남북관계의 발전 경과를 다시 되돌아보면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정부의 달라진 협상 전략

을 엿볼 수 있다.

이같은 남측의 강경입장은 베이징 3자회담에서 남한이 배제된데 따른 고육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민의 비난여론을 무릅쓰고 남북 회담에 참여한 만큼 이럴 때 북측에 대해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회담이 깨지더라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는 전략

南, '北核보유' 집중 공세 초강경

北, 민족공조 내세우며 經協 집착

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6·15공동선언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담 대표는 물론 수형원·기자단 등 북측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측 인사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새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6·15공동선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나"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북한의 일부 회담 인사들은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6·15공동선언'이라는 용어를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정부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방송과 노동신문 등 북한의 관영 매체들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라며 6·15선언을 강조하는 논조의 글을 자주 내보냈다. 북측은 종종하게 재미를 본 김대중 정부 때와 같은 수준의 '햇볕정책'을 원하는 것 같다.

남측의 한 회담 관계자는 "북한이 베이징 회담에서 핵 보유 사실을 시인한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단절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6·15공동선언 이행 의지의 재확인 등을 통해 남북이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내외에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진·송민섭기자



28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공동만찬에서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왼쪽) 통일부장관과 김영성 내각참사기 제스처를 써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매일

만찬장 밝은표정... '결실 있었나' 추측

■ 장관급회담 이틀째 이도저도

남북한은 제10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회담, 실무접촉 등을 잇따라 갖고 현안에 대한 논의의 계속됐다. 남측은 핵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나머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하나 둘씩 합의가 이뤄 나왔다.

●北 수세 몰려져 남북자 승헌등 거론

남북 대표단은 오전 10시부터 50분까지 고려호텔 2층 회의장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남측 대표단은 북측이 핵 문제로 다소 수세에 몰리는 듯하자 국군보포와 남북자 승환 등 그동안 양측이 절그러왔던 문제도 집중거론했으며 경제·사회·문화 교류 협력 등 현안들도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다.

●수석대표 회담때 북핵 심도 논의

양측 수석대표는 전체회의가 끝난 뒤 오전 11시 25분부터 점심도 거른 채 오후 1시 2분까지 단독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핵 문제와 경험 등에 대해 전체회의에서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접촉

남측의 신연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의 서연교 국장, 북측의 최성익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과 김만길 문화성 국장은 오후 3시 45분부터 실무접촉을 갖고 공동보도문안 협의를 계속했다.

오후 5시 15분쯤 첫 회의가 끝난 뒤 최성의 북측 대표는 "회담이 잘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되고 있다. 이견이 많이 좁혀져 가고 있다. 회담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핵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자."며 언급을 피했다.

우리측 신연상 대표는 실무접촉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핵 문제를 얘기하나... 심각하죠."라고 말했다.

●북대표 "뜻·지혜 합쳤다"

남북대표단은 저녁 7시 30분 고려호텔 3층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양측 정세현·김영성 수석대표는 모두 밝은 표정이어서 잇따른 대표단 접촉에서 의견급근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북측 수석대표는 만찬사를 통해 "상정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훌륭한 결과물 얻기 위해 뜻과 지혜를 합쳤다."고 말했다. 정 남측수석대표는 "북측이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한 데 의미가 있다."고 북측의 달라진 자세를 평가한 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양 공동취재단 이도은기자 dawn@

7차 이산상봉 원칙 합의

북한 "핵은 北·美간 문제" 주장 되풀이

10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남북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등 북한 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반영할지 두고 막판 접충을 벌였다.

남측은 이날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집회에서 핵무기 보유 발언의 정확한 진상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남측은 그 발언이 사실일 경우 92년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특히 남측은 공동보도문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지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내외 비판 여론을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 지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동보도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남측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문제는 북·미간 논의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핵문제의 공동보도문 반영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이날 회담장에서 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넣을 수 없다고 했으나 회담장 밖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8, 9차 회담 때처럼 막판에 핵문제가 공동보도문에 담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2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 점세현 통일부 장관(왼쪽)과 김영성 북측 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공동보도문에 담길 표현이 어느 정도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은 핵문제와 달리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남측은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6·15 공동선언 3주년을 즈음해 갖자고 제의했고, 북측은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원칙에는 합의했다. 또 11차 장관급 회담,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성공단 착공식 등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날 집회에서 비료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나 쌀 지원은 거론하지 않았다. 남측은 북측의 비료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

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남북은 6·15 공동선언 3주년을 즈음해 민간 차원의 통일대축전 개최에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 회담관계자들은 회담기간 내내 "남측의 새 정부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없다"고 불만을 내비쳐 공동보도문에 6·15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남측 회담관계자는 "워낙 우리 내부의 관심이 커서 공동보도문에 담도록 노력하지만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 의지대로 쉽게 합의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해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윤상환기자

□윤곽 드러나는 北 '대담한 제안'

北 경제지원 요구 안했다

북한이 지난주 베이징 3차 회담에서 밝힌 '대담한 제안' 내용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외교소식통들이 전한 내용과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 제안은 북한으로서는 대단한 내용이지만 한국이나 미국측에서 보면 그 동안 대부분 검토돼 온 내용들이므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핵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안을 모두 꺼내놓았고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안이라는 점에서는 대단한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포기 및 안정보장 문제"라며 "이에 대해 관련 국가들이 여건 조성과 중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차 회담은 그것

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문제 해결에 치중해야지 형식에 지나치게 매달려서 우왕좌왕하거나 결과 가 잡못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측 제의가 포괄적이라면 문제는 미국측의 반응이다.

미국이 북한측 제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와 한·미 공조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로 집약되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달 중순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주요 변수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측 제안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부류로 보인다.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주장한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방안과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핵 폐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겨냥한 수순임이 분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불가침합정처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완화된 입장을 개진했고 94년 제네바합정에서 합의만 해놓은 채 이행되지 못한 북·미관계 개선 조치를 다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제안에 명시적으로 표현돼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결국 미국과의 국교 수립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또 이 같은 체제안전 장치 외에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추가 지원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이후 중단된 중유 공급 재개와 기존의 예너지 지원방안(경수조사업업 등 다른 방안이든) 수준에서 새로운 것을 더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동주기자

“남북, 핵문제 해결위해 계속 협력”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 이산상봉등 6개항 합의

남북한은 29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10차 장관급 회담에서 6·15 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르고 민간 주도의 '통일대축전'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막판 쟁점이던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고 공동보도문에 담았다. 30일 새벽까지 계속된 회담에

서 남북한은 공동선언 3주년에 맞춰 금강산에서 남북 각 1백명이 상봉하는 7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를하기로 했다. 양측은 8월 21일 대구에서 시작하는 여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남측이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도 의견접근을 봤다.

이와 함께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문제 등은 다음달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5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11차 장관급 회담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한다.

회담 관계자는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핵 문제임을 분명히 했고, ‘계속협력’을 명시해 지난 회담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8, 9차 회담보다 진전된 표현을 담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북측의 완강한 거부 입장에 부딪쳐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세현(丁世鉉)수석대표 등 남측 대표단은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30일 새벽 서울로 귀환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영중·정용수 기자 yjlee@joongang.co.kr

東亞日報

2003. 4. 29 (화)

‘北核 공동보도문 명시’ 막판 진통

남북 장관급회담 밤샘 협상 南대표단 하루늦춰 오늘귀환

남북은 제10차 평양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9일 6·15공동선언 3주년을 즈음해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과 민간 차원의 공동 통일대축전 행사를 갖고, 8월 21일 개막하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기로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A4면에 관련기사

양측은 또 제5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5월 중순 이후 평양에서 열어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문제와 개성공단 착공 등 그동안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경제협력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제11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7월 초 서울에서 열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남북 대표단은 사흘간의 공방 끝에 북핵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어떤 수준으로 표현할지를 놓고 밤샘 협상을 벌이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남측 대표단은 당초 29일 오후 3시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평양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회담이 길어짐에 따라 날짜를 넘겨 30일 귀환한다.

남측은 북핵 문제에 관한 공동보도문 표현이 진전된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회담 결렬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양측 협상이 무산되면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이미 의견이 접근된 내용도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기기자 espri@donga.com

한겨레

2003. 4. 29 (화)

“북핵 평화해결 협력”

장관급회담, 6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이산상봉·통일대축전 합의 대구 U대회 북대표단 참가

남북은 30일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했으며,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남북은 29일 낮부터 문서 교환, 수석대표 접촉, 실무대표 접촉 등 다양한 방식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30일 새벽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비롯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6·15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오는 6월 공동선언 3돌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7차 이산가

족 상봉단 교환행사와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각각 열기로 합의했으며,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오는 8월 대구에서 열리는 2003여름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남측 당국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은 경험 현안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5월19~22일 5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열어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와 개성공단 착공식 문제, 금강산관광사업 문제 등 협력사업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또 11차 장관급 회담을 7월9~12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 타결

北, 핵보유 해명없이 '반쪽합의'

30일 평양에서 끝난 10차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뒤 처음 남북한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최소한 사실 확인을 포함한 북한측 해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관련해 양측 주장을 충분히 협의했으며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8·9차 장관급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합의 수준이다.

북한 핵보유가 남북이 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중대한 위반이고 앞으로 이를 준수한다는 약속도 담겼다는 당

이산가족 상봉·통일대축전 개최등 남북간 교류·협력기조 유지는 성과

초 우리 정부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핵문제는 북·미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는 북한측 완강한 태도에 밀려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체제 생존을 놓고 미국과 '빅딜'을 모색하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북한측 '대담한 제안'을 두고 북·미간 신경전을 다소 누그러뜨리게 됐다는 점과 남북협상 테이블에 핵문제를 다시 올림으로써 우리 정부도 계속 북한 핵문제에서 일정한 역할

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문제와 달리 7차 이산가족 상봉, 통일대축전 등 남북협력사업 실천과 확대를 위한 여러 합의가 도출된 것은 고무적이다.

6·15 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행사와 민간 차원에서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열고, 오는 8월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측 선수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 기조를 계속 유지한 것이다.

양측은 차기 회담 일정을 잡아 연결고리를 마련했다. 5차 남북 경제추진위원회를 5월 19-22일 평양에서 열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문제와 개성공단 착공 등 그 동안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제협력 현안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7월 9-12일 1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베이징 3차 회담 후 남북관계마저 단절되면 국제적인 고립과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북측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회담인 이번 장관급 회담이 앞으로 남북관계 큰 흐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남북이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다.

윤상환기자

남북장관급 회담 타결

한반도 핵문제 평화적 해결 협력기로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진통 끝에 타결됐다.

남북한은 30일 새벽 평양 고려호텔에서 10차 장관급회담 3차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양측 주장을 충분히 협의했으며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하는 등 6개항으로 된 공동보도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그러나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준수 등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하지는 않음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6·15 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 남북 당국이 지원하는 가운데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열기로 했다. 또 이산가족 민회소 착공식을 이틀 시일 안에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고 남측 당국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5차 남북 경제추진위

원회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문제와 개성공단 착공 등 그 동안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제협력 현안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11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한편 남측대표단은 자정을 넘기며 마라톤 협상을 벌여 예정보다 하루 늦은 30일 새벽 서울로 귀환했다.

윤상환기자

공동보도문 '핵 언급' 심야진통

남북 장관회담 하루 연장

10차 남북 장관급회담 마지막날인 29일 양측은 공동보도문에 담을 북한 핵문제 표현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밤 12시까지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남측대표단의 서울 귀환도 하루 늦은 30일로 연기됐다.

남북은 그러나 6·15 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통일대축전을 개최기로 하는 등 교류협력 현안은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8월 대구 하계유니버

시아드에 북한대표단이 참가기로 하고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5월에, 11차 장관급회담을 7월 초에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이날 공동보도문안을 서로 교환한 뒤 검토작업을 벌이는 한편 한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3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갖는 등 릴레이 협상을 벌였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 보도문의 핵문제와 관련된 표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막판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양 / 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j@kyunghyang.com

'北核' 공동보도문 명시합의

南北, 표현수위 놓고 이견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10차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9일 북핵 문제 해결방안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하기로 합의하고, 문안 표현을 놓고 30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다. 남측 대표단은 원래 이날 오후 3시 평양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자정 넘어서까지 출발하지 못했다.

남측은 공동보도문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쌍방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수준의 표현을 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측은 8·9차 장관급회담

때 명시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정도의 문구를 넣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관계자들은 남측 기자단에 "남측이 '현재 진행 중인 대화'에 대한 문구를 넣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3자회담에 대한 한국 참여문제를 보도문에 넣기를 요구했음을 시사했다.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통일대축전 행사를 갖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8월 중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이 함께 참가하는 것을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평양=공동취재단

한국일보

2003. 4. 30 (수)

공동보도문 '核' 표현 진통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귀환 연기

남북은 29일 제10차 장관급 회담 전체회의와 수석·실무 대표접촉을 잇따라 열고 협상을 벌였으나 북핵 문제의 공동보도문 표현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서 회담이 진통을 거듭했다.

남북은 30일 새벽까지 접촉을 계속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남측 대표단의 귀환도 연기됐다. ★관련기사 A4면

남측은 접촉에서 공동보도문에 '남북이 비핵화공동선언의 책임 의무를 이행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을 경우 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9차 장관급회담의 보도문처럼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수준의 공동보도문안을 제시했고, 남측은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대화(북·미·중 3자 회담)에서"라는 문구를 넣자고

역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러나 6·15 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통일대축전을 갖기로 하는 등 핵 문제 외의 4개항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공동취재단
인준현기자 dejavu@hk.co.kr

서울경제

2003. 4. 30 (수)

核문제 포함 공동보도문 막판 진통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은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 마지막 날인 29일 북 핵 문제의 공동보도문 표현 문제를 두고 최종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었다.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관련된 표현을 합의문에 넣어야 된다

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대해 북측은 핵은 북·미 상호 간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났지만 보도문에 담을 핵 표현에 있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핵 문제와 별도로 4개항의 공동보도문 원칙에 합의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평양=공동취재단

남북 막힌 물꼬 터 대화 통로 확보

■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

‘핵’문안 놓고 막판까지 ‘수위’ 공방 비료지원등 교류협력 급진전 예고 6·15 공동선언이행 관련 의견접근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애초 일정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팽팽한 긴장 속에 치러졌다. 남북간 이견 조율과 절충을 위한 양보 없는 기싸움이

막판까지 펼쳐졌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9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된 실무대표 접촉을 마지막으로 오후 4시까지의 어떤 공식 접촉도 재개되지



남북 장관급 회담의 남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대표 김영성 내각참사가 28일 저녁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공동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평양/시진공동취재단

않았을 정도였다. 남북은 이날 오후 막후에서 공동보도문안을 서로 교환하는 등 물밑 접촉을 이어갔고,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잇달아 재개하는 등 합의의 윤곽선을 그려내기 위한 막판 협의를 계속했다.

남측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한 ‘핵’ 의제를 두고선 마지막 순간까지 아슬아슬한 난항이 계속됐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 ‘핵 문제’ 관련 문안을 넣는 쪽으로 어렵사리 의견을 모으고서도, 표현 수위에는 쉽사리 합의하지 못했다. 신언상 회담 남측 대변인은 이날 실무접촉을 한 뒤 ‘양쪽 입장이 분명하다’는 말로 이견 절충이 쉽지 않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나 ‘현재 진행중인 대화’와 같은 문구를 담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중인 대화’는 3차 회담과 관련한 문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북측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만 밝혀,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지난 8차 회담 수준에서 더 나아갈 순 없다는 점을 막판까지 강조했다.

‘핵’ 이외의 분야에선 뚜렷한 진전이 이뤄졌다.

남북은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6·15 3돌을 즈음해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측이 제기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이후 적십자회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북측의 대구유니버시아드 참여에 의견을 접근시켰고, 북측이 공식 요청해온 비료지원을 두고서도 구체적인 협력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강조한 ‘6·15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해서도 남북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 6·15를 즈음해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 등을 하자는 데도 의견 접근을 보였다.

신언상 대변인은 “북측이 6·15 공동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해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남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진 만큼, 이후 남북관계 진전의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졌다.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결렬도 불사” 새벽까지 버티기

■ 장관급회담 마지막날

“핵 문제에 진전된 내용이 없으면 회담은 깨진다.”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 마지막날인 29일, 남측은 귀환을 30일로 하루 늦춰가면서까지 전례 없이 단호한 태도로 북측과 치열한 신경전을 거듭했다. 남측은 오후 3시 출발 예정이던 서울행 전세기를 순간 공황에 대기시킨 채 북측과 밤늦게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핵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전의 어르고 달래는 협상 태도에서 벗어나 전에 없이 북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결국은 북측의 ‘성의’만 기다

남측, 전세機 대기시킨채 北과 신경전 北, 회담장 밖선 유연한 태도 보이기도 ‘서울서 11차 장관급회담’은 의견 모아

리던 이전 회담의 판박이었다.

최대 쟁점은 남북공동 보도문에 담을 북 핵 문제 관련 내용과 표현 수위였다. 남측은 이날 오후5시계부터 90여분간 열린 대표간 최종 담판에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핵심과 의무를 이행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마지막노선을 그었다. 남측 관계자는 어두운 표정으로 “북측이 계속 버티면 정부에서 그만

접으라는 훈령이 올 것”이라고 말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양측은 이날 저녁 북측이 상부의 검토를 받아 새로 제시한 북측 최종안을 두고 오후 11시까지 두 차례 실무 접촉을 거듭했다. 회담 관계자는 “표현 내용이나 수위와 관련한 양측의 협상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북측은 핵

관련 표현의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인 듯 수시로 협상 태도를 바꿔 남측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북측은 이날 새벽 접촉 때까지만 해도 회담장 내에서는 “핵 문제는 북미간 문제”라고 고집하면서도 회담장 밖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기대를 부풀렸다. 그러나 오전 9시 실무접촉에서는 핵 관련 문구의 공동보도문 반영 자체를 거부, 협상이 30분 만에 끝났다. 남측은 중간 협의를 위해 속소를 방문한 북측 연락관을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문전박대 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양측은 그러나 6월말~7월초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대화기조를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합의 후 이행하지 못했던 교류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다. /평양=공동취재단·인준현기자

dejavu@hk.co.kr

核 표현수위 사고 팽팽한 신경전

남북 장관급회담

“北-美 문제” 버티다 보도문포함 막판 합의 北 의도된 진뻏기 작전에 南측대표단 곤혹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인으로 북핵 문제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확인된 가운데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이전 회담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 등 '비교적 수월한' 안건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다루기 힘든 핫이슈인 북핵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어떻게 담느냐를 둘러싼 실랑이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다.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남측 대표단은 서울 귀한 날짜를 하루 늦춰야만 했다.

남측은 처음부터 북핵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고 북측을 압박해 나갔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남북대화 채널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주변국들에 확인시키면서 북측이 더 이상 대화담에서 남측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진전된 언급을 공동보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도 고려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핵 문제가 관건인데 북측이 (공동보도문에) 아예

못 담겠다고 하면 회담은 깨진다”며 결연함을 보이기도 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북측의 태도 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북측은 공동보도문의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도된 진뻏기 작전’을 펼치며 남측 대표단을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이틀째인 28일 회담장 밖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남측이) 만족하겠느냐”며 마치 수용 의사가 있는 듯이 말해 놓고 회담장에 들어서면 다시 “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고립 압살 책동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조(북)-미간에 풀어

야 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것.

북측은 이미 지난해 10월 평양 8차 장관급회담과 올해 1월 서울 9차 장관급회담에서 원론적 수준의 핵문제 관련 문구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켰으면서도 “이번에는 담을 수 없다”며 오히려 강공으로 나오기도 했다.

북측이 이처럼 남측 대표단에 ‘막판 타협의 기대감’을 심어주면서도 버티기를 계속하자 29일 오전 9시에 시작된 실무대표접촉을 30분 만에 끝마치고 나온 남측 대표는 “양측 입장이 분명하니까”라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다.

북측은 결국 회담 마지막날인 29일 4~5시간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뒤에야 일단 북핵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삽입하는 데 동의하고 남측과 표현 수위 협상을 시작했다.

남측 대표단의 출발 예정시간인 오후 3시를 훌쩍 넘겨가면서 밤늦게까지 진행된 공동보도문 표현 수위 협상에서도 북측은 완강했다.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국민일보

2003. 4. 30 (수)

‘核포함’ 초강경에 北 당황

장관급회담 이모저모

남북장관급회담 양측 대표단은 마지막 날인 29일 하루종일 평양에 쏟아진 폭우처럼 지루한 신경전을 펼친 끝에 30일 새벽 1시를 넘겨서야 공동보도문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비행기편을 늦춰가면서까지 공동보도문에 담은 핵문제에 대한 표현수위를 두고 새벽 1시까지 머리를 맞대며 줄다리기를 했다.

오전 10시 양측 실무대표단이 평양 고려호텔내 회담장 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만해도 표정은 밝았다. 전날 마라톤 회의에서 양측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 실무대표단은 예상과 달리 30분만에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남측 대표단 신언상 대변인은 상기된 얼굴로 “양측 입장이 분명하니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후 벌어진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에서는 남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 분위기를 주

도했다. 지금까지 ‘북에 끌려만 다닌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북측은 회담장 밖에서는 “핵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면 남측이 만족하겠느냐”고 타진해 오면서도 막상 회담 테이블에서는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남측은 핵문제가 빠진 공동보도문을 들고 서울로 돌아갈 수 없다며 버텼다. 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반드시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선언 준수’라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 남측 대표단의 주장이었다.

남측이 강경하게 나오자 북측 표정이 점차 다급해졌다. 결국 북측은 오후 2시30분쯤 핵문제를 담은 공동보도문안을 들고 왔고 오후 5시15분부터 90분 동안 양쪽 수석대표간 회의가 이뤄졌다. 이후 공동보도문의 최종 문안을 조율하는 세차례의 회의가 자정이 넘도록 진행됐다. 마침내 30일 새벽 1시20분에 시작된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양측은 공동보도문에 서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남북, 北核 대화해결 합의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핵개발 중단은 타결 못해

남북한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관련기사 4면

이와함께 오는 6월 금강산에서 양측 100명씩이 참가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고 8월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한은 29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10차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 회의

에서 이같이 합의, 6·15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통일대축전을 민간주도 행사로 개최기로 하고 이같은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문제 등을 협의할 5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일정(5월19~22일·평양)과 11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7월9~12일·서울)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우리측이 요구한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 핵개발 중단의사 표명 등에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진통을 겪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만 명시하지는 북측 주장은 8, 9차 장관급회담때 이미 나온 것"이라며 "최소한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의지 표현을 요구했지만 북측이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예정보다 하루 낮은 30일 평양 순안공항을 통해 아시아나 전세기로 서울로 귀환했다.

평양=공동취재단·김지방기자
fattykim@kmib.co.kr

국민일보

2003. 4. 30 (수)

北核 '진행되는 대화' 타결

남북장관급회담 진통끝 합의- 배경·내용

'핵개발 중단' 문구 싸고 새벽1시 넘도록 줄다리기 이산상봉등 현안은 쉽게 합의- 남북자문제 또 실패

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진통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핵개발에 대한 북측의 입장표명문제에 대해 양측은 회담 공식시한인 29일을 넘기면서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하며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우리측 요구를 북측이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북, 핵문제 입장표명 =우리측이 회담기간 내내 "핵문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표명이 없는 한 나머지 의제들에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북한 대표단 입장도 다소 완화됐다. 처음에는 "핵문제는 북·미간 논의사항"

이라고만 되풀이하던 북측은 공동보도문에 핵문제에 대해서도 표현문구 삽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표현수위를 정하는 것. 양측은 미리 작성한 상대방의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 각각 문구수정작업을 벌였으나 보도문상의 표현이 워낙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배하는 것이니 만큼 용인할 수 없다는 점, 핵개발 중단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문구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사표명도 요구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베이징 3자회담을 깨지 않고 계속 미국과 대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반면에 북측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는 입장만 피력했다. 우리측은 그정도 수준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상과정에서 "그런 문구나 집어넣어서 다른 경험사항들에 대해 합의해주면 안 그래도 비판적인 우리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이며 북측 대표단을 설득했다.

◇화해협력 시안 진전 =남북은 핵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차이를 보였으나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통일대축전 등에는 쉽게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같은 행사들이 민간차원의 인도적 관심사항이라는 데 양측의 이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오는 8월21일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북한대표단 참가도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측이 제기한 국군포로 및 남북어부의 송환문제는 북측이 "포로나 남북자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이번 회담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신창호기자 procol@kmib.co.kr

공동보도문 北核문구 사흘째 조율

■ 일정 끝낸 남북장관급회담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핵심쟁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 문제였다.

남측 대표단은 회담 첫날인 27일과 28일 오전까지는 다른 현안을 미뤄둔 채 핵 문제에만 매달렸다. 처음부터 북한 핵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동보도문에 담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채널유지 공감대로 회의 진지

북한은 "핵은 북·미간의 문제"라는 기본 입장을 좀처럼 바꾸지 않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원칙의 문제가 있었고, 또

미국과의 '큰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측과의 '작은 협상'에서 돌파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남측도 남북관계보다는 핵과 관련한 남한 내부의 여론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회담에 임한 것이다.

남측에서나 북측에서나 대외관계의 우선 순위는 남북간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라는 현실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진지했다."고 평가하면서 회담을 결렬시키지 않고, 남북간의 대화기조를 계속 유지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대축전, 북한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참가 등에 합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북한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밝힌 대로 정부는 일단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北선 盧정부 진의파와 주력

핵 문제가 없었다면 두가지 측면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번 회담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첫째, 새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이었다. 이번 회담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남북 고

위당국자간 회담이었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계속 이행할 것인가를 무엇보다 궁금해했다. 남측도 이에 대해서는 북측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번 회담은 '임동원 이후' 열리는 첫 남북회담이다. 임씨가 외교안보수석·통일부장관·국정원장 등을 지내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던 시점에는 남북장관급회담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으며, 사소한 부분들은 남측에서 양보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이전보다 훨씬 큰 재량권을 갖고 회담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남측대표단의 협상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도문기자 dawn@

南-北 '核문구' 조율 막판 신경전

장관급회담 마지막날 표정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박3일 일정의 마지막날인 29일까지 '북핵'문제로 진통을 거듭했다. 남측은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출발 시간을 연기하면서, 공동보도문 작성에 매달렸다. 남측 대표단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북핵관련 문구를 어떻게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남북은 막판까지 공동보도문에 담길 표현의 수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남측은 8차회담 때 합의한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南 '비핵화선언 이행' 내용 포함 요구 北기존입장 되풀이-비공식접촉은 지속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수준을 넘는 '비핵화선언 이행' 등 진전된 내용을 요구한 반면, 북측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언급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28일 회담장 밖에서 북핵문제를 보도문에 담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비쳐 우리측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29일엔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이중 플레이'

를 펼쳤다.

이날 실무대표 접촉을 마치고 나온 신언상 남측대표는 "양측 입장이 분명하니까..."라고 말해, 협상이 쉽지 않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북측 관계자는 회담이 잘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는 등 회담결렬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북측은 남측이 핵문제 표현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예측. 미리 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지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막

판에 합의해주고, 남측의 쌀과 비료 등 대규모 지원받으려는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남측은 또한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나 북측의 반발로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쳤다. 북측은 지난 8차 회담에서 합의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한다"는 조항 이상의 진전을 회피했다. 정부는 송환을 원하는 남북자와 국군포로가 각각 487명, 371명으로 파악하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송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미 전후 포로교환을 통해 해결한 만큼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근거가 없다"는 이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논의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점진기자 jjj@segye.com

核문제 표현수위 놓고 첨예 대립

서울경제

경추위 조속개최 합의등 대화기조 유지에 만족

2003. 4. 30 (수)

■ 남북장관급 회담 결산

북한이 핵 보유를 시인한 가운데 지난 27일부터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핵 문제 관련 내용과 표현 수위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공동 보도문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는 등 구체적인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서로 맞서며 갈등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북측의 체제 안전보장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북한도 핵개발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핵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핵문제 공동보도문 문구 이견= 남북은 10차 장관급 회담 마지막날인 29일 예정된 출발시간(오후 3시)을 늦추기며 실무대표 접촉을 계속했다. 최대 쟁점은 남북 공동 보도문에 담을 핵 문제 관련 내용과 표현 수위였다.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직답을 피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양측은 그러나 핵 문제외에 ▲이산가족 7차 상봉과 면회소 문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착공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일정 ▲11차 장관급 회담 일정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6·15 공동선언 3주년을 즈음해 갖기로 했다. 또 오는 6월말~7월초에 서울에서 11차 장관급 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착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도 조속히 열기로 합의하는 등 새 정부에서도 대화기조를 이어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북에 체제보장 요구=윤영관 외교장관은 29일 "북한은 미국이 체제 안전보장 등 북한의 요구를 수

용한다면 북한도 미국의 핵개발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에 출석, 베이징 3차 회담에 대한 현안보고와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한·일과의 협의와 북핵측 발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이 제시했다는 '새롭고 대담한 제안'의 내용에 대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체제보장문제와 미국측이 주장해왔던 핵 폐기 문제 등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북쪽의 아이디어"라며 "북한이 자기들 주장을 열거하면서 미국에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미국이 만족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측의 관심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평양=공동취재단

'核문구' 앞치락 뒤치락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은 28, 29일 양일간 한차례 전제회의와 두차례씩의 수석대표, 실무대표 접촉을 갖는 등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광범히 맞섰다. 이에 따라 북측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회담 결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문제 보도문구 놓고 '앞치락 뒤치락' =우리측은 회담 마지막날인 29일 평양 출발예정시간(오후 3시)을 연기하면서까지 "북한의 핵보유가 지난 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위반으로, '비핵화 공동선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공동보도문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북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전날 회담장 밖에서는 핵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내용을 보도문에 담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비쳤다. 그러나 북측은 하룻밤 사이에 입장을 바꿔 이날 아침엔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며 이를 대화로 풀어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회담장에서 나온 남측 회담관계자는 "북측이 마련한 보도문에도

출발 늦춰가며 조율 회담 결렬 가능성도

핵문제가 담겨 있다"면서 "그러나 북측 보도문의 핵문제와 관련된 표현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 관계자는 "북측이 보도문 조율을 위한 연락관을 우리측에 보내 와도 알맹이가 없으면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등 교류협력문제 잠정합의=남북은 이산가족상봉 등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핵 문제 타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산가족상봉 등에 대한 합의는 물거품이 된다.

남북은 우선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6·15공동선언 3주년을 즈음해 갖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남북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통일대축전'을 올해도 개최하기로 했으며 오는 8월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대표단 참가문제도 의견집근을 봤다.

남북은 이외합계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행사와 개성공단 착공식을 조속히 치르기로 했다. 양측은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제11차 장관급 회담 일정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장관급 회담의 경우 6월말이나 7월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한국경제

2003. 4. 30 (수)

남북 '核평화해결' 협력

장관급회담 6개항 공동보도문...6월15일 이산상봉

6·15공동축전·北 U대회 참가

■ 남북은 27-30일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같은 회담결과는 북한이 핵보유 사실을 시인하는 등 북핵문제가 가파른 국면으로 치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북의 핵무기 보유 시인 발언 전인 지난 8, 9차회담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어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나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북은 예정보다 회담일정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1시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과 북측대표인 김영성 내각참사 등 대표단이 참석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6·15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6·15 공동선언 3주년 민족통일대축전 개최 및 8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측 선수단· 응원단 참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 및 개성공단 건설 착공

공동보도문 6개항

- ① 6·15 공동선언 철저 이행
- ② 핵문제 평화적 해결 협력
- ③ 통일대축전 정례화 지원
- ④ 남북 협력사업 적극 추진
- ⑤ 이산가족 문제 해결 추진
- ⑥ 제11차회담 7월 서울개최

식, 금강산관광 사업·인도주의적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개최(5월19-22일, 평양) ▲7차 이산가족상봉(6월15일, 금강산) 및 이른 시일내 면회소 착공식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7월9-12일, 서울)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 귀국보고회에서 향후 남한의 다자회담 참여와 관련, "진행중인 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우리가(참여를) 제의했으나 북측에서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있어 남측은 이 문제

에 법적으로 말할 권한이 있고 현실적으로 핵문제와 관련해 안보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다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북측에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귀국 직

후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 회담과정 및 성과에 대해 보고한 뒤 이날 오후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을 상대로 회담결과를 보고한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kr

문화일보

2003. 4. 30 (수)

世界日報

2003. 4. 30 (수)

'核' 보도문 표현싸고 진통 南대표단 귀환 하루연기

평양 장관급회담

남북은 제10차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9시부터 평양 고려호텔에서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공동보도문에 담긴 북핵관련 표현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계속했으나, 의견접근을 보

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측 대표단은 서울귀환을 예정보다 하루 늦은 30일로 연기했다. (관련기사 8면)

남측은 회담 첫날인 지난 27일부터 핵문제의 공동보도문 명시 방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29일 오후 보도문에 명시하는 데엔 합의했으나, 이후 핵문제 문구 수준을 놓고 이날 5차례 접

촉을 벌이면서 씨름을 계속했다.

남측은 공동보도문에 '쌍방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표현을 넣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지난 8, 9차 회담 때 사용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노력한다'는 원론적 표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핵문제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6·15선언 3주년에 맞춘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민간행사 위주의 통일대축전 개최, 8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의 북측 대표단 참가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진·송민섭기자

“북핵 평화해결 위해 협력”

정 통일 “북, 한국 다자회담 참여 부정 안해”

10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평양공동취재단·연재호 기자
news21@naeil.com

남북은 30일 평양에서 열린 10차 장관급회담에서 각종 교류협력과 경협사안의 추진에 합의했으며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29일 낮부터 밤을 넘겨가며 다양한 방식의 협상을 가진 끝에 30일 새벽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 이를 발표했다.

오늘 새벽 서울로 귀환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삼청동 남북대화 사무실에서 귀국 보고회를 갖고 한국의 다자회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참여를) 제의했으나 북쪽

에서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며 “진행중인 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보고회를 마친 정 장관은 곧바로 청와대에 들러 노무현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를 보고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오는 6월 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7차 이산가족상봉단 교환행사를, 남북 당국의 지원 아래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각각 갖기로 합의했으며,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8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남측 당국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와 개성공단 착공식 문제, 금강

산관광사업문제, 동포애와 인도주의 문제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며, 5차 남북 경협추진위원회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또 11차 장관급회담을 7월9일~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보도문 타결이 늦어진 것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 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어떤 표현으로 담느냐 하는 것이었다. 남측은 당초 공동보도문 초안에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등 지난 8·9차 회담 때보다 진전된 표현을 담자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은 지난번

향후 남북관계 주요일정

시 기	주 요 일 정
5.19~22	경제협력추진위원회 5차회의(평양)
6.15(예정)	6.15민족통일대축전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7. 9~12	11차 남북장관급회담
8월	하계유니버시아드(대구)

수준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오늘 새벽까지 진통을 겪었다. ▶관련기사 4면

29일 오전 한 차례의 실무접촉을 마친 후 4~5시간 동안 남측은 핵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하며 북측 연락관에게 “알맹이 없는 내용이면 오지도 말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남측 회담관계자들은 이번 공동보도문에 ‘한반도 핵문제’란 표현을 사용해 북한 핵문제임을 분명히 한 점,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 표현을 명시한 점 등이 지난 회담보다 진전된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문화일보

2003. 4. 30 (수)

핵문제 명시 ‘南달래기’ 상징적 수준

■ 남북 공동보도문 의미와 한계

■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다. 새정부 들어 단절됐던 당국간 남북교류의 복원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북핵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예전의 장관급 회담보다 격차가 추후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남한도 핵당사자로 인정

공동보도문에 핵 문제를 명시했다거나 남한도 북핵시대의 당사자임을 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남북이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는 2항에는 나름의 중대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 북한이 남한도 핵문제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양자가 대화의 주체 및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 임한다는 ‘계속성’을 담보받았기 때문이다.

‘非核선언’ 준수 못끝내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서 강조한 점도 이 대목이다. 정 장관은 나아가 향후 회담에서 남측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선언상 회담 대변인도 ‘최근 핵상황의 심각성과 북한 태도에 비춰 볼 때 핵문제를 남과 북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한 자체는 상당히 진전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지난 8차, 9차 장관급회담의 공동합의문과 같

적으로 다른 점이 ‘계속성’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심오한’ 해석과 달리 향후 진행되는 핵관련 회담에서 남측의 참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는 공허한 문구에 그칠 공간이 크다. 3차회담에서 남한을 배제한 대 경제협력을 갈망하는 북한이 ‘상징적으로’ 남측을 달래는 수준에서 명시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시인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장관급회담은 예전과 비교할 대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출발한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년과 비슷한 합의만 이끌어 낸 것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핵 문제는 사인의 심각성에 비해 회담 건립을 무뎠뜨려도 북측으로부터 보다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핵보유가 사실이라면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인 데도 남측은 사실적인 언급 유감표명이나 사과 등 일언반구 얻어낸 게 없다. 사실 북측이 핵보유의 모호성을 바탕으로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진량이었다. 하지만 김부로선 ‘비핵화 선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문구상임을 마지 노선으로 설정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다.

교류협력 분야는 금진전

교류협력 분야에서만은 상당한 금진전으로 평가된다. 남과 북 모두 핵문제와 교류협력 분야 대응한다는 두트랙 전술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들어 처음 열린 교류급 회담에서 교류분야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비교적 원활하게 의견교환을 이룬 점은 남북관계를 통해 핵문제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전략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현기자 jupiter@

사 설 · 칼 럼

사설

장관급회담 또 무산시킨 북한

북한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오늘 열릴 예정이던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무산시키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런 이중적 행태가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든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대미 설득에 진력하면서 국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반해 북한은 오로지 쪽박을 깨려는 듯한 자세다.

북핵 사태가 위중할수록 남북은 공식 대화를 가동,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그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해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미국도 그 점에서 남북대화의 지속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남북회담은 남쪽의 신경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간 첫 상견례라는 의미가 있다. 신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는 물론 북핵 사태의 해결방안도 제시될 중요한 협의의 장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5일 민족간 공조를 위한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놓고 장관급회담을 거부했다. 앞뒤가 안맞는 행태다. 남쪽의 군사훈련과 대북송금 특검

등이 대화 분위기를 해친다고 본다면 이를 회담 거부 명시적 이유로 제시하거나 회담에 나와서 따지는 것이 정도(正道)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깬다. 이러한 북한의 고질병은 대북 불신만 증폭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남북 공조를 하자면서 남쪽을 이처럼 무시하는 행태가 대북 문제를 전진적으로 풀려는 신정부의 운신의 폭만 좁힌다는 것을 직시, 즉각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북측의 무례한 자세에 항의성명조차 내지 않더니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북측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그렇다면 신정부의 대북 노선도 김대중 정부의 그것처럼 굴신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런 자세로는 정부가 아무리 북핵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다 한들 우방은 물론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도 북한의 부당한 자세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한겨레

사설

불만 있어도 대화는 계속해야

7일부터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던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북한은 회담에 따른 실무접촉을 하자는 남쪽 제안에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첫 번째가 될 정부-당국 간 회담이 이런 식으로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은 노 정권이 들어선 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계획대로 진행하면서도 당국 회담이나 일정은 계속 미루거나 피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에 열릴 예정이던 남북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와 3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을 연기시키고, 31일 예정이던 역사적인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식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다. 대북송금 특검법 도입에 이어, 이라크전 파병 결정과 한-미 합동훈련 등 새 정권 들어선 뒤 계속되는 '비우호적' 조치에 대한 불만 표현일 터이다.

우려되는 것은 대북송금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쪽과 관련한 민감한 사실이 공개되거나, 이라크전이 일찍 종결돼 미국이 북핵 문

제에 강공책을 펴는 쪽으로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럴 경우 북한이 노무현 정부와의 회담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는 장기간 동결 내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양겨 있는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특검법을 수정·완화함으로써 북한의 불신과 우려를 씻어내는 일이 우선 긴급하다. 그 래야 북한이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고 회담 테이블에 나올 분위기가 조성될 터이다.

북한도 남북 당국 대화의 지속이 현시점에서 심각한 북-미 관계를 푸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무런 사전통고 없이 회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구태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새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에 대한 명백한 결례이며, 남북관계가 흔들림 없이 진전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남쪽 동포들을 실망시키는 처사다.

사설

남북간 대화복원 시급하다

북한어 핵문제에 대한 '다자(多者)회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북핵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좋은 진전'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중국 등 주변국들도 역할을 모색하는 움직임이다. 다자회의가 성사될 경우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나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북·미 간, 남북간, 한·미간, 주변국간 사전 정치작업의 결과와 향방을 가능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선(先) 핵포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대립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다. 일괄타결 방식이 최선이지만, 북·미가 자기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관찰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수단으로 다자회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변국간의 이해가 엇갈려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신뢰를 구축

하기 위한 가시적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중단된 남북 당국간 대화부터 재개돼야 한다. 경험실무회의와 장관급회담 등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대화채널을 복원시켜야 한다. 남북이 주도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어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지적했듯 핵문제는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핵심 당사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양측의 명분싸움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남북간 대화, 국제사회의 중재 조정을 통해 북·미 쌍방에 명분과 퇴로(退路)를 만들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북핵문제는 북·미 양측이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해결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한이 먼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 뒤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명분 있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없을 것이다.

대한매일

2003. 4. 17 (목)

사설

남북대화 북핵에도 도움된다

북핵 다자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대화 재개가 주목되고 있다. 남북대화 채널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 모두 단절됐다. 각종 경험 실무 접촉도 열리지 못해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료 20만 t 대북 제공' 용의를 밝힌 것은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희망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적절 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남북대화 재개 의사를 밝혀야 한다. 북핵의 대화 기류를 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대화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북핵 다자회담은 그 성격상 장기화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대비해 중개 역할을 할 남북대화 창구를 열어 놓아야 한다. 북한은 체제보장 문제 등을 다자 틀 속에서 대미 직접대화로 담판지으려 하겠지만, 남한을 배제

하고는 효과를 낼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북핵 다자회담이 처음에는 북·미·중 3자회담 형식으로 열려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자대화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한국이 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효율성 차원으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선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이 대북 지원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자회담은 진행 과정에서 경험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문제는 러시아가 참여해야 하므로 중국에는 6자회의 형식을 띠게 될 것이다. 결국 주변국 모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북한관 마셜 플랜' 등 대북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어, 북한이 남북대화를 잘 활용하면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를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남북대화 재개 계기 삼아야

북한이 엇그제 우리 쪽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쌀과 비료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몰염치'에 분개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다자대화 틀에 한국이 빠진 것이 북한의 요구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자존심이 극도로 상해 있던 터에,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으니 좋은 반응을 보일 리가 없다.

이 바람에 정부도 매우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인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 요청을 마냥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악화된 국민 감정을 무시한 채 선뜻 받아들이기도 꽤 부담스러울 것이다. 정부는 3차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과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대북지원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할 방침인 모양이다.

우리는 '민족 공조'를 운위하면서 정작 한반도와 온겨레의 장래가 걸린 다자대화 틀에 직접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시킨 북한의 이중성과 근시안적 접근을 비판해 마지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인도주

의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다른 조건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대국적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최근 유엔아동 기금(유니세프) 북한주재 대표가 영양실조에 걸린 약 7만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6월까지는 사경을 헤맬 것이라고 전할 만큼 북한의 식량사정은 다급하다. 또 비료는 시기를 놓치면 지원하지는 보람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그것대로 적기에 추진하되, 북한과 관련국들을 설득해 다자 대화에 한국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외교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뚜렷한 길일 터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북 지원을 위한 실무회담을 조속히 열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된 각종 남북 회담 채널을 재가동하는 편이 현명하다. 북한이 비록 시기는 잘못 선택했지만 이번에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한 것도 남북대화를 재개하자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 봐야 한다. 이를 마냥 북한의 몰염치로 몰아붙여 모처럼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일보

식량·비료 안 줄 수도 없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다자간 협상에서 남한 배제를 끝까지 고집했다는 북한이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을 내세우며 남한에 대해 식량과 비료 지원을 요청했다. 하긴 조선적십자회가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것인 만큼 당국간 회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민관(民官)을 구분하느니 할 의미가 없다. 남한의 다자간 협상 참여를 거부한 측도, 적십자를 통해 식량·비료 지원을 요청한 것도 북한 당국이라는 뜻이다.

북핵 문제 협상에서 남한을 배제한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는 정전협정 당사국 간에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측이 당국 간 교류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따보기 위해 식량 등의 지원을 요청했을 수 있다고 일각에선 분석한다.

백번 양보해서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남한에 대한 태도가 해명되고 용인

될 것은 아니다. 국가 간 또는 당국 간에는 일방적인 관계란 성립할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끝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면 언젠가는 순응할 것이라는 희망은 국가나 체제 사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물론 북한 당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곳의 거래를 도와야 한다. 우리가 형편이 아주 어렵다면 물라도 여력이 있으면서 그들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식량을 지원하면서 이것 저것 조건을 붙이거나 주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그 자체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

이 모두를 감안한다 해도 북한측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남한을, 이용의 대상이긴 하되 상생의 파트너로는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털어버리기가 어렵다. 식량도 비료도 주긴 줘야 한다. 그러나 전략이 없이 정서만으로 베푸는 아랑과 선심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념할 일이다.

社說

장관급 회담, 응하긴 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했던 장관급 회담을 27일 부터 열자고 제의한 것은 그들의 전형적인 이중성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베이징의 북·미·중 3자 회담에서는 남한을 제외하면서도, 식량과 비료는 지원받아야 할 형편임을 말해준다. 또 영변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핵 위기를 고조시켜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잡으려 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새 정부 출범이라는 달라진 환경과 이라크 전쟁 종결 후 미국의 대북태도 완화 등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도 여전히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남한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체면은 세워야겠고, 미국이 겁나지만 벼랑 끝 전술은 포기할 수 없다는 어정쩡한 이중구조를 시정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북한은 장관급 회담 개최일을 일요일인 27일로, 기간도 3박4일이 아닌 2박3일을 제의했다. 회담성

과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이 마지못해 제의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북한은 3자 회담에서 남한이 배제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대한적십자사에 요청한 쌀과 비료의 지원이 불확실해지자 공여지력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지원요청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간 제반 현안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북한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이는 쌀·비료 지원은 차관공여 형식인 만큼 북한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됐다.

정부는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핵 협상서 남한을 배제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 항의해야 한다. 말로만 민족공조 운운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대북 지원은 그 다음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社說

남북장관회담, 심심하면 열리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던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오는 27일 평양에서 2박3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 북한 핵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인 남한의 참여를 반대해 놓고 뒤늦게 장관급회담을 제의한 것은 불쾌한 일이다.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 당국자간 대화는 시급하다. 감정을 삭이고 핵위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장관급회담은 3자회담 개최 직후로 예정돼 있어 3자회담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재처리' 발언으로 미국내 대북 강경론이 득세할 경우 3자회담은 처음부터 파행이 우려된다. 3자회담의 순조로운 출발이 중요하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자제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선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쌀·비료 지원은 별도지만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경원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문제 등 대부분 현안이 핵문제와 연계돼 있는 만큼 핵문제 논의 없는 장관급회담은 전혀 무의미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폐기 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복귀만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체제를 보장받는 길임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장관급회담이 10차를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대내외적 돌발변수에 의해 개최여부가 영향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북한이 결핍하면 이유없이 회담을 연기·중단시키는 상황에서 남북간 신뢰가 구축되기는 어렵다. 북한에 끌려다니는 회담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도 없다. 차제에 당국자회담을 정례화시키고 회담장소도 판문점으로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

첫 당국자회담의 과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당국자 회담인 남북 장관급회담은 노무현 정부와 북한간 향후 5년의 관계를 시작하는 회담이다. 그만큼 남북이 상호 믿을 만한 상대로서 남북 공동의 문제를 함께 푸는 협력자, 당사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새정부와 북한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호신뢰를 쌓을 만한 충분한 시간도 여유도 없이 북핵문제라는 심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게다가 북한은 베이징 3자회담에서 남한을 배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쌀·비료 지원을 요청,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북한과 '좋은 출발'을 바랐던 노무현 정부로서는 매우 곤란하고 불편한 북한과의 첫 대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분명한 원칙으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북핵과 대북지원같이 항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갈 때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우선 북핵문제에서의 남한 배제가 안정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얼마나 큰 장애를 조성하는지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북핵과 남북관계 분리대응이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납득시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정부 대표가 북측 고위급 인사를 따로 만나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쌀·비료 제공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성격이므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모든 현안을 서로 연계시키기 시작하면 오히려 뒤엉킬 수 있다. 그동안 북핵위기시에도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되었던 만큼 '포용 대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社說

'核철회'없는 교류-협력 안된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장관급회담이 북핵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북한측에 큰 책임이 있다.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 발언을 한 이후 북핵 위기가 새로운 단계를 맞은 상황에서 남측이 북핵문제를 최우선의 현안으로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3자회담에 한국의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 거론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 교류·협력이 진전되기는 어렵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관계가 흔들리고 추가폭락 등 경제불안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북핵의 안개가 걷히지 않는 한 금강산관광이나 경협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일이다. 북측은 남측의 경제지원을 요구하기 앞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데 대해

확실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이번 회담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회담으로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능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북측으로부터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핵계획의 포기를 반드시 약속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화 유지' 자체에 급급해 북한에 끌려다니는 탓에 오히려 남북관계의 왜곡을 초래했다. 이전 당당한 자세를 갖추기 바란다.

대북정책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이라는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급한 안보현안인 북핵문제에서 어정쩡한 태도는 안된다. 이번 회담도 종전처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식의 합의문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다.

社說

북, 핵문제 입장 분명히 해야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북한의 핵 보유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은 베이징의 3자 회담에서 미국 측에 핵 보유 사실을 밝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서도 남북회담 석상에서는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이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에 남한을 배제해 큰 실망을 안겼던 북한이 장관급 회담에서도 남한을 논의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에는 어떠한 합의도 가능할 수가 없다.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제조약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남한과의 명문합의를 명백히 어겼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이틀간 회의에서 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북한은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핵 문제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남한을 부수적 상대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갖고는 남한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바라는 회담에 동조를 얻기가 어렵다. 핵 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장래를 건 최고의 국가전략이자, 남한 역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를 한 발짝도 진전시킬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를 세계의 위기로 대처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해결까지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하겠지만 문제가 모두 드러나 있다는 점은 오히려 해결의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공조에 치중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했고, 미국이 여전히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문제에 대한 북한의 확실하고 현명한 자각이다.

문화일보



사설

북핵과 남북장관급 회담

■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진통 끝에 6개월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오늘 새벽에야 마무리됐다. 이번 회담은 노무현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보유발언' 파문 후 처음 열려 그 결과가 주목됐다. 어려운 상황에서 회담이 결렬없이 마무리돼 다행이지만 만 미흡함도 지적된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항은 북한핵 문제였다. 베이징의 3자회담에서 있던 북한의 '핵보유 발언'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에 충격을 몰아왔기 때문이다. 회담의 최대 쟁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공동보도문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지난번 장관급 회담 때의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보다 한발 앞선 것이라는게 정부측 시각인 것 같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의 핵문제임을 보여줬고, 남한이 핵문제의 한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됐을뿐 아니라, 핵문제 논의 과정에서 남한의 핵우려가 북한에 충분히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보유 발언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미흡한 것은 분명하다. 더욱 핵문제에 가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논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7차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참가 및 추기일정 합의 등 기타의 문제에 대해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잘된 일이다. 앞으로 북핵문제에 관해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